

R1.1.8

# 인권하루소식

합본8호  
(97년 상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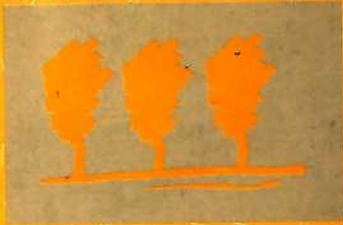


인권운동사랑방

합본8호 (97년 상반기)

R1.1.8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97년 5월

(제875호 - 제895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1일(목)  
제 8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국적법에서도 차별받는 외노

###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91년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 체류 이래, 아직도 외노들은 산재·임금·구타에 따른 피해구제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에 따르면 외노수는 21만4백94명이다. 10여 년 이상 급속도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1천명의 커풀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는 곧 한국국적을 취득

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적법 3조 1호).

그러나 후자의 경우 결혼당사자인 외국인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그의 의사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동거인에게서 태어난 사생아가 될 뿐이다.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초등학교 입학등은 할 수 없다. 법무부측이 자녀의 경우 특별귀화 신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극히 일부만이 해당할 뿐이다.

손광운(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대표) 변호사는 4월 29일 열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개소 1주년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국적법과 외노의 결혼문제를 제기했다. '국적법에 있어 남녀차별은 설득력이 없으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

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법 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 이미 우리나라는 85년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으며, 95년 12월 현재 1백44개국에 비준했다. 이 국제조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여성에게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적확인소송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독일(1974)이나 일본(1977, 1978) 등에서도 소송을 통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 철거민연합 간부 3명 중상 전문 철거강패에 폭행당해

이태교 서울지역철거민연합 의장이 철거강패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에 따르면, 29일 저녁 7시경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 철거민들을 상대로 '철거대책 설명회'를 갖던 중 이태교 의장이 철거강패들에게 맞아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박기호(행담동 철대위 위원장), 김홍배(도원동 철대위 조직부장) 씨도 뇌진탕과 장파열 증세를 보여 길음병원에 입원했다. 전철연은 "철거강패들이 설명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를 했으며, 고의적으로 간부들을 폭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도원동 재개발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시공업체는 삼성건설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동원된 철거용역들은 적준용역회사(대표 정수중) 소속으로 알려졌는데, 이 회사는 95년 '봉천동 철거민 전 아루개 씨 성폭행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와 KNCC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및 예정총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당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 공청회」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에 대한 법무부 관계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문장식 목사가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삼중 스님이 사례 및 체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한국지부는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형사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결(찬성 7명, 반대 2명)로 합헌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정서상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지만, 사형폐지에 관한 국민의 정서가 성숙될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결의안이 찬성 27, 반대 11표로 통과되었는데, 한국정부는 반대 표를 행사했었다.

### <인권하루소식> 97년 4월분 총목차(854-874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854	4/1	1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민주여성 합본호 발간, 87-97년 한국 여성운동사/주요공판안내
		2	동티모르 독립요구 33명 전원 연행, 유엔특사에 6개항 요구서 전달/전국연합 논평, "대북 식량지원 허용 환영"/국제앰네스티 인턴 모집/주간인권호름(3월 24일부터 30일까지)
		3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855	4/2	1	경찰, 민병일 씨 장례행렬 저지, 사건발생 두달째 검찰 수사 진척없어/민병일씨 사건일지/서래스님 안기부 구급, 회합·통신, 기밀누설 혐의/정부 북한돕기 직접 나서야' 민변, 청구단일화 폐지 요구
		2	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하이델 포커스 <핫 앤 콜>, 인권하루소식 게재
856	4/3	1	경기여성상 "사법처리가 능사", 교사·학생·학부모 고소고발 당해/경기여성 사건일지/장기수 진대 윤 씨 운병
		2	제네바소식③ 제 53차 유엔인권위-"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857	4/4	1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 129일째, 이사진 교체 통한 학교 정상화 요구/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2	'유럽노조' 건설을 위한 첫발, 영국GMB 독일 IG Chemie 조합원자격 공동인정/과거청산국민위, 4·3제주항쟁 진상규명 촉구/<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858	4/8	1	"안기부 가족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경기여성 파행수업 지속, 학생측 "정상화대책 없어 등교 거부"/주요공판안내
		2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위 등 주장/고 유학생 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주간인권호름(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3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곽노현 방송대 교수)
859	4/9	1	페스카마호 살인범 돕기운동 전개- 중국동포의 집, 영치품·가족 입국 위해 모금 벌여/전학련 회원 12명 연행/국제앰네스티, 박창희·김하기 씨 석방촉구/고문에 망가진 인생과 아무도 믿지 않은 진실-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보고사례
		2	제네바소식 ④ 제53차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860	4/10	1	고려대 총학생회, "조선일보의 음해", 전총협 추진·한총련 회비 거부 등 사실과 달라/전학련 "이적단체 가입죄", 회원 11명 장안동 분실 조사/행사와 동정
		2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⑦- 아브라함의 집(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 이동숙 씨-범죄자의 평범한 삶 마련에 보람을
861	4/11	1	통일을 향해 한민족의 마음을 모으자,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식 열려/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 "굶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2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싸슬이, 지난달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인권영화 ③ 다민족의 공존문제를 다룬 "몬스타"
862	4/12	1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입국비용도 없어/황장엽 망명 내년으로, 재야인사 21명 요청
		2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 "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면제"/새책 소개, 『5·18연구』 『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63	4/15	1	페스카마호 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인터뷰> 조봉(조선족 변호사,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 "2백만 조선족 등 돌리려면 사형선고하라"
		2	사민청 6명 국보법 구속, 비상대책위 활동 발미/대전충남연합 성명, "전·노 사면권 국민에게 있다"/주간인권호름(4월 7일부터 13일까지)
		3	<인권시평> 살맛나지 않는 세상(김동한 광주여대 교수)

### <인권하루소식> 97년 4월분 총목차(854-874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864	4/16	1	대화가 서점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원진 직업병 환자 24번째 사망, 원진전문병원 설립 협상 결정/<현장방문>원진 직업병 환자 입원한 서울기독병원
		2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865	4/17	1	원진 직업병 환자 농성 장기화, 16일 조병수 씨 장례식 치뤄/페스카마호 사건 피고인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 "사고 소식에 빗 독촉 빗발/고 유학생 씨 국립묘지 안장 규탄시위/안기부 북한돕기 모금 방해- 전국연합, 직권남용 비판
		2	제네바 소식 ⑤ 4월 2주째- 분쟁지역 아동·아동매매춘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866	4/18	1	도심 속에 갇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사면논의 절대 반대",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민변, 『새 노동법 해설』 발간
		2	경찰, 시위학생 총상 은폐 물의/서점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도 이적표현물 혐의/<현장스캐치>장애인들의 경복궁 나들이
867	4/19	1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김 대통령은 사면 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페스카마호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인"
		2	시위학생 총상, 경찰 조준사격 탓- 천안경찰서 "근무수칙 지켰을 뿐"/<성명서> 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868	4/22	1	민언협, 동아일보 규탄 시위- 동아일보 18일자 사실 '전·노 사면' 주장/경기여성 파행 7주째, 교사·학생 "이제 지쳤다"/전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성명, "황비서 망명, 민족화해의 장애물이 되지말라"
		2	경찰,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 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사회복지정책의 실태 세미나/주간인권호름(4월 14일부터 20일까지)
		3	<인권시평>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관심(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869	4/23	1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주요공판안내
		2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인권영화 ④ 제르미날-프랑스 노동자들의 피맺힌 함성
870	4/24	1	통신에서 꽃피는 동포사랑운동, '북한동포돕기 999운동'에 동참 호소/사회단체 회원 연행 잇따라, 노정연 회원 4명 등 20일새 24명/권 부총리 발언 근거대라' 국민회의, 황장엽 리스트 관련 논평/여성계 717명 서명, "정부 즉각 북한식량 지원을!"
		2	<자료 요약> 한국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김창엽 서울대 의대 교수)- "자본주의적 방식이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871	4/25	1	"통제?"... "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2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872	4/26	1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자작선 등 이적성 없다'/서울대 학생연대 13명 연행, 국보법 7조 위반 혐의/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국보법 위반 1년 6월 선고
		2	"시민의 공익, 시민 스스로 지킨다",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한권의 책 『법은 무죄인가』
873	4/29	1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 돌입, 황풍 우러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97년 주요 국보법 사건/김세진 열사 11주기 추모예배/주요공판안내
		2	황장엽 망명에 얽힌 의혹을 풀다, 통일시대국민회의 월례토론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주간인권호름(4월 21일부터 27일까지)
		3	<인권시평> 물질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곽노현 방송대 교수)
874	4/30	1	살상도 불사한 시위진압, 직격최루탄 맞고 전남대생 두개골 함몰/<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2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및 내부부 주장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2일(금)  
제 8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공포에 짓눌리는 철거민

### 용산구 산천동·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폭력 극성

철거폭력에 시달리는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강제철거에 들어간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 재개발지구의 6가구 주민들은 "철거구역원들의 폭력과 협박, 감시 속에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산천동 재개발지구에선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 15일 등 세 차례나 원인모를 방화가 일어났다. 이주를 거부하고 철거투쟁을 벌여온 주민들의 집만 골라서 일어난 방화였다. 따라서, 주민들은 방화가 용역직원들의 소행임을 확신하고 있다. 최순욱(45) 씨는 4월 2일의 방화로 "집은 물론 가재도구도 모두 불타버렸다"고 밝혔다.

#### 방화에 폭행, 성추행까지

철거반원들의 폭행은 이미 예사로운 일이다. "지난달 4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용역반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설춘심(50) 씨는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설 씨에 따르면, 용역직원들은 쇠파시로 설 씨의 머리를 짓누르면서 "눈구멍을 파 버리겠다" "머리에서 피뿔을 보겠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험한 욕설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설 씨의 바지를 벗겨버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김연철(41) 씨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의 집을 철거하려던 용역직원들에게 저항하다 집단구타를 당해 6주째 병상을 지키고 있다.

박명순(49) 씨는 집뿐만 아니라 생계 수단이었던 식당마저 빼앗긴 경우다. 박 씨는 "어느날 갑자기 포크레인을 동원한 용역직원들이 가게와 생가를 모두 부숴버렸다"며 "우리는 공포속에 살고 있고, 이곳은 지옥"이라고 말했다.

이곳 6가구 주민들은 예닐곱 평 남짓한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고 있다. 철거반원들에 대한 공포때문이다. 가옥은 물론 가재도구까지 모두 잃어버린 김형식(57·행상) 씨는 "용역직원들이 전기·수도를 끊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때려부셨으며 매일같이 감시와 폭행, 폭언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또 철거용역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었다.

#### 밤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위협

오는 8월말이면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될 예정인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도 이미 공포의 기운은 감돌고 있다. 지난 4월 29일엔 이 지역을 방문한 서울지역철거민연합 간부들이 철거강패들에 의해 집단구타당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같이 폭행을 당한 한 주민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더 끔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안 아무개 씨는 "밤마다 문을 두드리고 집에도 들을 던져대 불안하기 그지없다. 낮에도 한 두 사람씩 마을을 배회하며 철거대책위원회 사람들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도원동 상가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승남(54·전과상) 씨는 철거용역으로부터 "철거민연합에 가입하면 죽을 줄 알라"는 등의 공갈과 위협을 받았다

이 씨는 "아직까지 조합측에서 아무런 이주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초조해 했다. 산천동 주민들이 이주를 못하는 까닭도 "이주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산천동 재개발조합측은 주민들에게 세대당 2백50만원에 두당 50만원의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김연철 씨는 "그 비용은 현상유지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대로 즉, 재개발법에 명시된 대로 가수용 단지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측은 "가수용단지를 절대 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 노조설립 저지 안간힘 민노총, 부당하고 철회등 촉구

4월 30일 민주노총은 삼성그룹측이 노조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89년 노조결성을 주도하고 삼성중공업 창원1공장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을 자낸바 있는 이재용(38) 씨를 부당해고시킨데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삼성측에 전근대적인 무노조정책을 포기하고 이재용 씨의 해고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지로번호: 7618848**

### 행사와동정

- <토론회> 경제위기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 때: 5월 2일(금) 저녁 6시 · 곳: 송실대 사회봉사관 1층
  - 주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 항의 집회
  - 때: 5월 7일(수) · 주최: 민주노총
- 유가협 상근 간사 모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상근 실무자를 찾는다. (문의: 764-1684 719-9642)

##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1일 민주노총 주최로 제10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97년 임단투 승리' '재벌경제 타파·부정부패 척결' '사회개혁 정책' '교사·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투쟁목표로 내걸고 2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충단공원에서 낮 1시부터 진행되었다.

본 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2시경 동대입구 지하철역에서 전경들과 백골단이 장충단공원으로 나오는 출입구를 봉쇄한 채 대회참가 대학생들을 막아 한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전경들은 대학생들에게 "노동자집회에 학생들이 왜 오냐"며 일부 학생들을 강제로 되돌려 보냈다. 조형진(서울대 외교학과 95학번) 씨의 경우 2번씩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당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경찰측이 조 씨를 강제연행하려다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삼미특수감 노조 선봉대 20여 명이 항의하자, 경찰이 곤봉을 마구 휘두르는 등 대학생 대회참가를 물리싸고 30여 분간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 강력한 임단투, 교사·공무원 합법화 결의

오후 2시 45분경 깃발입장으로 본 대회가 시작되었다. 권영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를 내세워 임금동결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경제위기는 허구적이다"며 "임금동결을 단호히 거부하며 더 강도높은 임금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권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시비 거는 데는 없다. 또 교사·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 "밥·사랑이 되어 달려가자"

이어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었다. 허장 통일위원장은 4월 30일 현재 2억7천6백여 만원이 모금되었고 이를 5월 10일 북한동포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장 통일위원장은 "민족적 재앙 앞에서 이념·사상·체제를 뛰어넘어 밥이 되어, 사랑이 되어 달려나가자"며 민주노총 50만 조합원들이 1끼 모으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분단상황을 이유로 북한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

### 「6월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6월 민주항쟁 10년!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연락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6월민주항쟁주인창기 운동본부에서는 '6월의 사람들' 동록운동, 6월항쟁 참가자 '만남의 광장' 설치운영, 6월항쟁 참가자 인명사전 편찬, 현대사 사적지 순례단 모집, 국민대통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7320-610)

와 기업의 행위를 규탄하며 당장 북한동포돕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국제엠네스티 노동절 성명

국제엠네스티(AI)는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정부를 비롯한 37개국 정부측에 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 노동쟁의조정법 내 제3차 개입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AI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 또는 심지어 살해되는 세계도처의 인권침해 사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약을 중심으로 본 아이들의 인권" 어린이·청소년연대회의, 출판기념회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엔(UN) 인권기준에 비추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조명한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95년부터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민간보고서 사업을 꾸준히 벌여온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등, 연대회의)의 사업 성과물이기도 하다. 연대회의는 2일 오후 7시 혜화동에 위치한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연대회의가 엮은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에는 조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4개의 해설논문과 조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담겨 있다.

제1부 '청소년의 인권과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에는 △청소년 인권상황과 제언(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해설(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조약 및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연구(노혜련 송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조약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실렸다.

제2부에는 정부 최초 보고서와 민간단체보고서를 비롯해 96년 1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1차 회기 관련 자료들이 실렸다(2백70쪽, 가격은 7천원).

한편,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가 채택하여 이듬해 11월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 수는 1백90개 국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지닌 국제인권조약이다. 정부는 91년 12월 20일 조약을 비준했으며,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주문: '내일을 여는 책' 707-383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지난 91년 한국정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조약)」에 가입했다. 과연 정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노력을 어느 만큼 진척해 왔는가를 평가하기에 앞서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선행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2일 “아동권리의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아동권리학회(회장 이재연, 숙대 아동복지학과) 창립기념 학술대회에는 2백여 명의 관련학과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발제와 토론에 덧붙여 조약을 직접 가르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이 주목을 끌었다.

이기범(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 실무대표, 숙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원리와 이행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조약에 보장한 아동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짚어 보았다.

아동들은 왜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교육은 개인이 자신에게 합당하게 부여된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 이기에 기본권”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아동의 권리가 우리 교육과 관련하여 어떻게 개념화되고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권인 교육권은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조건 마련 △사회통합 교육 지원 △학생들의 학사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 교육이 가정배경에 따른 아동의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동들은 생활환경조사서에 부모 한편의 이름만을 기록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런 아동의 심리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사회환경변화로 인한 고아, 소년·소녀 가정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등 가족구조 변화를 교육권이 수용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아동의 삶에서 그들의 심리를 느껴야 다음으로 이 교수는 교육권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조약의 원리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과제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심리학적 법률체제로 아동의 권리를 해석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약 제16조(사생활의 보호)의 권리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삶에서 그들이 느끼는 사생활 존중의 심리적 중요성과 주관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리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동 스스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아동권리와 사회 전통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가 관여하는 시기, 정도,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부, 유보조항 철폐를” 조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연구과제 외에도 몇 가지 실천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 교수의 지적

1997년 5월 3일(토)

제 8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에 따르면, 우선 아동의 권리 실패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며 관련부처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조정하여 조약을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중앙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조약을 아동, 부모,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에게 적극 홍보·교육해야 하며 셋째,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동의 삶의 실태를 제시하는 아동통계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조약중 유보조항인 제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제21조 (a)항(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제40조 (b) (v)항(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등을 비준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뎀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주사파 발언으로 ‘명성’을 날린 박홍(전 서강대 총장) 신부가 혼쫓아 났다. 지난 95년 6월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당시, “불순세력 개입” 운운하며 북한의 배후조종론을 들먹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한통)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박 씨가 한통 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없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휴간 광고>  
인권하루소식 5월 6일자는 쉽니다

##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윤훈 검사는 “피고가 이적단체인 범민련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조총련과 회합·통신하고 국가기밀을 탐지누설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며 위와같이 구형했다. 이 검사는 또 “친북적 활동이 두드러진 피고인의 인권운동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통일 길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기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수차례 그 위헌성이 제기된 법률로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전제하면서, “진관스님의 활동내용에 잡담·탈출이나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잡담·탈출은 은밀히 국내로 들어오거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있기는 하나,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교인권위원회 활동내용과 각종 성명서, 언론보도 내용은 국가기밀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한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검사는 ‘국가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에

게 공개된 정보 및 민심의 동향 등도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기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국가기밀은 한 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헌법재판소 1997.1.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 34, 35, 36결정)을 뒤엎는 주장이다. 당시 헌재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20일 서울고법 형사 3부(주심 강민구 판사)도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이광철 씨 항소심에서 “공지사실은 국가기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본지 2월 26일자 2면 참조>

선고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9호실.

### ... 새 책 소개

#### 『정말이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일샘 편집부 역음/128쪽/값3천원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법국민운동」에서는 북녘을 휩쓸고 있는 대참사의 실상을 자세히 알리고 보다 많은 손길의 동참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작은 책을 엮어 냈다.

이 책은 1,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북한을 직접 방문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실고 있는데, 북한을 19차례나 방문한 스티븐 린튼 유진빌재단 이사장, 북한에 30여 차례 식량을 전달해온 한 연변동포의 생생한 목격담등이 증언과 함께 담겨있다. 또한 북한 구호활동을 펼친 국제기관들의 현지 조사활동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사회일각에서 제기되는 식량분배 과정에 대한 의혹을 씻어주고 있다. 2부에는 북녘동포돕기에 동참을 촉구하는 각계인사들의 글이 실렸고, 3부는 국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의 판매수익 전액은 북녘동포돕기 성금으로 쓰이게 된다.

문의: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법국민운동 (745-5872)

#### 『저음저렴』 장간호(5-6월호)

내일을 여는 책/213쪽/값 4천2백원

황폐해진 교육의 땅에 작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잡지 『저음저렴』이 새로 출간됐다. 『저음저렴』의 기획진은 “살벌한 경쟁과 ‘죽임의 논리’에 바탕을 둔 우리의 교육이 ‘삶의 위기’를 부채질 해왔다”며 “이 잡지가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삶의 주제들-대안적인 삶, 환경과 생태, 인권, 생명, 평화, 통일, 성평등 같은-에 접근하여 ‘삶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가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론과 실천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간호는 ‘지속 가능한 삶,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집중기획을 마련해 네 편의 글을 실었다. 각각의 글을 소개하면, <새로운 삶의 철학과 대안 교육, 고병현> <학교를 위한 삶인가, 삶을 위한 교육인가, 송순재> <간디 청소년 학교를 열며, 양희규> <작은 대화를 준비하는 까닭, 호용수> 등이다.

이밖에도 단편소설 <엄마의 장롱, 강병철>과 유재철, 도종환, 안도현, 정세기 씨의 시가 실렸고, 세 편의 서평과 잔잔한 에세이들이 창간호를 풍족하게 만들고 있다.

문의: 내일을 여는 책 (707-3833)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용!

전국 어디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검열의 서술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심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전심의'로 인해 파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제2회 서울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는 본선 진출작이던 <레드 헌트>(제주 4·3항쟁 소재)가 소재에 문제가 있다는 주최측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상영이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 반발이 뒤따르자 주최측은 "공론 심의에서 통과되면 상영을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사전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제작자들의 입장에 따라 작품은 결국 상영되지 못했다. <레드 헌트> 사태는 곧바로 심사위원 3명과 코디네이터, 프로그래머 및 자원봉사단의 집단 사퇴와 수상자의 수상거부로부터 이어졌다.

'사전심의'가 가져온 파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일 제1회 시민영화축제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체육부와 공연윤리위원회, 종로구청측의 상영중단 압력이 계속되

더니, 급기야 관객 1백50여 명이 들어선 상영관의 음향시설을 꺼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어 애니메이션 10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던 4일에도 무려 9작품의 상영이 취소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번 시민영화축제에는 23편의 소형단편영화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공윤의 상영허가가 내려진 작품은 4편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윤에서 심의미필작으로 문제삼은 작품 가운데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금관영화제(문체부 주관) 수상작인 <우리 낮은 사람들>,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작인 <있다> 등 기존영화제 출품작 또는 수상작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영화제 출품작 등 심의 면제해야 시민영화축제 집행위원회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영리 소형단편영화와 영화제 상영작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심의 면제를 인정해 줄 것"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행 영화진흥법 상으로 사전심의를

1997년 5월 7일(화)  
제 8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 극장 상영작에 대한 심의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화제 출품작과 비영리적 작품들에 대한 심의는 우선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영화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인 이용배 씨는 "영화제 출품작을 검열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며 "영화제에 출품하는 작가의 상식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귀리 김혜준(영화연구소 실장) 씨는 "사전심의"가 선별적으로 실시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체육부가 관심을 가지면 문제가 되고 눈감아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사전심의' 문제는 당국에만 그 책임을 돌리기도 어려워 보인다. 영화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전심의'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정면돌파보다는 우회적인 편법을 구사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최대 영화제였던 부산국제영화제의 출품작들 역시 사전심의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오석근 영화제 사무국장은 "1차적으론 검열을 안 받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현실로 존재하는 제도와의 갈등과 고민은 어쩔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용배 씨도 "이전까지 영화제들이 심의문제에 편법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 가을 영화팬들은 또 하나의 영화제와 만나게 된다.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제1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심의'가 존재하는 한 관객들은 또 한번 가위질 농간에 의해 작품감상의 권리를 봉쇄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프로그래머 이용배 씨도 "공론의 심의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수용해 더 이상 가위질과 검열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 공판 안내

▶5월 6일(화)  
이용석(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조성우(국보법등)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속행

▶5월 7일(수)  
양규현(제3자 개입금지등)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5월 9일(금)  
김현일의 1(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함운경(국보법 불교지협) 오전11시 10단독 525호 속행  
김지영·김은아·변성민(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침탈

컴퓨터 파손, 자료 검색 흔적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위원장 김창한) 사무실이 연휴기간에 과한의 침입을 당했다.

6일 오전 9시경 출근한 조영실 조직부장에 따르면 사무실 2층 진공 유리창이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져 있었으며, 현금 6만원 가량과 진보연합 노동자회원들의 연락처 및 컴퓨터 무료강좌 2기 수강생 연락처카드를 도난당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사무실 컴퓨터 5대의 하드디스크의 각종 회의 및 활동자료, 주간보고, 주소록등의 자료들이 모두 검색된 흔적이 있으며, 컴퓨터 3대가 분해되어 있었다고 조 씨는 말했다.

진보연합측은 "침입한 과한은 현금등 금품이 아닌 자료를 가져가려고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좀도둑 흉내를 냈으나 정황상 공안기관에서 자료들을 검색하고 복사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감시형사에 의하면 법인들은 지문을 전혀 남기지 않았고 컴퓨터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하드디스크만을 목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분해한 흔적이 있으며, 유리창이 깨진 흔적으로 볼 때 도구를 사용해 여러 번 흔적이 보인다고 한다.

### 인권운동사랑방 집들이

9일(금) 오후 7시30분!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 혜화로터러 쪽 출구  
→ 성대 방향으로 올라오다 개량한복집 '새내' 4층

## 전국연합 CUG 개설

전국연합 CUG(전용정보통신망)가 나우누리에 개설되었다. 전국연합은 "지역과 부문단체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각종자료의 교환을 위해, 또 일반대중들이 전국연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CUG 이용방법은 나우누리에 접속한 뒤 'GO NADRK' 또는 'GO 전국연합'을 치면 된다.

### 「6월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6월 민주항쟁 10년!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날의 합성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연락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6월민주항쟁주인찾기 운동본부에서는 '6월의 사람들' 등록운동, 6월항쟁 참가자 '만남의 광장' 설치운영, 6월항쟁 참가자 인명사전 편찬, 현대사 사적지 순례단 모집, 국민대응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7320-610)

## 주간/인/권/호/름

(97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 4월 28일(월)  
국민회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국회조사 추진기  
로/4·3법도민준비위원회 결성/교육부, '전교조 관련 교사  
대책방침'에 따라 4월말까지 1차 징계 마무리할 계획 밝혀

◆ 4월 29일(화)  
서울지역철거민연합 이태교 의장등 간부 3명 철거강제에게  
폭행 당해/통계청 발표, 지난 3월중 실업자 72만4천명(실업  
률 3.4%)/울산 고려화학, 1월 노조의 노동법 날치기 항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김재열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21명  
을 상대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2억2천만원 손배소송 제기/  
근로복지공단 발표, 95년 산재 당한 7만8천34명의 노동자중  
14.5%인 1만1천4백88명 과거 산재경험있는 중복재해자로  
밝혀져/전국금융노련 창립대회/정부, '5·18 민주화운동기념  
일', 10월2일을 '노인의 날'등 법정기념일로 지정

◆ 4월 30일(수)  
제1회 시민영화축제 개막/고엽제 환자로 96년 사망한 오영  
수 씨의 아들 장운(17) 씨가 보훈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  
져/서울지검 공안부 윤대진 검사 96년 10월 소살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퍼내 음란문서 제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설가 장정일 씨에게 징역 1년6월 구형/대검찰청, '영장실  
질심사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문건내어 법원의 영장  
기각에 강하게 비판/민주노총, 삼성그룹측이 노조설립 저지  
위해 이재용 씨 부당해고시킨데 대해 항의성명 발표

◆ 5월 1일(목)  
제107주년 세계노동절/대구시 '5·1절 정신계승 민중대회'  
를 끝내고 평화행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입고 1백60  
명 강제연행/영국 총선에서 노동당 18년만에 정권교체 성공

◆ 5월 2일(금)  
민변, 통일원장관을 상대로 북한주민접촉신청 불허처분취  
소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보건복지부 발표, 96년 소년소  
녀가장 세대수는 8천8백49세대, 세대원은 1만6천1명/서울지  
검 공안1부 이용훈 검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불교  
인권위 진관승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구형/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서태영 부장판사) 한국통신노조가 95년 파업  
당시 박총 신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선고공판에서 7천만원 전액배상 판결/  
내무부, 시·도교육청이 모금운동 중단을 지시하는등 제동  
걸어/공론과 종로구청, 시민영화제 집행위측에 심의를 필하  
지 않은 작품 상영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참가작 상영  
취소 잇따라/한국아동권리학회 창립

◆ 5월 3일(토)  
근로복지공단 발표, 88년부터 올 3월말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언론종사자 1백3명에 이르러

◆ 5월 4일(일)  
네팔노동자협회 주최, '네팔노동자문화제' 열려/행정쇄신위  
원회, 65살 이상 노인의 전철 무임승차 경기·인천지역까지  
확대기로/전국 3백20여개 공공도서관 중 어린이전문도서관  
종로구 사직공원에 단 1곳뿐인 것으로 밝혀져

인권  
시평

# 민주주의와 인권

김 동 한 (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 교수)

김영삼 정부가 민주정부인가? 아니다. 첫째, 군부독재와 야합하여 정권을 사취했다. 둘째, 개혁을 앞세워 장막을 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셋째,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요구가 여전하다. 넷째, 전경과 최루탄, 불심검문은 독재정권시절을 연상시킨다. 다섯째,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가 96년말까지 무려 2천8백56명이다. 여섯째, 이 시대 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이 아직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민중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김영삼정권의 권력담당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묻어 나오는 인권 무시 발언에서 이 정권이 민주정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 민주정부가 아닌 6가지 이유

전교조는 철저히 썩어 가는 교육계에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도교육이 총체적으로 썩었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사회가 썩어 터져 시끄러운데 교육부는 수수방관이다. 교육부는 어디에 쓰이는지 교육기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전교조 10년에 그래도 많이 좋아진 학교 분위기를 아직도 모르는지 오늘도 전교조 임원들을 징계할 공리만 하는 교육부! 나머지 한보사태에 허둥대는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전교조를 인정하라! 거짓교육으로 파괴되는 젊은 마음에 독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참교육을 생각하라! 청소년인권은 미래의 한국이다.

어린이날이다. 공휴일이다. 하루 쉼다. 백화점 잔치날이다. 놀이공원 떠돌는 날이다. 부모노릇이 부끄러운 날이다. 걸치레에 속으로 우는 어린이가 차고 넘친다. 모두 왜 사는지 모르겠다.

### 전교조 인정해야

인권은 힘없는 쪽이 힘있는 쪽한테 대드는 것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만큼 "마음대로"이고 싶다. 신체도 정신도 한 걸음 나아가 보니 배가 고프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른바 자유권에서 생존권으로 관심영역이 넓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 그늘진 곳이 너무 많다. 장애인도 특수학교를 비롯한 격리장소가 많다. 보통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시설에 가둬 놓고 특별취급을 한다. 거기에 인권이 있을리 없다. 아동들은 어른들의 노리개가 아니다. 그런데 어른들 화풀이 대상이다. 독재자가 어린이를 좋아하는 것은 고양이 가 쥐를 좋아하는

## 한 손에는 인권을... 한 손에는 총을...

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대접 못 받는 대상이 어찌 장애인이나 아동들 뿐이겠는가? 대명천지 민주세상이라는 미국도 인종차별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남녀평등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피맺힌 한은 할 말을 잇는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라는 입장인데 민중이 주인인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인권개념은 필요없다. 그런데 아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들도 한결같이 인권문제를 안고 있으니 그 어느 나라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와 전쟁은 아무래도 궁합이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유사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 국가에서 족보를 행긴다. 지금도 전쟁은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중이다. 전쟁과 인권은 조합이 가능할까? 역설의 조합이다. 전쟁속에서 인권을 생각하는

것조차 배부른 소리다. 어떤 체제, 어떤 이념이든 전쟁과 연결고리를 갖는 한 그 속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먼저 할 일은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나 세계인권규약이 실현되면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보라! 이슬람교도들이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세계정복에 나섰다고 비난하는 반이슬람교도들도 아직까지 한 손에는 인권을,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전쟁중이다. 우리의 상황을 보자. 한 민족이라면서 허깨비같은 이데올로기에 얽매어 동포를 원수로 짓밟았다. 동포가 굶어 죽는 데도 집권자들의 정치논리때문에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결국 남이나 북이나 잘못된 집권자들 때문에 동포들만 죽어간다. 언제까지일까?

### 동포의 굶주림 앞에 정치논리만...

아마도 통일이 될 때까지 쟁지. 그러나 통일이 어디 그리 쉽게 될까? 그러나 체념해서는 안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이다. 통일은 평화로운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더 어렵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성회복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차마 총을 겨눌 수가 있겠는가?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전쟁의 역사를 보면 성악설이 맞고, 희생의 역사를 들으면 성선설이 옳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일까.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도 기준 나름이겠지. 그러나 다수결의 허점을 직시해야 한다. 절대적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상대적 정의라도 정립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전쟁, 평화, 이데올로기와 인권의 관계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물론 개념에 짓눌려 허덕일 필요는 없다. 한 걸음이 중요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먼저 이 사회에 확산되어야 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8일(목)

제 8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했다"

시위현장에서 취재중인 대학 신문사 기자를 연행한 뒤, 폭력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뒤 구속한 사건이 발생해 사실여부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다.

한신학보사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구속된 김목원(20·신화 1년, 수습기자) 씨는 지난 4월 30일 선후배, 동료 수습기자들과 함께 취재차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에 참가했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이동중 오후 10시 10분경 고대 정문 앞 남종로타리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연행되었다. 연행과정에서 전경들은 김 씨에게 쇠파이프를 들었다고 하며 안경을 쓰고있는 그의 얼굴을 심하게 구타해, 눈에 멍이 들고 흰 눈동자의 핏줄이 터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김 씨는 차안에서 심한 구타와 협박을 계속 당했으며, 노원경찰서에 연행된

뒤 수사1계 이만성 형사로부터 조사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들은 것을 시인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 과정에서 "실사 내가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1학년인데 구속까지 되겠느냐"는 회유를 당했다고 김 씨는 가족들과의 면회과정에서 밝혔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협박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 영장실질심사없이 구속결정

대책위측은 연행된 뒤 3일째 되는 지난 2일에야 김 씨의 소재파악을 한 선배들과 부친 김종명(목사) 씨가 노원경찰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측은 다음날인 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야 구속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으나, 2일 오후 10시 20분 영장실질심사조차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김 씨는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7일 한국기독교교장교회 경기북노회(노회장 서기원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에 제출했다.

한편, 경찰측은 "시위 대치중인 다른 학교 학생 약 4백여 명과 합류하여 진압 의경에게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수경 이재화 씨외 4명에게 왼쪽 타박상등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 ■ 행사와동정

- 전해투 중앙집중투쟁
  - 5월8일(목)
    - 오전 7-9시 안산 후곡포 출근투쟁
    - 오전 10-12시 안산역 선전전
    - 오후 3-5시 수원역 동수원병원 노조탄압구탄 시민선전전
    - 오후 5시30분 동수원병원 노조탄압구탄 집회
  - 5월9일(금)
    - 오전 7-9시 덕부진흥 출근투쟁
    - 낮 12시 노동부 앞 해고자복직촉구 집회
    - 오후 5시 용역강패동원 노조탄압 대책회의(민주노총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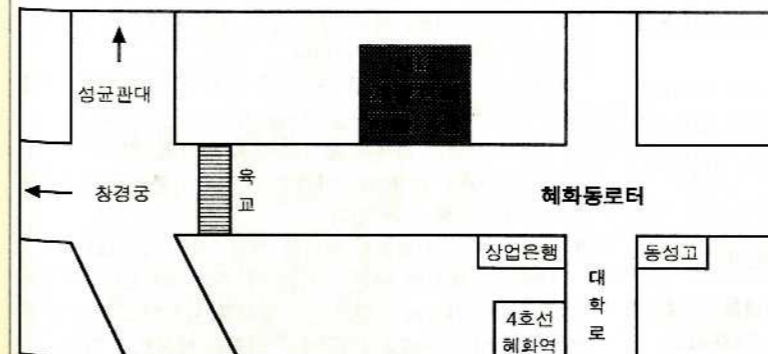
- 제4회 열린 가족 이야기 한마당 - "편부모 가족의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 때: 5월 10일(토) 오후 3시
  - 곳: 한국생산성 본부 7층 강당(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하차) ·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 제23차 전해투 지원대책위 회의
  - 때: 5월 8일(목) 오후 7시 · 곳: 향린교회 2층 홍근수대표 사무실(776-9141)

## 인권운동사랑방 집들이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많은 술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새로운 사랑방의 보금자리를 빛내주시시오(아래의 지도를 참고하세요).

9일(금) 오후 7시30분





###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문란 사태 등 잇따른 부정부패·권력남용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주원 변호사는 “국민이 부정부패에 의한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민들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적 환경의 연출을 요구할 지위에 있다”며 “이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권부의 부정부패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특히 “특별검사의 선정·위촉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을 끌었다. 그는 “특별검사는 시민이 담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경험있는 변호사들이 자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변호사들의 경력·인품·성향·식견 등에 대해 정통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검사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그는 “권부 안팎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되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 1항에서 제기된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및 공범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김현철 씨는 직계가족으로서, 정태수 한보총회장은 공범으로서 특별검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특별검사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신석호(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사는 토론문을 통해 “특검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현실성을 가질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기존 검찰의 방대한 조직과 축적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 특유의 기강과 지휘계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변호사가 권력에 맞서 특별검사의 임무를 맡을 수 있겠는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기사는 “특검제는 현재와 같은 총체적 비리를 파헤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며 “특검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많은 부분이 정화되어야 하고 시민사회가 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6월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6월민주항쟁주인찾기 운동본부에서는 6월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문의: 7320-610).

<자료요약>

###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오완호(시 한국지부 사무국장)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KNCC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등은 지난 2일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 가운데 오완호 씨의 글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95년 한해동안 41개 국가에서 2천9백31명의 수인들이 사형 집행되었으며, 79개 국가에서 4천1백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론자들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론자들은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론자들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다음은 사형제도의 부당성과 반인간적인 형벌임을 입증하는 논거이다.

- 1) 사형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사형제도와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사형이 여타의 형벌과 비교해 특별한 억제효과라는 증거가 입증된 적은 없었다. 49-53년간의 ‘사형에 관한 영국왕립위원회’는 유럽과 영연방국가들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검토한 어떤 자료에도 사형 폐지 후 살인율이 증가했다거나, 사형부활로 살인율이 감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 2) 사형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아니다. 국가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 3) 사형과 종신형을 비교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극단적으로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여러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사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종신형은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도 많다.
- 4) 사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 5) 사형은 오관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는 형벌이다. 93년 시민권과 헌법에 관한 국회 소위원회가 미국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72년부터 48명의 사람들이 유죄선고를 받고 사형을 대기 중 무죄석방되었다.
- 6) 사형은 자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법체제하에서도 선고과정은 피고의 경제력,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 7) 사형과 국민 여론은 무관하다. 여론조사는 자칫 오도될 가능성을 항상 가진다. 또한 대중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사실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 8) 사람의 생명은 경제적 손실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 9) 세계는 지금 사형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에 관한 국제조약 제2선언 의정서’는 국가에게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29개국이 비준했고 4개국에서 비준할 예정으로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9일(금)

제 8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관으로 14-19일 금남로에서 열린다.

##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항쟁 17주년을 앞두고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5·18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80년 5월 미국의 책임론과 관련한 한·미 학자들의 상반된 주장이 펼쳐져 주목을 끌었다.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의 유혈 통로와 미국의 위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상성(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은 한편으로 인권외교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에선 독재를 지원하는 이중 정책을 폈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인들은 5·18 당시 ‘관망자’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두환 군부의 ‘무력 폭동진압’ 계획과 실행에 협조한 ‘참여자’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크 피터슨(브리엄 영 대학) 교수는 “80년 5월 당시 미국은 ‘집 지키는 개’(watchdog)에 불과했다”며 미국의 책임론을 부정했다. 그는 “집 안에 강도가 들었을 때, 개가 짖지 않았다 해서 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결국 죄를 지은 것은 개가 아니라 강도”라는 주장을 폈다.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토론자들의 집중 반격을 받았는데, 박기덕(세종연구소) 씨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스스로 개입해 왔다”며 “사태를 관망했던, 방조

했던, 또는 직접 지원했던지 간에 미국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폭력과 언어의 정치: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최정운 서울대 교수), 「12·12,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역사적 의의」(박연철 변호사),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 5·18」(키미야 타다시 동경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 5.18 17주년 행사 7-25일

피해자 치료센터 건립위한 토론회 열려

5.18 민주항쟁 17주년 행사위원회(위원장 명노근)는 5.18문제 완전해결과 역사적 의의를 정리한다는 취지 아래 7-25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또한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순례 안내활동을 벌이는데, 전국 참배객들과 광주순례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통신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현지에서 안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문의: 062-225-8117 전송:062-232-8286 통신: MINJOYH).

이번 행사기간에는 모두 34개 행사가 마련되었는데 그 가운데 관심을 끄는 행사를 소개한다.

#### ▶북한동포돕기 행사

8일 ‘북녘동포 현실과 5월 나눔의 정’ 신계승 강연회가 무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또 10, 11, 14일 오후 5시 ‘제17주년 광주민주항쟁 추모 거리음악제’ 오월의 노래가 펼쳐지며, 북한동포돕기 기금미련전을 겸한 제9회 오월전 ‘민인의 얼굴전’이 광주전남 미술인공동체 주

#### ▶ 5.18 현장기록을 찾아

17년전 광주의 현지를 취재해 이를 전 세계에 알린 국내의 기자들이 자리를 같이한다. 16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18 기자클럽 결성식 및 5.18 특파원리포트 출판기념회’가, 17일 오후 3시 광주에서 ‘5.18 특파원 리포트 출판기념회 및 의신언론인 토론회’가 준비되었다.

또한 광주일보사 주관으로 15-20일 5.18포지 전시를 설치회관에서 열리는 ‘5.18, 그후 17년 특별사진전’은 80년 당시부터 그 이후 17년동안 광주시민들의 진상규명 노력들을 사진으로 정리해 지난날을 되돌아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80년 5.18이후부터 재판종료까지를 3단계로 구분지어 약 2백여 점이 전시된다.

#### ▶5.18 학술토론회

5.18재판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5.18진실규명과 5.18문제 완전해결, 향후 과제정리를 위한 국민토론회가 17일 오후 2-5시 무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 5.18재판 결과 분석과 향후 과제(한인섭 서울대 교수) △ 5.18진실규명과 총체적 과거청산의 과제(곽노현 방통대 교수) △ 5.18민주항쟁 정신의 실천적 구현의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5.18 피해자들의 15년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올해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5.18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무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 5.18피해자들의 장애 현황과 대책-94년 부상자 추후진료 신청서를 중심으로-(변주나 전북대 교수, 인류학 박사) △ 5.18피해자 치료 및 재활,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당위성(정웅태 변호사) △ 5.18피해자 치료 및 재활, 복지센터 건립 등이 주요하게 발표된다.

### 경기여성공대위 결성

「경기여성 정상화와 사회학교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대위」가 9일 오전 10시30분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문의:777-0643

### 세계의 인권 <13> 가정

## 물러앉은 아버지, 위기의 가정

가정의 달이다. 주머니가 헐거워짐을 느끼는 많은 가정의 가장들을 5월의 태양이 뜨겁게 쏘아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유엔아동기금은 그간 가족복지의 연구가 어머니와 아동에만 초점을 맞춰왔다고 지적하며 95년, 가정내의 남성과 아버지의 역할을 짚어보는 회의를 가졌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조사보고된 가정의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자.

#### 부인의 자녀양육시간 남편의 4배

먼저, 자녀양육의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남성이 자녀를 보살피는 시간은 여성의 1/4에도 못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자녀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양육에 쏟는 시간은 늘어난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쏟는 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지출성향에서도 이런 차이는 나타난다. 여성이 약 7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다산(多産) 사회에서는 15세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각자가 1명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고 자녀를 보살피야 한다. 그러나, 성적 불평등이 지배적인 현 상황 속에서 남성은 전형적으로 자기 수입의 30%를 개인적인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반면, 성인여성은 1.3명의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고 2.3명의 자녀를 자기 몸으로 직접 보살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부재'라는 장벽은 남성에게는 아이를 보살피는 기술이나 경험이 없다는 것이지만 양육의 기술이 어머니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또다른 주요한 장벽은 '가난'이다. 가난한 가정일수록 아버지가 가정과 멀어진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기여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자녀를 보살피는 어떤 행위도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기대이고 인식이기 때문이다.

#### 가정내 성평등

둘째, 가정내 성평등은 성폭력이나 조혼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대개는 여성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 각 지역마다 일치되는 연구결과이다.

페루에서 12-16세의 어린나이에 어머니가 된 여성의 90%가 강간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수가 아버지, 양아버지, 가까운 친척에게 강간당했다. 미국에서는 병원의 응급실을 찾는 여성의 22-35%가 학대와 관련되어 있다. 캐나다에서는 결혼경력이 있는 여성의 29%가 전 남편이나 현남편에게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같은 가정폭력은 자녀에게 물론 영향을 끼친다. 인도의 한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당히 적은 열량의 음식을 섭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폭력의 중요한 동력중 하나는 여성이 가정 밖에서 역할을 갖게 됨에 따라 남성이 통제의 상실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남성이 버는 양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도 증가한다고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한 그간의 초점은 성적 평등과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의 강화에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성이 자녀와 친밀할 수 있고, 임신초기부터 아버지와 자녀간의 연결이 강화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투자가 남성 속에 있는 폭력의 경향과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경제적 책임만이 아버지의 몫?

셋째,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에게 기대되는 복합적인 요구앞에서 그들은 가족성원의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성들은 남성이 겪는 이런 혼란에 동조하여 남성에게 복합적인 기대를 했고 마치못해 여성이 지고 있는 역할을 나누었다. 여성들은 '부드러운' 남자를 원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여성의 주도권을 포기하기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여성이 가정내 주도권을 가진 비율이 높은 지역(예를 들어 카리브해 연안국의 경우 50%가 넘는)에서의 면접조사를 기초로 나왔다. 예를 들어, 자마이카의 경우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은 경제적 소득의 제공자임이 명확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남성들은 가정내에서 자신들에게 합당한 어떤 자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남성과 아들이 아버지다움은 연결되어 있었고 때문에 어머니와 여자형제와 관계된 남성의 의무는 자기 자녀에 대한 것보다 강하기도 했다. 이에 남성이 갖는 자신의 이미지는 물질적 제공자이기 보다 가정 생활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남녀 모두가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남성을 포함한 진전

이상과 같은 가정내 남성과 아버지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남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사업에든 남성을 포함하지 않고는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을 여성에게로 제한하기보다는 남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며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준에서 규정한 원칙이다. 그 이행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10일(토)

제 8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런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침해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다룬 것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원고 홍성담 씨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하며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함에 대해, 재판부는 "여권법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규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자신원조사처리규칙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권신청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안기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안기부의 직무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 신원조사 30일 초과해도 무방

재판부는 원고가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의 신원조사처리기간을 초과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

장한데 대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법규적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아니라,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거나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7일간 초과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홍성담 씨 93년 사면복권

홍성담 씨는 89년 결계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93년 3월 사면복권되었다. 지난 8월 국제엠네스티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사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자, 96년 8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청구했다(판결문 2면).

## 사회단체, 경기여성 정상화 촉구 "관선이사 파견" 주장

지난 3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수업결손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여성(교장 김정남) 사태의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총무 박기호 신부), 참교육학부모회(대표 오성숙)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여성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여성의 설립자이면서 소유주인 김일윤(신한국당 국회의원) 씨는 경기여성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사태해결을 위해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하며, 학생들은 즉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여성을 직접 방문했다.

### ☆ 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 ... 불감중에 걸린 대학생들

"신분증..." "아! 예, 여기 있습니다" 9일 오후 성균관대 진입로에서는 전경들의 신분증 검사와 가방수색이 한창이었다. 9, 10일 이틀간 성균관대에서는 97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이 열리게 되어 있었고, 경찰은 이를 원천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검문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성대 진입로에서의 1차 검문을 통과하면, 교문 앞에서 또 한번 '통과의례'를 거쳐야 했다.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전투경찰들의 위협적 분위기 때문인지, 학생들은 눈길을 아래로 내려간 채 고분고분 신분증을 보여 주고 가방을 열어주었다. 아예 신분증을 꺼내들고 걸어오는 학생의 모습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이날 학생들이 당한 검문은 분명히 불법적 조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경찰은 자신의 소속·신분·성명·검문 이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날 검문과정에서 위 사항을 준수한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불법조치에 대해 이의를 다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여권법 제8조 제1항은 '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위 여권법 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나치게 막연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다소 지연되거나 종국적으로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 조항이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헌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중략)

다. 원고는 다시, 원고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적이 있다 하여도 만기출소한 자로서 사면복권된지 3년 4월이나 경과하였고 또한 그 동안 새로운 범법행위를 저지른 바도 없는데 단지 국가보안법위반자라는 이유만으로 광주광역시에서부터 신원조사를 의뢰 받은 경찰청장이 안기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재의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46호)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권발급신청자신원조사처리규칙 (경찰청 예규 제160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여권신청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안기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원고가 1991. 5. 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경찰청장의 안기부장 대한 위 신원조사의뢰는 위 제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중략)

마. 끝으로 원고는,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상의 신원조사 처리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은 1969. 5. 30. 대통령령 제25호로 제정된 것(1981. 10. 7. 개정)으로서 법규적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제57조 제1항에서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요청기관에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위 조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신원조사 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산하 안기부가 위 기간을 경과하여 신원조사결과를 회보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위 규정 제57조 제1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할 것인데, (중략) 서울고등법원은 1991. 1. 31. 원고가 1988. 10. 중순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1989. 2월경부터 4월경 사이에 이적표현물로서 외세의 식민지역 압분쇄, 계급간 갈등,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동시에 변동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것이 계급운동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을 형상화한 대형결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등을 제작, 반포하였으며, 같은 해 6월경 위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결개그림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이를 북한으로 송부, 평양축전 미술전람회에 전시케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중략) 원고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91. 5. 2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1996. 7. 10. 경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통보받은 안기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같은 달 12. 안기부 산하의 원고 주소지 관할 부서인 광주지부와 원고에 대한 위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바 있는 대공수사부서에 원고가 출국할 경우 국외여행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여권발급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고 이에 위 광주지부는 같은 달 19.에, 위 대공부서는 같은 달 30.에 원고가 출국후에도 계속 투쟁적인 언동을 해왔고, 방북인사인 서경원 전의원을 만났으며, 평양에서 열리는 8. 15. 범민족대회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각 여권발급 불허의견을 회신한 사실, 그러자 위 신원조사담당부서는 당일 다시 안기부 산하 정책부서와 해외부서에 그 의견을 문의하여 같은 해 8. 7. 위 정책부서로부터는 여권발급 불허의견을 회신받았으나 같은 달 14. 위 해외부서로부터 93. 11. 원고의 독일여행시 우려할만한 사실 발견되지 않아 급번 영국 여행을 허가하더라도 친북인사 접촉 등 불순활동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여권발급 허가 의견을 회신받은 사실, 그리하여 안기부는 같은 달 16. 광주광역시시장에게 원고의 신원조회 적합회보를 통보함으로써 위 규정상의 신원조사처리기간을 약 7일간 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기부가 위 신원조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처리기간을 초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1997. 5. 9

재판장 정은환·노경필·최석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13일(화)

제 8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오는 14일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임대 종료일을 맞아 한·일 사회단체들이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섰으며, (가칭)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 가을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되는 등 '미군기지 반환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주둔지역 토지의 강제 수용,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공해 및 환경오염 사태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미군기지 임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미군기지 신설·확장 금지

특별법 초안 제3조는 '미군기지를 더 이상 신설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강제 수용이 아니라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명시한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군기지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앞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미군기지 실태에 관한 한·일 국제 학술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

가 피해 주민 개개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가해자인 미군 개인이나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 SOFA 개정·오키나와 반환 촉구

한편, 「우리땅 미군기지찾기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 등 한국측 20개 단체와 「한평반전지주회」 「반전지주회」 등 일본측 단체 대표들은 13일 '미군기지의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해의주둔 미군의 사유지 강탈, 인권유린, 환경파괴 등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미군기지의 축소·반환 △오키나와의 반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및 미군기지 임대기간 확정 △해의주둔 미군기지의 축소, 반환을 미국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 미군기지 실태 한·일 학술회

이외 앞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미군기지 실태에 관한 한·일 국제 학술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

서 일본측 참석자들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운동의 현황과 미군기지 사용의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측에서는 한미행정협정의 실태와 한국의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대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13일 서울에서의 행사에 이어 14일 평택, 인천, 대구 등지로 내려가 미군기지 방문 및 인간띠 잇기 행사 등 지역별 행사를 갖게 된다.

### "학교를 학생에게" 통신상 서명운동 한창

통신상에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개선과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컴퓨터통신 하이텔과 나무우리의 고등학생 모임인 '학생복지회'가 '학교를 학생에게'라는 주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벌이고 있는 이 서명운동에는 이미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과 두발제한, 교복착용, 교사폭력 등으로 학생인권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회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이텔 학생복지회 정영민(20) 씨는 "계속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을 위한 헌법소원, 교육부 항의서한 전달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하이텔은 go sg207, 나무우리는 go ssociety16으로 접속하면 된다.

### 주요 공판 안내

▶5월 13일(화)

권영길(민노총 위원장, 제3자개입금지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태환(국보법 위반)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지로번호: 7618848

### 아프리카, 아동 성학대 심각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의 아동 성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자 칸 씨와 니아농고 씨가 짐바브웨 수도에 있는 5백 49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짐바브웨에서는 어린이가 10명 가운데 3명 꼴로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아동성학대 비율 10%의 3배에 해당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최초이며, 곧 하바드대학잡지에 발표될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만큼 자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아이들을 성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55%가 여자였으며, 남녀 가해자들 가운데 64%는 남자아이들에게 자신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남자아이들 18%가 감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가 심한 까닭은 아프리카의 전통문화와 관련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칸 씨는 "대부분 여성과 아동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남성지배 사회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와의 성관계는 악을 물리친다는 주술도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온두라스의 내무법무부는 관할 교도소에서 적어도 3명의 아동과 1명의 성인을 고문한 혐의로 수감되어온 교도소의 소장을 보석석방하고 복직시킴으로써 인권옹호자들을 경악케 했다.

문제의 코마야구와(Comayagua) 교도소 소장 아킬리노 소르또(Aquilino Sorto) 씨는 95년 11월 불법적으로 성인과 같은 감방에 구금되어 적어도 3명의 연소자를 고문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르또 씨는 처벌방으로 연소자들을 데려가도록 명령했고, 거기서 손을 등뒤로 수갑을 채우거나 묶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로 손목부분을 벽에 매달았다. 95년 12월 26일 심각한 항의가 터져나온 후 법무부는 조사위원을 교도소에 파견하였다. 조사위원은 고문피해자와는 아무 얘기도 나누지 않았고 몇몇 재소자와 얘기한 후 고문사실이 날조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온두라스의 수백 명의 거리 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조직인 Casa Alianza는 조사를 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했고 국제인권단체도 이에 가세했다.

올 2월 소르또 씨는 체포되었고, 온두라스 형법상 고문이 범죄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경찰감옥에서 몇 주를 보낸 뒤 보석석방되었다.

Casa Alianza 법률구조소 조정관 Gustavo Escoto 씨는 "온두라스 정부는 아메리카 인권위원회의 명령을 지키고 있지 않고 게다가 감옥 내의 아동고문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서한 보낼 곳: Dr. Leo Valladares,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in Honduras <conadehl@ns.gbm.hn>

<출처: DEBRA @ OLN.comlink.apc.org>

### 주간/인권/호름

(97년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 5월 5일(월) <아사히신문> 보도, 북한적십자회 백용호 서기장 북한의 식량재고가 3월21일 현재 6만2백에 인된다고 밝혀/중국 연내에 대학교육을 전면 유효화 방침/세계보건기구, 96년 전세계 2천4백만 명이 심장병 압동 만성질환으로 사망

• 5월 6일(화) 국민구강보건연구소, 국민증 총치는 12살 기준으로 1인 평균 3.11개/정부, 의료보험 혜택 2백70일 확대/한국사진기자회, 노동절 집회 취재도중 사진기자 4명이 경찰에 폭행당한 것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와 사과 촉구 항의공문 보내/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에서 선박작업중 대우조선협력업체 성광기업 소속 도장사 김인규씨 사망, 10명 중경상 입어/<교도통신> 보도, 2차 대전중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사죄와 보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 미 의회 제출

• 5월 7일(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정부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30여 년 동안 엉터리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교육부,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대책' 마련 발표/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전남 나주 광주예술학교 학생 3백여명 5일째 수업거부한 채 학원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과 현 이사진 사퇴 촉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0-9살 어린이의 사고사망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30명/한국생산성본부 발표, 단위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한 87년 이후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돼

• 5월 8일(목) 부스리기선교회 결손위기 가정자녀들에 대한 장학회 창립/울산 현대중공업 노조 발표, 현대중공업 9명의 해고자 복직합의 8개월째 지연/노동부, 민주노총 설립신고 보완요구

• 5월 9일(금) 권영해 안기부장, 황장엽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한국전화번호부 노조,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민영화 반대시위/삼성경제연구소 조사, 생활형편지수 41.7로 91년 4/4분기이후 가장 낮아/대우경제연구소 발표, 96년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20만4천원/서울시, 노인성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및 요양기관 4곳 99년까지 설립계획/의료개혁위원회,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발표/환경부의 '교통·환경등 각종 영향평가방식의 통폐합등 합리적 조정방안' 따라 환경정책의 전반적 후퇴 우려/서총련 출범식 원천봉쇄로 서울 시내 곳곳서 격렬시위/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화가 홍성담 씨가 국보법 위반사건 전력을 이유로 안기부가 여권발급을 지연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소송 기각

• 5월 11일(일) 국민회의·자민련, 권영해 안기부장과 김현철·김기섭 씨의 비밀회동과 관련, 권 부장의 사퇴·해임과 검찰 수사 촉구/정부, 5·18 관련자 3천4백21명 국가유공자로 지정/보건부 발표, 수도권 직장외보조합 5곳의 95-96년 보험료 집계 결과 조합당 2억6천31만-2억1천6백16만원 과다징수해

###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인권시정

옳은 말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옳은 말이 힘을 지니고 주장되기 위하여는 그 말을 때맞춰 주고 그 말의 울음을 실감케 하는 육체적 근거가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엔가 '실재'해야 한다. 나는 이 시대에 옳은 말은 무성해져 울음을 위하여 기꺼이 핏박받으려는 '몸'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스스로 철저히 핏박받는 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 시대를 사는 이 인권운동가의 부끄러움이기도 하다.

#### 이 시대 인권운동가의 부끄러움

얼마 전, 어쩌다가 명지대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다. 길에 전경들이 피악 깔려 있던 것은 '고 강경대 열사 6주기' 때문이었다. 전경들이 정류장 양방향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모조리 검문하고 있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사람을 불러 세우고 손바닥도 제대로 펴지 않고 잠깐 손을 올렸다 얼른 내리는 경례라는 게 자못 싸가지 없고 위압적이다. 가방을 뒤지는 손놀림이 "지극히 당연"이라는 듯이 자연스럽다. 무스름 머리카락을 뺨뺨하게 세운 젊은이가 학생증을 제시한다. 유심히 그 학생증을 들여보던 전경은 고개 가우뚱거리면서 그것을 상관에게 갖다 보이고 상관 역시 열심히 들여보내다(짜식들 진작 전자주민카드라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 있으나마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는 불심검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우선 "경찰관은 ...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그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야" 한다.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하여 ...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지만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노동절 집회가 있던 날에도 또 최근에는 서총련이 출범식을 갖던 날에도 서준식은 은둔 검문천지였다. 물론 경찰의 이런 검문은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양치런 운수하다. 경찰관에게보다도 학생들에게 더 화가 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분노라도 있었다. 뻑 소리라도 한번 질러 보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이 그리도 겁나는가?

#### 군사정권 시절에는 분노라도 있었다. 뻑 소리라도 한번 질러 보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이 그리도 겁나는가?

언급되지만 경찰은 끄떡도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모두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하고 경찰에 끌려가는 일을 끈질기게 되풀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이런 상태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준법과 '옳은 주장'

불심검문 같은 불법적인 관행들뿐만 아니다. 우리는 대체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군사정권 시대에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거미줄처럼 우리를 묶어매는 세상에서 '준법'을 하면서 살고 있다. '준법'을 하면서 그 법이 악법이라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성한 토론회, 공청회, 서명운동, '선언', 원고 집필... 그러나 원래 악법이라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된 끝에 필요하면 폐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법의 본질은 적대적 세력의 제거를 겨냥한 정치권력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악법 개폐운동은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대한 무장해제운동이자 부분적 혁명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말'로써 혁명을 한 예를 본 일이 있는가? 이런 단순한 이치를 요즘 우리는 (세련된 운동을 위하여)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감옥에 가야하는 이유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의 대학생과 일부 종교인들, 자신의 노래에 대한 검열을 거부하고 수난을 겪으면서 계속 '불법 음반'을 냈던 정태춘 씨, 출국금지에서 오는 정신적 중압을 무릅쓰고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한 문규현 신부, 아니 누구보다도 (비록 왜곡된 개정이라고는 하나) 오늘날의 노동법을 있게 한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운동가의 비참에서 수많은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비참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옳은 주장'에 혼과 힘을 불어넣은 '육체적 근거'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집회와 시위,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 영화·비디오에 대한 검열, 감옥의 처우, 사상 전향, 민방위훈련 그리고 앞으로는 전자주민카드문제에 이르기까지.

악법의 거미줄 속에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여차피 작은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가는 일만큼 크고 중요한 일도 드물다는 '70년대, 80년대 식의 낡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감옥에 가자. 친구랑 함께, 애인처럼 함께, 한번도 아니고 두 번도 세 번도 열 번도, 드디어 악법의 씨가 마를 때까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15일(목)  
제 8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 국민대, 부산 동의대 파문

대학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대에서는 전자과 백 아무개(24)씨에 대한 송 아무개 교수의 성폭행 사건으로 다섯달째 파문이 계속되고 있으며, 12일 부산 동의대에서는 미술학과 학생들이 "지난달 26일 아외수업 도중 송 아무개(49) 교수가 여학생들을 껴안고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송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국민대 사건은 피해학생이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 백 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송 교수가 "저녁을 먹으러 가자"며 자신을 교외로 데려갔고, "할 얘기가 있다"며 여관에 데려갔다고 한다. 송 교수는 지난 2월 백 씨의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여관으로 데려간 사실과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백 씨는 "숨기고 싶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사건을 알리게 됐다"며 "법대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원에 합격한 그는 이번 사건으로 자퇴서를 냈으며, 송 교수도 지난 4월 23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7일 백 씨가 송 교수를 강간차상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백 씨는 같은 과 최 아무개 씨와의 간통건으로 고소돼 또 한번 홍역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의 부인 이 아무개 씨는 2월 20일 남편과 백 씨를 간통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4월 1일 고소를 취하했다. 이 고소건에 대해 「국민대 성폭행 사건 대책위」는 "이 씨와 송 교수 사이에 사전모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는 스이 씨의 고소가 있기 전날인 19일에 송 교수가 고소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스이 씨가 고소건을 학교측에 알렸으며 스이 씨가 한 차례의 검찰 진술도 하지 않고 스스로 간통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들며, 간통고소는 "백 씨에게 나쁜 소문이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씨도 이 건과 관련해 4월 22일 이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대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성폭행 사건과 달리, 교수의 권위를 앞세운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중신 상담실장도 "학내 성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절대적 위치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생활 지도를 빙자하여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

## 과거청산 국민위, 전·노 사면반대 1980인 선언과 인권피해 증언의 장

5·18원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집행위원장 홍상익)에서 5, 6공 잔재 원전청산과 전두환·노태우 사면반대 1980인 선언과 5, 6공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 및 제1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을 마련한다.

■때 : 5월 15일(목) 오후4시 / ■곳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은 커녕 더 큰 상처를 입고 무마되고 말아 은폐되고 재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저질러지는 성폭행도 범죄행위로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판단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지만, 피해자 백 씨가 입은 충격은 쉽사리 가늠할 수 있어 보인다. 백 씨는 "이번 사건으로 세상을 보는 시선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다만, 주변에서 감싸주고 격려해주어 힘이 되었다"며 "빨리 털고 일어나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 서총련 출범식

#### 3백15명 연행, 구속 16명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의장 장전섭) 출범식이 원천봉쇄된 가운데 지난 8, 9일 서울 시내에서 연행된 총인원은 3백1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구속 16명, 불구속 40명, 즉심 1백58명, 훈방 1백1명이다.

###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

석탄일을 맞아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3백12명을 가석방시키고, 모범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모두 3백54명을 석방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38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석가탄신일 휴일관계로 5월 14일자 하루소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현장 스케치>

## 돼지처럼 쫓겨난 양돈마을 철거민들 동아건설·적준개발 밀어붙이기 한판

지하철 7호선 하계역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돌아 중현초등학교 후문을 지나면 머리위로 경춘선 철길이 보인다. 바로 옆 동부건설도로에선 차들이 빗물을 뿌리고 달리고, 쏟아지는 빗속에 천막을 손질하는 몇몇 사람들이 보였다.

"영은교회가 어디있나요?"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대체 어디 있다는 건지 교회는 보이지 않았다. '하계1동 재개발지구-동아건설'이라고 쓰인 큼직한 간판을 중심으로 1천여세대가 살던 1만7천여 평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렸다. 부서진 집들 사이로 침대, 분짜들이 버려져 있고, 대문은 떨어져 나간채 기둥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 버리고 그들의 꿈도 부서진 듯하지만 이곳이 마을이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듯 골목길이 드러나고 그 길을 따라가니 영은교회 팻말이 보였다. 물안나오고, 전기끊긴 양돈마을에 영은교회만이 유일한 보금자리이다.

"비가 새는 판자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87년 8월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한 오용식(44) 목사. 당시 6개월이었던 한샘이가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이곳 양돈마을에 철거가 본격화된 것은 96년 11월이다. 빈집들이 점차 부서져가던 중 지난 4월 14일 밤 김용태 노원구청장 명의로 '행정대집행 명령장'이 날라왔다. "4월 28일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들어가겠다"는 경고장이었다.

4월 30일 강제철거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구청측은 "재개발조합장의 직권이 아닌 주민과 상의하며 철거를 진행시키겠다"고 약속한 뒤 돌아갔다. 조합측과 구청, 주민들의 협상자리가 마련되었지만 결렬됐다. "충분한 대화와 협의 약속"을 해놓은 상황에서 9일 오전 교회만 남겨둔채 30여 가구가 강제철거되었다. 이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북교회 영은교회 철거대책위가 나섰고 적준개발과 현장책임자, 노원구청측이 1주일간 말미를 주기로 해놓고서도 몇 차례나 철거반원의 급습에 긴장해야 했다. 가까스로 12일 구청측과 협상으로 '예배처소, 상가분양권 마련'에 긍정적인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세입자 30세대, 가옥주 15세대등 50여 세대들의 대책은 여전히 막연하다. 더욱 답답한 것은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가옥주는 가옥주대로 대책마련에 부심한다는 사실이다.

세입자, 가옥주 두 목소리

세입자대책위 이성이 부위원장은 "우리의 요구조건은 주거권 즉 생존권 보장 한가지다. 반면 가옥주는 재산권 보장문제다. 무허가촌이지만 나름대로 생활이 있었다.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양돈마을 이름 그대로 우리는 돼지처럼 쫓겨났고, 모든 걸 다 잃었으니 싸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볼 작정이다.

노원구청 주택과 관계자에 따르면 양돈마을 문제는 조합측과 세입자들간 해결해야할 문제로 구청측은 중재자 역할일 뿐, 별도의 예산은 없다. 13일 대책위와 조합장, 구청의 협상은 조합측의 불참으로 다시 15일로 연기되었다.

## 인권영화 ①-〈꽃잎〉, 〈부활의 노래〉 5·18 영화의 민중적 방식

영화는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탐구한다. 그래서 영화를 꼼꼼히 분석하면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광주민중항쟁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광주항쟁을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5·18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는 단편을 제외하고는 장선우 감독의 〈꽃잎〉과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 단 두 편에 불과하다. 사회·역사적 비중에 비해 단 두 편이라는 적은 수에 불과한 것은 그동안 국가기구나 자본의 검열, 그리고 제작사와 감독의 자율적 검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한 시기에 단편영화로 습작의 시기를 거친 이정국 감독이 5·18을 소재로 한 〈부활의 노래〉를 과감히 데뷔작으로 들고 나왔다. 독립영화 방식으로 제작된 〈부활의 노래〉는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와 항쟁 초기 유인물을 통해 선전활동을 벌였던 '들불야학', '윤상원'을 소재로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0·26시기 전부터 광주항쟁이 치열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박관현 열사가 옥중에서 단식으로 사망하는 시기까지를 연대기적으로 다루며 여기에 델로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어느 정도 고중에 입각한 픽션의 형태를 띤 이야기를 전통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반면에 장선우 감독의 〈꽃잎〉은 5·18 당시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상인 '소녀'와 막노동자인 '장씨'의 사연을 한 축으로 하고 소녀를 찾는 오빠 친구들인 '우리들의 이야기'가 한 축으로 열기살기 진행되면서, 그 사이를 소녀의 기억이 불안스럽게 끼여드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부활의 노래〉는 5·18을 소재로 하여 민중적 예술관을 보여주는 신인감독다운 치기가 흘러나오고, 〈꽃잎〉은 감독 자신의 스타일을 개척해나가는 치열함과 중견감독다운 노련함이 엿보인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화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탐구한다. 영화의 탄생은 인간의 객관적인 이성을 강조하고 시각의 우월성, 개인의 개성을 자율적 영역으로 설정하는 초기 부르조아 이데올로기가 개화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의 중심인 인간은 원근법이라는 자신의 관점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하기를 욕망하였고 그결과 영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프레임의 대칭적 구성 방식이나 정적인 구도 등이 그 산물이다. 즉, 이러한 시각양식의 유형은 형성된 이데올로기로 특정 사회의 물질적 권력을 비밀스럽게 추구하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끝없는 재생산이다.

그렇다면 〈부활의 노래〉와 〈꽃잎〉은 어떠한가? 두 영화 모두 단지 소재만 민중적인 것을 다루고 있을 뿐 소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부르조아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꽃잎〉은 그래도 조금은 부르조아적인 방식을 탈피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진정으로 5·18을 다루고자 한다면 새로운 시각적 스타일의 창조를 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5·18을 민중적 방식으로 영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본다.

【송덕호·민주언론운동협의회 영화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16일(금)  
제 8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5·18 당시 최소 5명의 여성이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도 정신병원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5일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과거청산국민위) 산하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소장 황상익)가 개최한 [제1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에서 박강배(5·18 공대 위 총무) 씨는 이같이 밝혔다.

박 씨는 또 "망월동 유골감식작업 결과, 대부분의 사망원인이 머리와 가슴, 척추 등의 총상, 대검에 의한 자상 등이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전두환 씨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지만, 앞서 언급된 성폭행 사건, 행방불명자와 암매장된 사 람들,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그 후유 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등 아직까지도 가려져 있는 진실은 수수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씨에 따르면, 5·18 당시의 행방불명자의 숫자도 알려진 47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한다. 그것은 당시 넘마 주이나 부랑아 등 신분이 불명확했던 사람들과 암매장된 피해자들의 수치가 제대로 계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당시 무등강생원을 이용하던 4백 여 명의 부랑아 가운데, 5월 27일 이후 나타난 사람은 1백명도 채 되지 않았으며, 교도소에서 사망한 시체 9구를 암매장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항쟁 당시 시민군의 일원이었던 김공휴(36) 씨도 자신이 입은 끔찍한 고문과

그 후유증을 차분히 증언했다. 그는 "국광이자루로 구타당하고 고춧가루를 마시며, 전기고문을 당할 때 오로지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포플러나무 아래 손발을 묶어놓고 개미집을 쫓아버리자, 수백마리의 개미가 온 몸을 물고 다녔다"며 "3일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미고문을 당하다 결국 수사관의 조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문에 따른 뇌손상으로 신경성 심신마비증을 앓아 왔으며, 결혼 생활마저도 실패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박강배 씨는 "80년 5월 이후 17년간 파괴되어온 개개인의 인간사가 치유·조망될 때에만 광주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군 과거청산국민위 사무국장은 "광주지역에서조차도 인권침해사태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해선 피해사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작업이 벌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앞으로 5·18문제 뿐 아니라, 삼청교육대·의문사·교문·해직자·조직간첩 사건 등 5·6공 당시의 각종 인권피해 사례를 수집해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증언의 장을 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사된 내용을 증언록으로 묶어내고, 피해사태에 대한 법적 지원 및 항의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신고전화:02-762-4194)

## "적선은 커녕 쪽박깨기"

### 북한동기문화공연 원천봉쇄

15일 오전 성균관대로 향하는 골목길에는 차량 검문이 한창이었다. 이날 낮 3시 성균관대에서 전교조·성균관대 총학생회등의 주최로 열릴 예정인 북한청소년들 기문화공연 '북한청소년에게 사랑의 쌀을!' 행사준비 차량을 막기위한 것이었다.

이윽고, 행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검문은 더욱 삼엄해졌다. 해화역에서부터 성균관대에 이르기까지 철통같은 검문을 펼치면서 전경들은 "학생들 어디가?"하며 반말은 예사고, "공연표를 어느 학교 선생한테 샀냐?"고 캐물기도 했다. 심지어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서 학생들 명단을 적어 한때 교사들과 시민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한 교사는 "돌을 던지는 행사도 아니고, 북한동포를 돕자는 행사인데 이렇게 막아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또 학생들 명단을 학교측에 보내지 않을 까 싶다"며 걱정했다.

### "선생들이 학생 앞세워 왜 선동질이나"

또 버스가 다니는 성균관대 입구에는 페퍼프로그 1대와 전경차가 20여대 가량 늘 어선 채 육교위에 올라선 중고생들을 향해 "금일 행사는 불법행사이니 학생들은 즉시 귀가하라"고 '명령'하는 방송이 계속되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시간 가량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행사장을 들어가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뒤통 길을 찾아나선 선생님과 남녀학생들은 성대 후문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탔지만 후문 부근에 가서 전경과 경찰측에 의해 끌려내려야 했다. "선생이 학생들을 선동해 데모하느냐"며 경찰책임자가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폭언을 퍼붓자, 한 여학생이 "왜 우리 선생님한테 샀대질이나"며 막아내기도 했다.

15일 스승의 날, 또하나의 우리시대 스승과 제자의 서글픈 자화상이었다.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컴퓨터통신 상에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날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협외와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문 가운데 이적표현물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변증법적유물론』 『역사적유물론』 『레닌저작선』 『세계철학사』 『조국통일론』, 위 서적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사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역사관에 서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미국의 신식민지로 보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서적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서적들은 『조국통일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저작물들로서 급변하는 세계정세하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이데올로기의 중언을 고한 현재에는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특히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그 허구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할 것이며,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으로 유지되는 일당 독재체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조국통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론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기술어 있기는 하나 대체 연방제 통일론이라는 것이 북한의 전용물이 될 수 없고, 연방제통일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도 그 내용에 있어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중략)과 관련해서 연방제를 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이 각각 갖자고 북한의 김일성이 1991.1. 신년사에서 수정·제한한 고려연방제의 실질적 내용이 위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의 남북연합의 내용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는 견해(중략)도 있으며, 위 책들은 모두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합법적으로 출판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서적들이고,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센터 및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일반인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것들이며, 결국 위 서적들은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우리 사회에 어떤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국민인권기구 연구 본격화

민주법연, 시민운동지원금 받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상임대표 김민배·인하대 교수, 민주법연)는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민인권기구에

관한 연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는 선정된 시민·사회단체의 20여 개 사업에 5백만 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 5월 항쟁 복원, 과거청산부터 종교·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

종교·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980명은 15일 기독교회관에서 '5·6공 잔재 완전청산과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 반대 1980인 선언'을 발표하며, "이번 5·18은 전반적인 과거청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규(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목사 등 선언자들은 "과거청산작업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완전한 과거청산이 이뤄질 때만이 5월 항쟁이 역사적으로 복원되고, 우리는 이러한 기반위에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언자들은 △정치권의 시면논의 중단과 김 대통령의 사면불가 방침 천명 △5·6공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민·관 합동의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5·6공 하에 제정, 개악된 각종 악법의 개폐 △5·6공 영합 정치인들의 퇴진을 촉구했다.

## 행사와동정

- 기자클럽결성식 및 5·18 특파원 리포트 출판기념회  
·때: 5월 16일(금) 오후 6시30분 ·곳: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 시민운동지원기금 창립2주년 기념식 및 제2회 한국시민운동상 시상식  
·때: 5월 16일(금) 오후 5시 ·곳: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제1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식과 정신계승 국민대회  
·때: 5월 17일(토) 오후 2시 ·곳: 종로3가 종묘공원  
·주최: 과거청산국민위·전국연합·민주노총
- 김영삼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때: 5월 19일(월) 오후 1시30분-5시 ·곳: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와 차병직 변호사는 독일 양심수후원회등의 주최로 15-17일 독일에서 열리는 '5월민중제'에 강연(한국인권문제) 초청을 받아 14일 출국했다.
-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전국연합 간부 4명은 17,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97연차대회' 참석차 출국했다.
- 민가협은 20-23일 서울대 대동제기간에 학생회관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를 연다. 민가협 집회는 올해로 11년째를 맞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17일(토)  
제 8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철거민 골리앗 투쟁 7개월째

### 가수용단지 놓고 주택공사·철거민 대립

택지개발지구내에 남아 있는 철거민 두 가구가 7개월째 골리앗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택지개발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강태환(40) 씨의 가족 4명과 김용해(43) 씨는 이웃주민 2백여 세대가 모두 떠나버린 속에서 5층 높이의 철탑을 지키며 외로운 철거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골리앗에선 두 가구 외에 경기지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경철연) 회원 4-5명이 숙식을 함께하고 있다.

명과 경찰 수백여 명이 투입되어 골리앗 주민들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철거용역들은 남아 있던 가옥 1백여 채를 모두 철거해 버렸으나, 소식을 접하고 달려온 경기·서울지역의 철거민들과 대학생 3백여 명의 규탄시위로 인해 골리앗은 철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6년 3월 원천동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96년 10월 22일부터 경철연 회원들의 도움으로 골리앗 철탑을 세우고 본격적인 농성투쟁을 진행해 왔다. 당초 가옥주 1

백26가구의 세입자 1백여 가구에 달하던 주민들은 주택공사측과의 개별적 접촉으로 하나둘씩 이주해 가고 골리앗 농성에 돌입할 때는 7가구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순부터는 단 두 가구만이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원천지구내 가수용단지 설치 요구

현재까지 개발담당자인 주택공사측과 철거민측 요구사항 간에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주택공사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3백50만원을 이주비용으로 제시했으며, 최근엔 원천지구가 아닌 다른 장소에 방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은 두 가구는 이 지구내 가수용단지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 씨는 "가수용단지 설치해 우리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철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때내야 하는 요구"라고 말했다.

현재 수원에서는 원천지구 외에 조은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주민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병점지구에서도 택지개발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 제7회 5·18 시민상

곽노현교수·박연철변호사 수상

올해로 7회를 맞는 5·18 시민상은 곽노현(민교협, 방송대 법학과) 교수와 박연철(민변) 변호사에게 수여되었다.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회장 정수만)는 "12·12, 5·18 재판과정중 법적 조력 및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등 민주화 발전과 통일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 강인영(인권지기)]

#### 류재을 씨 사인 끝내 못밝혀

##### 경찰, 도청앞 노제 막아

지난 3월 20일 시위도중 숨진 류재을(20·조선대 행정) 씨가 숨진지 두 달만인 16일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측의 도청앞 노제 봉쇄로 결국 장례를 치르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고 류재을 열사가 시위도중 숨진 것을 인정할 것 △도청앞 노제 허용과 검문검색을 하지말 것 등을 요구했으나, 경찰측은 '시위도중 숨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망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난항 속에서 장례절차는 오후 3시 입관식을 마친 상태에서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오후 4시35분 조대병원 영안실을 출발했다.

이에 앞서 류재을 씨 부친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의 위해 싸우다간 아들의 사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 만약 양심적인 정부라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을 죽일 순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유가족 및 학생측은 장례가 장기화 될 것을 대비, 시신이 썩는 것을 막기위해 관에 드라이아이스를 설치했다.

이어 조선대 운동장에서 '애국학생 고 류재을 열사 학생장 열결식'이 시민·학생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사회대 앞 노제를 거쳐 오후 7시50분 현재 조선대 정문앞 노제를 치르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선대 주변에는 8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여전히 학생측과 경찰측과의 타협점이 찾지못해 장례를 치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인천 중부서, 항의집회 참가자 25명 또 연행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

지난 14일 새벽 1시30분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반대활동을 벌여온 이재남(40·영흥도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등 주민 5명과 서주원(39·인천 환경연) 사무국장이 강제연행·구속된데 이어 16일에는 이들 구속에 대해 규탄시위를 벌이던 홍해란(서울 환경연) 국장, 한현숙(인천 환경연) 간사, 석광훈(녹색연합) 씨등 모두 25명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16일 오전 1시30분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환경운동연합 회원등 60여 명이 인천 중부경찰서 앞에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주민 및 환경운동가 구속 규탄대회'를 벌이던 중 이치범(환경연) 사무국장 등 대표단이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간 사이에 벌어졌다.

최화연(서울 환경연) 씨는 "중부경찰서 측은 규탄시위 중에도 계속 비디오 촬영을 했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간 동안 전경 1백여 명이 포위한 채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 화력발전소 부당함 홍보

##### 집시법 교사죄에 해당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발표해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민들의 찬탁농성을 지지받았다는 이유로 서주원 사무국장을 집시법 관련 교사죄 및 방조죄로 구속한 것은 초법적 만행"이라고 규탄하며 구속자 전원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어 △영흥도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병력의 즉각 철수할 것 △영흥도 공권력 투입을 방조한 최기선 인천시장은 적극 사태해결에 나설 것 △영흥도 저질 유연탄 발전소 계획의 백지화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간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 제1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식과 정신계승 국민대회

·때: 5월 17일(토) 오후 2시

·곳: 종로3가 중보공원

#### 경기여상 관선이사 파견 서울시 교육위원회 결정

3개월 간 학생들의 등교 및 수업거부가 계속된 경기여상 사태가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에서 경기여상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시 교육위는 지난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경기여상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여상의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회계부정이 9백82건 총 13억1천5백74만원이나 되는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92년 당시 경기여상에 정규학교를 인가해준 황선명(당시 교육청 행정과장, 현 용산도서관 관장) 씨와 윤영렬(현 남산도서관 관장) 씨에 대한 중징계와 학교운영자금인 5억4천여만 원을 재단측이 유용한 것을 목인한 감사과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학교설립자인 김일윤(신한국당 국회의원) 씨와 이사장 김일환 씨에 대해서는 경기여상에 투자기로 한 17억을 즉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바로잡습니다

16일자 <인권하루소식> '행사와 동정' 중에서 [5·18문제 완전해결과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토론회]는 17일에서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관련 두 권의 책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일제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을 강제로 연행 혹은 속임수를 써서 전쟁터로 끌고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부렸던 중군위안부의 전모를 파헤친 보고서가 나왔다.

이 글은 현재까지 공개되고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착실히 이용해서 쓰여진 것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단행본으로서는 처음 발행된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의의는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현실운동으로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록으로서 정리하고 연구성과로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이 책은 정선대로 불렀던 '위안부'에 대한 개념 정리에서부터 위안부 정책이 실행되던 당시 일본과 조선의 사회·정치적 배경, 군위안소 운영실태와 위안부들의 삶의 궤적,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적 연대활동 등 일체의 활동과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정대협 진상조사위 엮음, 역사비평사 펴냄, 1만3천원)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본격적인 연구서라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2」는 피해자 증언집이다.

한국정선대연구회는 무엇보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데 그 뜻을 같이 해 1집을 낸 후 수년에 걸쳐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증언 채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6명의 증언을 2집에 실기로 한 것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할 당시 국내에 있던 모든 자료를 태워버리고 민간단체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책은 역사 위에 당당히 선 할머니들의 자기 고백이다.

(정대협·정선대연구회 엮음, 한울 펴냄, 8천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성폭력방지법,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등 몇몇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은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김영삼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여성폭력·인권 분야에 대한 발표를 맡은 신혜수(한국여성정의 전화) 회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여성 및 사회단체의 요구에 떠밀려 대응하는 등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신 회장은 여성인권을 성폭력, 가정폭력, 일본군 '위안부', 매춘여성 문제 등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여성인권과 관련한 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는 92년 대선시 김 후보의 공약사항, 95년 10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여성개발부문계획(92-96)' 등이 참고되었다.

#### 성폭력특별법 개정 촉구

먼저 성폭력문제와 관련해 신 회장은 “정부가 93년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했지

만, 친교죄가 전면 폐지되지 못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학대를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 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 일본 정부의 배상 받아내야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신 회장은 “정부가 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춘문제와 관련, 96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으로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보호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매춘으로 이익을 보는 중간착취구조를 없애는데 주안점

### 주요 공판 안내

#### ▶5월 20일(화)

이용식(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합의2부 311호 속행  
김종미(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부 311호 속행  
정지아(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부 311호 속행  
진관섭(국보법 위반 간첩등) 오전 10시 합의2부 319호 선고

-서울지법 형사국

1997년 5월 20일(화)

제 8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이 놓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신 회장은 “성의 착취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포주, 유흥업소, 인신매매단, 이들과 연결된 단속경찰의 비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정폭력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게 될 경찰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자와 국민에 대한 교육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여성노동자 인권에 대한 정책 수립 △여성 인권적 시각으로 태아 성감별에 따른 여아낙태의 문제에 접근할 것 등이 주요한 여성인권 문제로 지적되었다.

## “진보적 국제소식 전달”

### IPECK <아침세계소식> 발간

한국국제문제연구회(대표 이창수 전 진보정치연합 국제국장, IPECK)는 20일 진보적 국제문제 전문정보지 <아침세계소식> 창간호를 발간한다.

이창수 대표는 “국내언론이 한쪽 시각만 전달하는데 문제를 느끼며, 국제문제를 진보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편, 해외 노동·진보단체들의 활동소식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3일 준비호를 발간했으며, <아침세계소식>에서 정치, 노동, 환경, 인권, 여성, 경제 등을 두루 다룰 예정이다.

국제적 사안을 국내 진보진영 및 관련 연구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이 소식지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주 5회(화-토), A4 용지 크기로 10쪽 안팎 분량으로 선보인다. 또한 구독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 986-0025

## “5·18문제 해결안됐다”

###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

대부분의 5·18유가족들이 새로이 조성된 신 묘역으로 이장을 한 뒤 구 묘역에는 20여 구의 시신만이 남은 가운데, '5·18 문제의 실질적 해결없이 신 묘역 이장을 반대하는 5·18 유가족들의 모임'(백옥기·전계량 씨등 22명,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모임)은 18일 성명을 통해 '올바른 5·18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남은 시신들은 민주화과정에서 숨겨진 이한열·박승희·조성만·이내창 열사 등인데, 신묘역이장반대유가족모임은 “조성된 묘역을 마다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5·18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18문제의 해결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는 이유로 △청문회와 가해자들의 재판과정을 통해 발표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들 유가족은 국가기념일 제정과 묘역성역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 승격과 국가유공자 대우 등의 후속절차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했다.

### 5·18 광주 방문기

#### 정부 5·18기념식에서 쫓겨난 사람들

광주, 그 처절했던 항쟁이 있는지 17년만에 학살주범의 일부가 법정에서 중형을 받았고,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느 해보다 더 기쁜 마음을 안고 17일 밤 고속 버스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망월동.

이제 웬일인가. 망월동 묘역에 들어서는 길 곳곳에는 백골단과 전투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 신 묘역의 단장은 어처구니없게도 5·18 열사들과 5, 6공 시절 숨겨진 열사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래서 이내창 열사, 이한열 열사들이 잠든 '구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새로 단장한 5월의 영령들이 잠든 '신 묘역'으로 향했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의 발길을 백골단이 막아 나갔다.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자 “지금엔 정부에서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다. 그곳엔 '공식 초청된 인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곧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밀고 밀리는 몸싸움 속에 부상자가 속출했고, 주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합세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힘은 백골단과 전경의 저지선을 뚫고 신 묘역으로 향했다. 높이 선 기념탑 앞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도중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 김영삼'이라 쓰인 화환을 발로 밟아버렸다. 수많은 참배객들의 분노에서 '5월문제 완전해결'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우(과거청산국민위 간사)

## 주/간/인/권/호/름

(97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 ◆ 5월 13일(화)

북녘동포돕기 자선콘서트 '정명훈과 함께하는 거대한 사랑 큰 잔치' 정부압력으로 무산, 이에 민간단체들 강하게 반발/광주시의회, “희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과 5·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촉구/노동부의 제3차 개입은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는 지침에 노동계 강력 반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일 국제학술 간담회' 갖고 한·일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기지반환 촉구 공동성명 발표/법무부, 석탄일 가석방자 명단에서 양심수 제외/세계보건기구, 인간복제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안 통과

#### ◆ 5월 14일(수)

한겨레신문사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공동주최, '북녘 어린이에게 쌀을' 행사에 2천5백여 명 참석/국민회의·자민련, 정명훈 씨의 북한동포돕기 자선음악회 무산과 관련해 정부의 부당한 압력 비난/독일 <프랑크푸르터루트사우> 보도, 하루평균 30-40명의 굶주린 북한주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 ◆ 5월 15일(목)

전교조 서울지부와 성균관대 등의 주최로 열릴 예정인 북한청소년돕기 문화행사 원천봉쇄/과거청산국민위, 각계인사 1980명의 연명으로 '5, 6공 잔재 완전청산과 전·노 전직대통령 사면반대 선언'/민주노동,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삼성그룹 부당해고 및 무노조 규탄대회'/그린피스, 대만이 북한에 이전하려는 핵폐기물에는 방사능 정도가 높은 물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폭로/주한미군측, 주한미군이 보유중인 열화우라늄탄이 2월 관리소홀로 잘못 분류돼 경기도 연천군 광사리 폐폭발물 처리장에서 폭파처리돼/서울시 교육위원회, 경기여상에 관선이사 파견 결정/과거청산국민위, 5, 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 5월 16일(금)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울 씨 장례 경찰측의 도청앞 노제등 불허로 못치러/인천 중부경찰서, 16일 구속된 영흥도 주민들의 석방요구하며 시위법인 혐의로 영흥화전 건설 반대 인천시민대책위 25명 연행/노동부 발표, 96년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피해자 모두 3만19천2백17명으로, 96년에 비해 3천3백63명(9.4%) 증가/정부 내년 8월 전국민연금을 실시이전에 최고 보험료를 12-18%로 크게 인상방침/서울시내 15개 대학 4천여 명 일제히 '5·18정신 계승 결의대회' 열고 전노 사면반대와 대선자금 공개, 김영삼 정권퇴진등 요구시위/전국연합, 과거청산위 등 3만3천7명이 참여한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대정부 청원서명'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

#### ◆ 5월 17일(토)

수원 원천동 택지 개발지구 철거민 27가구 7개월째 철담투쟁

#### ◆ 5월 18일(일)

5·18민중항쟁 기념식 정부주관으로 처음 열려/소비자보호원 발표, 고교 3학년의 25.7%가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질환 치료 받은 경험있어/한총련 소속 대학생 2천5백여 명 류재울 씨 장례 보장요구 시위



인권  
시평

#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곽 노 현 (방송대 법학) 교수

지난 토요일 광주에 다녀왔다. 새로 단장된 망월동 묘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5.18민중항쟁 희생자 추모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새 묘역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올리긴 했지만 광주는 별다른 기쁨이 없는 듯하다. '구국의 결단'이 내란의 결의로 단죄되고 '반란폭도'가 민주투사로 바뀐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럴만도 할 것이다. 그래도 광주에는 거리마다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갖가지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서울에는 아예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흔적마저 없다. 공식행사는 커녕 그 흔한 플래카드 하나 볼 수 없는 것이다.

### 올해도 광주만의 행사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지시가 있었던 95년 11월 24일에도 환호성이 없이는 마한가지였다. 거리는 조용하기만 했다.

마땅히 환영할 일이긴 한데 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었다. 뭘지 도깨비 방망이에 휘둘 듯한 기분이었다.

그후 약 2주간 어지러운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소원이 전격 취하되었으며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졌다. 전두환의 골목길 저항이 있었으며 새벽압송과 전격구속이 뒤따랐다.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개명했고 총리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꼬마민주당은 조금도 공조하지 않았고 특별법 제정의 주도권은 어처구니없게도 민자당과 검찰이 쥐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법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진상규명, 형사처벌,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이라는 5대원칙은 특별법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진실규명위원회도, 특별검사도, 기념재단도 채택되지 않았다. 더욱이 그후의 경과

를 보면 특별법제정을 의미있게 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의 뜻이 흐려지고 안기부법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등 민주 후퇴가 있었다. 더욱이 금년 들어서는 한보사태가 불거지고 김현철 비리가 폭로되면서 정권과 국가 모두 휘청거리고 있다.

### 알맹이 빠진 5·18 특별법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런 상태에서 5.18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였으니 그 결과가 신통할 리가 없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5.18쿠데

대해서도 공식적 과거청산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아있는 것은 다만 80년의 신군부 실세 여나문 명에 대한 형사처벌일 뿐인데 그나마 정략적 사면론이 횡행하고 있어 언제 물거품이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 집권세력들 자기사면 요구

답답하다. 5.18재판은 본격적 과거청산의 계기가 되지 못한 채 과거청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건재를 자랑하고 있는 당시의 내란집권세력들은 이런 입장에서 틈만나면 전,노씨에 대한 조기사면을 주장한다. 뻔뻔스럽게도 자기사면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들은 국민화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조건 사면해야 한다고 목적을 높인다. 하지만 국민화해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장기수들과 양심수들부터 사면해야 맞다. 전, 노씨의 사죄를 조건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기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란다고 해서 사면해야 한다면 징역살 죄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정 사죄하고 참회하는 자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사죄와 참회는 사면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본격적 과거청산과 과감한 민주개혁을 통해 과거 내란정권의 집권여파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 이것이 사면의 충분조건이다. 그전에 운위되는 사면은 사법의 권위를 우롱하는 것은 물론 5.18을 국가기념일이 아닌 지역기념일로 교차시킬 뿐으로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구독료 납부를 바랍니다**  
**자료번호 761884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전,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21일(수)

제 8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재일 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처분을 연장해왔었다.

이 씨는 95년 출소후 줄곧 일본으로의 귀국을 요청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지난해 5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월 1일엔 자신의 출국금지기간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부산 공항에까지 나갔다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금지처분 연장을 통보받고 되돌아오기도 했다.

이런데 법무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인도적 조치'를 요구해온 인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문제와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고령인데다 병든 몸인 이 씨가 마땅히 가족과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정부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이 씨의

출국을 위해 애써왔다. 천주교인권위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인도적 조치를 취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현재 복역중인 재일동포 출신 장기수들은 손유형(전주교도소, 17년 구금), 김장오(대구, 14년), 박수관(대구, 14년), 김병주(안동, 14년), 서순택(대전, 7년) 씨 등이며, 이 가운데 손유형, 김병주 씨 등도 출소 후 일본 귀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와 김 씨는 잔여형기가 1-2년 정도 남아있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2천년대 초반까지는 출소할 예정이다.

###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

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충북교육청이 오창균(단양 매도중) 충북지부장 등 2명에게 징직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데 이어, 전국 6개 지역 전교조 지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징계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은 김

귀식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2명, 강원, 인천, 전남, 대구, 부산지역 지부장 등이다.

전교조는 "현장 출신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곧 전교조 탄압의 본격화를 의미한다"며 "국제노동기구, 국제교원단체연합회 등과 연대 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 탄압에 대해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8주년을 맞아 지역별로 창립대회를 갖는 등 합법화 추진 일정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언론 자료 국가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3부(최세모 부장판사)는 20일 재야단체의 동향을 친북인상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되었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0, 속명 박용모)스님에게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친북인사에게 수집, 제공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가 지적한 "기소 만기 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지 공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초과된 5일은 미결구금일수에 삽입하도록 했다.

진관스님은 94년 11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팩시밀리등을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등과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 김영태, 김인서씨 등의 복송을 추진해 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 주요 공판 안내

- ▶5월 21일(수) 나현균(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단독, 오후 5시, 524호, 속행
- ▶5월 22일(목) 조성우(민족회의 정책위원장, 국보법), 합의3부, 오전 10시, 303호, 선고 이동우(국보법), 10단독, 오전 10시, 525호, 선고
- ▶5월 23일(금) 정승화(내란방조), 합의 23부, 오전 10시, 311호, 신건 박진영(한총련, 국보법 찬양·교무 등), 합의 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하인희(국보법), 합의 7부, 오후 2시, 423호, 선고

### 광주지역 80년 5월 방블 류재을 장례 투쟁, 중상자 속출

지난 3월 시위도중 숨진 류재을(조선대) 씨의 장례를 놓고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현재까지 총 6백여 명의 대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경찰이 던진 돌과 직격최루탄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학생은 직격최루탄에 맞아 안면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직격최루탄 파편에 의해 실명 위기에 처한 대학생 등 7명의 중상자가 조선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조선대 응급실을 거쳐간 학생은 2백여 명이 넘지만 신분상의 우

려 때문에 곧바로 퇴원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장례행렬이 조선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경찰이 돌과 최루탄을 퍼부어대며 학교로 진입하고, 밤만 되면 거의 모든 최루탄이 직격탄으로 발사된다"고 밝혔다.

### 5, 6공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

80년 5.18부터 93년 2월까지 기간동안 안기부, 경찰, 보안사(현 기무사) 등으로부터 당한 인권피해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이제 5, 6공 군부독재시절의 공포와 어두운 기억을 용기있는 증언으로 건어냅니다.

전화: 02) 762-4194 팩스: 02) 744-6189 컴퓨터통신: impunity(천리안)

### 멕시코 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 대우 노조, 진상조사 및 '해외경영 윤리강령'체결 촉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세계노동자투쟁속보 97-3호>에 따르면, 멕시코 소노라 산 루이스 리오 콜로라도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호송 마켈라도라 전자'의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인 경영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으며, 비인간적인 노동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마켈라도라 노동자 지원위원회(SCMW 619-542-0826)도 최근 인터넷을 통해 "한국인 회장과 두 명의 이사는 멕시코 여성노동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섹스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해왔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또 "한국인 간부가 정기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노동자들을 만졌으며, 이들을 '개'라고 부르는 등 심한 모욕을 주었다"고 전했다.

이 공장의 멕시코 노동자들은 성적 학대의에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이들의 일당은 하루 미화 3.37달러이며, 다수의 노동자들이 오후 10시까지 시간의 노동을 하면서도 잔업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 공장은 납과 유기용제를 많이 취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보안경과 마스크 등 적당한 보호장비도 없이 노동시간 내내 유해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 현지 노동자 5명은 한국인 경영진의 비인간적 행위 등에 항의하다가 해고당했으며, 현재 한국인 경영진을 성추행, 구타 등 총 18건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정부당국에 고발한 상태이다.

한편, 호송전자는 대우전자의 하청업체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의장 이은구)는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등을 촉구하며, 지난 6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전자 배순훈 회장 등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대노협은 "국제인권단체가 대우그룹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명예와 위신을 회복하고 올바른 세계경영을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5월 31일까지 답변이 없다면 김우중회장을 면담해 사실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노협은 진상조사와 더불어 '대우그룹의 해외경영 윤리강령'을 작성해 노사간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지난 9일 제네바에서는 제18차 고문방지위원회가 회기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독립적인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며, △변호 상담자의 임의 없는 심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혐의자를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킨채 잡아둘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혐의자가 재판받기 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사형 유예기간은 영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특히 2주간의 회기 동안 각국의 고문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년간 과도하게 사형을 사용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현재 유예중인 사형을 영구히 유예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위원회는 덴마크에 대해서도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특히 공판 전인 구금자의 경우 단독감금의 사용을 철폐하라"고 권고했다. 위위원회는 또 나미비아의 일부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부가 고문행위의 책임자를 신속히 수사하고 응당히 처벌하지 못한다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덴마크가 전 세계의 민간 고문희생자 재활프로그램에 대하여 대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한 것 등을 긍정적 인 측면으로 언급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 30년간의 군사독재가 인권침해 가 해자를 사면하지 않은 점 등도 긍정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87년 발효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1백2개국 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도 95년에 비준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 조약의 감시위원회이며, 차기회의는 1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차기회의에서는 아르헨티나, 사이프러스, 쿠바,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의 보고서가 검토될 예정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22일(목)

제 8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용기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전두환 정권하에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 사실을 용기있게 폭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5공 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 (공동대표 정해숙·박정숙·박재순, 5정협)는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의 혹독한 고문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었던 '아람회' '오송회' '한울회' 사건의 희생자 11명의 수기를 묶어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살림터)를 지난 18일자로 펴냈다. (문의 : 3141-6553)

이들은 『역사의 심판...』을 펴내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역사의 증언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야만적인 고문과 폭압, 역사의 왜곡·조작·은폐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이라며, "우리의 증언이 5공의 폭압에 묻혀 있던 역사적 진실의 발굴과 과거청산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역사의 심판...』을 통해 희생자들은 "5공 대공분실 지하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제조창이었다.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영장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수십 일간의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둔갑'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환각, 환청, 파라노이아(과대망상증) 현상을 경험했고 심지어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 일각의 '전두환 사면론'에 대해서도 "5공의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삶을 갈가리 찢긴 민중이 아직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고,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다 희생된 5공 정치범의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살자'의 재판이 '사면'으로 이어진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정치쇼'이며 역사의 사기극이 될 것인지 책임 당사자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5정협은 전두환 정권에 항거하다가 희생된 5공 정치사건 피해자들의 모임으로 5공 인권탄압 진상규명과 5공 정치범 일반의 명예회복을 위한 '5공 정치범명예회복특별법' 제정 등을 목표로 지난 4월 12일 발족했다.

#### ■ 아람회 사건

81년 정해숙(당시 대전고) 씨 등 교사 6명을 포함한 군인, 경찰, 검찰청 직원 등 11명이 '아람회'란 좌경용공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처벌된 사건이다. 이들의 모임은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소모임에 불과했으며, '아람회'라는 명칭은 구속된 김난수(당시 육군 대위) 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였던 일을 수사기관에서 '아람회' 조직을 결성한 것이라고 조작해 만들어낸 것이었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재판장 김화세, 판사 이인제 등)는 박해전(당시 용문중 교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재판장 이정락 등)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83년 형집행정지로 전원 출소했다가 88년 전원 사면복권됐다.

#### ■ 오송회 사건

82년 박정석(당시 군산제일고) 씨 등 교사 9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좌경의식화 교육을 실시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오송회라는 명칭은 수사기관이 만든 것인데,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이 조작임이 드러나자 이른바 '편면적 공범' 이론을 들고 나와 이적단체 구성의 공소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1심에서 3명이 1-4년, 나머지 6명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오히려 이 판결이 고문에 의한 조직의 증거라는 여론이 높아 2심에서 전원에게 1-7년씩 중형이 선고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도 88년 전원 사면복권되었다.

#### ■ 한울회 사건

사건 관련자들은 81년 기독교 청소년 30여 명이 모여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산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무죄였지만, 과거환송된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또다시 유죄를 선고하고 재상고심에서 그 선고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사건 관련 이규호 씨 등 3명은 징역 4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고 83년 8·15 특사로 출소했다.

#### 바로잡습니다.

21일 2면 류재을 장례투쟁 기사중 "류씨의 장례를 놓고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경찰의 충돌이 계속"에서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광주지역에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로 정정합니다.

20일 2면 '5·18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모임' 기사중 구묘역에 남은 묘지는 이한열 열사등 32명의 열사묘소뿐인 것으로 잘못보도되었습니다. 열사들의 묘소외에도 80년 5·18 당시 희생자 20여명의 묘소가 남아있으며, 신묘역 이장반대 유가족모임은 바로 5·18 희생자들 묘소 이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인권영화 ⑥ <캐나다 베이컨>(94년작)

군산복합체, 독점자본에 대한 통쾌한 풍자

감독: 마이클 무어/출연: 존 캔디, 빌 넌

코미디영화가 되려 호러영화(공포영 화)보다 더 끔찍할 때가 있다. <캐나다 베이컨>은 코미디 장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간혹 호러영화를 희극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되지 않고 소리소 문없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그러나 <로저와 나>라는 다큐멘터리로 일약 그 해 다큐멘터리 감독의 기린아로 떠오른 마이클 무어 감독을 기억하는 사람이라 면 반가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캐나다 베이컨>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적 모태인 다큐멘터리 작품 <로저와 나>의 설명을 통해서 본다면 이해가 한결 쉽다. <로저와 나>는 공장을 철수해버려 한 마을을 졸지에 실업자 마을로 만들어버린 제너럴 모터스 사장 '로저'를 만나기 위해 쫓아다니지만 결국 못만나는 '나'의 움직임과 흥물스런 거대 쓰레기(공장)를 간직한 채 점점 망해가는 마을과 사람들을 함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로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고발 보고서다.

전작의 연장선상에 있는 <캐나다 베이컨>은 군산복합체에 얽힌 이해관계들을 다각도로 공격하는 해학과 풍자가 가득한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이 영화의 의미심장함은 그냥 유머로만 넘길 수만은 없다. 마이클 무어가 <로저와 나>를 만들 때와 비슷한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런 상황이 초래된 보다 넓고 본질적인 원인을 캐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을 등장시켜 주변 요소인 정경유착의 비리를 통쾌하게 꼬집으면서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극적장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냉정중식 후, 무기 회사에 근무하던 '뉴욕 나이아가라주(州)'의 주민들 대부분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시작된다. 돈밖에 모르는 무기회사의 사장 해커는 이 상황이 너무 불만스럽다. 대통령과 보좌관 그리고 국방장관은 '공동의 적'이 없어 통치가 힘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은근 구상 끝에 웃기지도 않게 캐나다를 '적'의 자리에 두기로 결정한다. 작전명 '캐나다

베이컨'. 캐나다가 미국을 침공하기 위해 국경근처에 전진 기지를 둔다면, 매스컴을 통한 보도가 진행되고, 전국적으로 반캐나다 감정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국경지역에 접한 나이아가라 주민들은 실직보다 '애국적' 사명을 갖고 민병대를 결성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다. 그 와중에 무기회사 사장의 음모가 서서히 진행된다.

이 영화의 재미는 서로의 이해에 의해 흩어진 진용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공동의 적에 대응하는 과정을 과장했지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병대의 어실픈 행동이 더욱 반캐나다 감정을 고조시키기도 하지만, 해커의 핵무기 발사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대통령도 무기회사 사장도 아닌 민병대의 착하고 어리숙한 행동으로 결말이 이어진다. 결국 위대한 나라 미국을 이끌어 가는 힘은 권력자, 정치가, 기업가가 아닌 우왕좌왕하면서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시민임을 배경에 깔고 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이면서도 미국영화라는 이유 때문에 또 영웅주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보이기도 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냉전후 적이 없어진 초강대국 미국이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해괴한 장난을 할지 모른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주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핵무기 사업이 다른 나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언론도 이익을 따라 정부의 영무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로저와 나>는 높은 현실의 벽에서 좌절할 수 밖에 없었지만, <캐나다 베이컨>은 심각한 현실도 얼렁뚱땅 맞추다보면 결국 통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전미희(민주언론운동협의회/영화인)

'제3자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노동부가 최근 '제3자 개입 금지'를 부활시키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1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부의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동부가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이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켜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저해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중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 ILO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2일 "노동조합이 지원받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주거침입, 업무방해죄, 집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내려보낸 바 있다.

행사와동정

- 녹색소비·녹색생산을 위한 여성환경한마당
  - 때: 5월 25일(일) 오후 4-6시 · 곳: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제24차 회의
  - 때: 5월 27일(화) 오후 7시 · 곳: 향리교회 2층 홍근수 대표 사무실(☎776-9141)
-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9회 월례토론회
  - 의정활동을 통해 본 정치현실과 향후 정치개혁 과제(천정배 의원)
  - 때: 5월27일(화) 오후 7시 · 곳: 국민회의 회의실(참가비 5천원)
- 5·18 여성제
  - 때: 5월23일(금) 오후6시30분-8시30분 · 곳: 광주 YMCA 1층 대강당
  - 주최: 광주전남여성문제특별위원회(☎062-523-7900)
- 5·18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토론회
  - 때: 5월24일(토) 오후2시 · 곳: 광주 무등컨벤션센터
  - 주최: 5·18 광주민중항쟁부상자회(☎062-526-319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23일(금)

제 889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지난 2월 포항제철(회장 김만제)로 매각된 삼미특수강(창원 소재) 노동자들이 교묘한 법논리에 의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은 지난 2월 17일 계약을 통해 삼미특수강의 강봉·강관 공장을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2천3백42명의 직원 가운데 1천7백여 명만을 신규채용하고 5백여 명을 일터에서 내몰았다. 회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포철이 부당한 정리해고를 실시했다"며, 지난 3월 24일부터 60일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미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새 노동법에도 불구하고, 5백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자리에서 내몰린 것은 포철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도'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나갔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양도'에 의해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엔 노동자들도 고용 문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산양도'에 의한 경우엔 인수기업이 고용승계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삼미의 인수과정이 영업양도나 아니냐"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해석의 상이함과 정부를 상대

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 시위보장 촉구' 집회

때: 5월 23일(금) 오후 1시  
곳: 경찰청 맞은편 인도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로 싸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어 왔다.

포철 '무노조 정책' 관련 있는 듯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서울상경투쟁을 진행했으며, 현 3차 상경투쟁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센터 등지에서 연일 집회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고, 지금까지 소환한 유인물만도 14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남(31) 노조위원장은 "삼미특수강은 기업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의 첫 사례인 만큼 올바른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철이 이같은 저항을 감안하면 서도 고용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노조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삼미특수강 노조는 조합원 2천여 명을 포함한 대규모 노조로서 민주노총 내에서도 핵심 노조 가운데 하나였다. 포철이 삼미특수강의 노동자와 노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기존의 '무노조 정책'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은 명약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원특수강은 지난 3월 17일까지의 신규 채용 과정에서 1백여 명의 지원자를 탈락시켰는데, 그 중엔 노조활동 경험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창남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권리"라며 "갈수록 생계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술 및 행정해석 관계 등에 따르면, "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구출물·기계장치·공기구·차량운반구·재고자산·리스자산·전산소프트웨어·업무매뉴얼 등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정리해고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된 전문가들의 해석도 상반되는데 회명합동법률사무소는 "계약서의 내용이 물적자산의 개별적인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사노무제도를 수립하여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양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신인령(이화여대) 교수는 "포철과 삼미 간의 매매는 기업의 부분양도 내지 분할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관계 역시 이전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근로자보호라는 노동법적 해석이 요구된다"며 "비록 계약서상으로 '자산양도'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인수된 인적·물적 요소가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생산제품 역시 동종의 것이라면 이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것은 정리해고의 일종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위한 토론회

5·18 국가기념일 제정은 광주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새 출발점인가. 오히려 5·18 사업은 유골이 갖추어져 있는 사망자 중심의 사업으로 일관되어 기념관 건립과 신 묘지 단장이라는 상징적 기념사업에 편중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 바라본 광주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인가.

오는 24일 광주 무등 컨벤션센터에서 5·18광주민중항쟁부상자회(회장 박영순) 주최로 열리는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 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토론회'는 이 점에서 어느정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리에서는 5·18 피해자들의 장애현황과 대책마련(변주나 전북대 교수), 5·18피해자 치료 및 재활방안에 관한 재활의학적 접근(박병권 조선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현황(안성례 시의회 5·18특위 위원장)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변주나(인류학 박사) 교수는 '5·18 피해자들의 장애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5·18 국가기념일 제정은 5·18피해자들을 위한 기본생존권 보장이 라는 후속사업등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18 장애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후속사업은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약속한 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4년 광주시는 5·18관련하여 인정된 피해자를 모두 3천4백16명으로 보고했다(사망자 154명, 인정된 행불자 47명, 부상자 2,710명, 연행·구금자·수형자 50명, 부상·후유증·사망자 83명). 이밖에 보상과 관련없이 미확인된 행불자 1백7명, 부상부위와 관련없이 자살, 교통사고등으로 죽은 사망자가 50-60명선에 이르러 이들을 합치면 피해자는 모두 3천5백83명에 달한다.

즉, 사망자의 17.7배에 해당하는 부상자, 3.3배의 교도소 생존자, 행불자 47명

에 대한 관심과 후속작업은 도외시 되어 온 것이다.

#### 직업재활대책 마련해야

변 교수는 5·18 관련 부상후 사망자는 94년말 83명에서 95년 8월 총 92명으로 재조정 보고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숫자는 불과 8개월만에 9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매일 1명의 부상자가 사망한 셈이다. 이점에서 2천7백여명의 부상자와 5백5명의 연행·구금·수형자들이 17년이 지난 지금도 5월 후유증으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현황을 △사회적(직업적) 장애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등 세 부분으로 분류했다. 우선 직업적 장애 측면에서 보면 장애상태가 심할수록 그 원인은 총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상자 대부분이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부분 결손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상실된 노동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직업재활대책 마련과 함께 이들을 먼저 고용하는 '5·18 장애인 선 고용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 행정관리 아닌 치료대책을!

또한 90년 당시 보상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의 1백%에서 신체 및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장애의 주된 증상은 총알이나 파편보유에 의한 통증과 가려움증, 그리고 통증완화를 위해 투여된 마약등의 약물중독증이 대표적이었다. 변 교수는 "이들 대부분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94년 부상자 자가보고에 의한 추후진료 요청서에 의하면 4년이 지난 후 신경통 및 각종 통증에 의한 고통이 부진중이나 정신증보다 급속히 증가해 추후치료의 필요성이 19%에서 62%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특수 부상자에게 지급하고있는 마약성 진통제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차원의

관리보다는 치료차원에서 통증치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외과기술의 한계성으로 정치, 외교적 차원의 방법을 동원한 국외치료를 권장했다.

#### 정신재활상담소 개설필요

정신적 장애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통증장애가 주된 장애원인이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에 대한 영구적인 불신, 심신 지구력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부적응,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상자들은 심지 간첩이나 폭도로 매도되어 지난 17년간 5·18 당시의 외상후 충격보다 더 아픈 사회적 고립감을 감수하며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 교수는 가족들의 정신피해 역시 심각해서 자식의 외상후 부모에게 스트레스 증후군과 화병에 의한 부모의 연쇄사망도 상당수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정신재활상담소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요구 국제교원노동조합연맹 항의서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은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IT) 사무총장 프레드 반 리우벤 씨가 21일 안병영 교육부 장관과 유인중 서울시 교육감에게 '김귀식 위원장과 유수용 서울지부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IT측은 서한에서 "김귀식 위원장등에 대한 징계는 '전교조 즉각 인정과 조합원들의 활동보장'을 내용으로 ILO 집행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306차 결사자유위원회 결정사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ILO와 OECD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정부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귀식 위원장은 6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IT 한국대표로 참석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24일(토)

제 8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어느덧 고질화된 경찰폭력에 대해 경찰과 국민의 경각심을 요청하는 집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10여 명은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건물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집회와 시위현장에서는 지난 3월 조선대생 류재을 씨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 4월 전남대 박민서 씨가 직격추탄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경찰폭력에 의한 불상사가 잇따라

발생해왔다. 또한 파출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 조준 사격해 총상을 입힌 채 구속했으며(3월 24일 천안), 달아나는 절도용의자를 총으로 쏘 사망케 하고(5월 19일 경주), 시위해산을 위해 실탄 3발을 발사(5월 19일 광주)하는 등 총기남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 행위는 집회나 시위 등 시국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파출소에서 경찰과의 실랑이 도중 사망한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일상적인 민생치안 확립과정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더불어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

단체나 학생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위협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국민기본권 유린행위"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권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소수의 인원이 참가한 자그마한 규모였지만, 경찰의 신경은 잔뜩 곤두서 있었다. 경찰은 '윗분'들에게 시위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전경버스를 동원해 집회장 앞쪽을 가렸으며, 집회 간간히 "확성기의 소리가 너무 크다"면서 집회를 방해하는 등 과민한 반응을 보여 주최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 작가회의, 북녘동포돕기 행사

민족문화작가회의(이사장 백낙청)는 24일 오후 5-7시 남산 송의음악당에서 '북녘동포돕기 시낭송 및 특별공연-한겨레, 큰사랑' 행사를 갖는다. 의:313-1486

#### 97년 주요 경찰폭력 사건

- ▷ 1월 9일 ·총파업과 관련해 병원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하던 남대문 경찰서 과장(수사과) 형사, 여성조합원 성희롱하고 취재중이던 노동자영상사업단 기자의 영명기와 불을 만지는 등 성추행
- ▷ 1월 16일 ·울지로 시위현장 촬영 중이던 노병권(30·인천영상집단 회원) 씨, 백골단 5-6명에게 끌려가 폭행 당한 뒤, 촬영테이프 모두 앗김
- ▷ 2월 1일 용인 신갈파출소에서 경찰과 실랑이 벌이던 노점상 민병일 씨 뇌사(13일 뒤 사망) · 인천 산곡파출소에서 이종호 씨 경찰에 폭행 당한 뒤 뇌사(11일 뒤 사망)
- ▷ 2월 25일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 20여 명 경기대학교 난입, 귀가중 또는 건물 내에 있던 학생 12명을 곤봉과 주먹 등으로 구타하며 연행·조사 뒤 훈방
- ▷ 3월 20일 ·조선대생 류재을 씨, 시위도중 사망
- ▷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 앞에서 시위 중이던 단국대생 박상태 씨,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해 허벅지 관통상 입고 구속
- ▷ 4월 28일 ·전남대생 박민서 씨, 집회도중 직격추탄에 맞아 두개골 함몰(수술 뒤 퇴원) ·서울대생 남윤국 씨,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시위 벌이던 중 경찰추에서 날아온 물체에 맞아 실명 우려(1차수술 뒤 현재 재수술 대기중)
- ▷ 5월 16-20일 ·조선대 시위 과정서 대학생 1명 직격추탄에 맞아 안면 함몰되는 등 대학생 6백여 명 경찰추의 투석과 직격추탄에 의해 부상당함

###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우토로 마을 진상조사 대표단을 파견한다. 대표단은 김경남(한국교회 인권센터) 목사, 박기호(천주교 인권위원회) 신부, 박연철(민변)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 대표단은 우토로마을 제일동포 격려방문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참가, 교도부 담당자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박연철 변호사는 27일 교도대학 학생회와의 초청으로 가질 '제일한 국민문제'에 대한 강연을 통해 우토로 제일동포 문제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시대 경도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종전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조선인들 스스로 집단촌을 형성해 왔다. 현재 제일동포 3백80여 명이 살고 있으며, 88년 12월부터 일본 서일본식산 회사측과 토지분쟁으로 현재까지 법적·사회적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토지소유권 문제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전후배상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 허인회 씨 원심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95년 이른바 '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교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합의7부(부장관사 정덕홍)는 "허 씨가 김동식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8일 1심 재판부(판사 유원석)는 "김동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허 씨의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 제품 불매운동·정책참여 요구 여연, 여성환경선언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한명희, 여연)은 '97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25일 "녹색소비·녹색생산을 위한 여성환경한마당"을 열고 여성환경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연은 여성환경선언을 통해 "정부는 환경오염의 관리와 규제에만 집중해 왔

을 뿐, 종합적인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며, 환경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결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까지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율  
지로번호 7618848

### 인권교육에 관한 책 두 권

#### 『인권교육의 기법』 -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

청소년들이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단행본 『인권교육의 기법』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국제엠네스티 필리핀지부가 개발한 인권학습자료집 『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s』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을 옮긴 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각종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경제적 생활수준에 비교할 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 등이 취약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인권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 자신의 권리 알기 2) 권리를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3) 인권의 존중보호 그리고 증진하기 4) 국제적 유대를 향하여 등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인권교육기법과 전략들은 국제엠네스티 필리핀 지부에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및 주민에게 이미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9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유네스코와 유엔 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세계행동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필리핀지부 지음, 한국청소년개발원 엮음, 이용교·이희길 옮김, 인간과 복지(383-0743) 펴냄, 94쪽, 3천원)

#### 『청소년 인권보고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비추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현실을 볼 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1장에서 청소년 인권의 역사와 구성을 소개하고 있으며, 2 - 6장(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학습과 문화에 관한 권리, 시민적 권리와 자유,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까지)에서는 각 조항별 해설과 구체적 통계 및 사례를 들어 청소년현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또한 7장에서는 청소년 인권교육의 개념과 중요성을, 8장에서는 청소년 인권 보호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 용교 교수는 청소년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추기구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인권센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센터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관련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엮음, 인간과 복지 펴냄, 272쪽, 7천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27일(화)

제 8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말 한마디에 입 떼기는 세상

###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컴퓨터통신의 대중화에 따라 통신의 자유와 관련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CUG(전용통신망)를 폐쇄함으로써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가 이번엔 한총련 의장 등의 개인 ID를 중지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짓밟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보통신권 열철폐시연연대의 김영식 대표(ID: 노민해)도 "사법적 판단없이 행정부의 직권으로 통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력"이라며 "통신악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통신의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 정부, 컴퓨터 통신 규제 강화

지난 24일 컴퓨터통신 나무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의장 강위원(ID: hcyimsi) 최석원(hynews) 씨의 ID를 사용중지하고 게시물 및 자료를 전부 삭제한다"고 밝혔다. 나무누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수사기관에서 개인 신상조사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보안사범 계통이다"고 밝혀 통신공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분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부 장관 직권에 의해 전화,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의 박탈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불온통신의 내용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해 자의적 적용의 우려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컴퓨터통신 상에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총련 통신단(ID: 해방상명)은 "나무누리의 조치는 형사들의 구두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는 통신기본권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정부는 오히려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과 건의에 의해 통신수단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악안을 마련했다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김기중 변호사(민변 회원)는 정보통신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포괄적인 제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행사의 여지가 많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경남노협 김윤규 의장 등 구속 "삼성노조 지원 차단 의도"

경남노동자협의회(경노협) 김윤규 의장(47·민주주의민족통일 마산·창원연합 공동의장)과 박성철 사무국장(38)이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김 의장 등은 현재 경남도청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노협측에 따르면, 김 의장 등은 94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경노협 기관지인 <전진하는 노동자>와 관련,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노협의 한 관계자는 "김 의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중공업 내에서 노조결성을 추진하다 해고된 이재용 씨를 지원해 온 점과 관련해 이러한 지원을 차단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데 심증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직원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경노협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요 공판 안내

▶5월 27일(화)  
서미연(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서울지법 형사국

###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지난 23일자 민주노총 <세계노동자 투쟁속보>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13년 동안 금지되어 있던 정보수집기관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첩보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4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노조의 교섭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민감한 비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노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본부는 인공위성, 전자통신장치를 통한 통신을 해독하고 테러, 대량학살 무기확산, 마약거래, 전략적 천연자원 발굴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첩보안보기관의 정보센터이다.

84년 대처 정부는 노조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첼튼햄에 소재한 정보통신본부(GCIIQ)의 노조활동을 금지했다. 당시 대처 정부는 "정부비밀첩보기관에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노조규율'과 '국가에 대한 충성' 간에 수용 불가능한 갈등을 초래한다"며 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유례없는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한 뒤 정보기관 노조의 폐쇄를 선언했다. 더군다나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에게 1천파운드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며, 7천명 조합원 가운데 14명이 이러한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외무부장관은 첩보기관 노조의 복원을 선언하면서 이들 해고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류재을 씨 죽음, 익문사로 남아 24일 망월동 구 묘역 안장

지난 3월 20일 시위도중 숨진 고 류재을(20·조선대 행정) 씨의 장례식이 고인이 숨진지 65일만에, 끝내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치러졌다.

23일 운구행렬은 오후 4시20분경 도청으로 향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결국 도청 노제를 포기한 채 금남로 광주은행 앞에서 노제를 치렀다. 그 뒤 동신전문대를 거쳐 망월동 구 묘역에 류 씨를 안장한 것이 24일 새벽 3시20분경이다. 5백여 명의 학생·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류 씨는 지난해 3월말 역시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 씨 묘소 옆에 묻혔다(인권하루소식 5월24일자 참조). [광주=인권지기]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료 납부바랍니다. 지로번호 7618848

### 주/간/인/권/호/름

(97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 5월 19일(월)
  - 며고 1년생 김아무개 씨 여자아이 낳은 뒤 신문에 써서 화장실 안 선반 위에 버려 죽게 해/서울시교육청, 이날 중 전교조 지도부로 활동중인 현직 교사들을 중징계 방침/한총련, 조선대 앞서 고 류재을 씨 장례보장 요구하며 4일째 격렬한 시위, 이증 경찰이 파출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을 권총을 쏘 해산/서총련 대학생 5백여 명 연세대에서 '고 류재을 열사 장례지지 규탄 및 김영삼 정권조기 퇴진 결의대회' 갖고 격렬시위/미국 대통령 중국에 대한 최해국 대우 1년 연장 결정/인권운동가 헨리 아론(74) 씨 사망
- 5월 20일(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표, 외국인 연수생의 월평균 연수수당 68만9천1백64원/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진관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3년6월 선고/경·경, 3월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건에 대해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로 최종결론 내리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발표
- 5월 21일(수)
  - 종교·사회단체, 6월달까지 북한에 옥수수 1백만t 보내기 위해 정부가 적금 나설 것 촉구/20개 시민·사회단체,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열화우라늄탄에 대해 공개하고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요구/교육부, 교수 제임용제도 올 하반기중 대폭 개선키로/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전망/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복지관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전원 형사입건키로/투치족, 후투족 난민들의 대량학살을 조사하려는 국제인권단체의 현지접근 거부
- 5월 22일(목)
  - 정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키로/경찰청 보안국, '서울대 학생연대' 의장 오준호(국문 4) 씨 등 1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NHK) 보도, 일본정부 지문날인제 도대신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 방안 마련키로/터키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1백여 명의 쿠르트인, 터키군의 쿠르트 반군 소탕작전에 항의해 제네바 유엔사무소 건물 난입
- 5월 23일(금)
  - 대전 북부경찰서, 충남대병원에서 시위도중 눈 크게 다쳐 치료중인 정호연(25·충남대 중문과 졸업) 씨를 연행,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서울지법 형사합의7부 불고지침 의로 기소됐다 1심서 무죄선고 받은 허인회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 5월 24일(토)
  - 우리나라 도시 쓰레기소각장 중 가동중인 11곳 중 10개 소각장이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선진국 배출기준치의 최고 2백배 넘겨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
- 5월 25일(일)
  - 12·12 및 5·17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계기로 중고교 국사교과서의 관련 부분을 바꾸기로 했으나 일부 어구 수정에 그쳐 또다시 논란 예상/남북 적십자,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 물자 6월까지 곡물 5만t 지원 최종합의

###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김동환 (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 교수)

#### 인권 사명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서양학자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김영삼정권은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상 대통령이 갖는 그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아주 미미하다. 거기에 유교적 정서가 덧붙여져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한다. 대통령이 라는 용어도 문제다. 통치권, 통치행위 등의 용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용어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어울리거나 하는가.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한다는 말인가. 대권은 무엇이고 구름(이름 마리용, 대통령 경선후보예상자)이 웬말인가. 그러다 보니 박정희 부활론이 활개를 친다.

#### 박정희 군사독재 18년의 향수

박정희 군사독재 18년에 사회 각분야에서 명들지 않은 곳이 없을진대 어느덧 다 잊고 그 때가 그리운다. 자신이 빨갱이로 몰렸던 아픔을 아랑곳 않고 반공을

큼 청렴한 것은 아니다. 친인척관리문제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이(육인수 씨, 박정희의 처남) 어느 날 국회 문공위원장을 하게된 것은 그리고 30대에 농수산부장관을 하게된 것은(장덕진 씨, 박정희의 처조카사위) 모두 본인들의 뛰어난 능력만이였을까? 역사를 뒷걸음질치게 하는 우리들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만 요즘의 분위기는 너무 황당하다. 물론 김영삼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이 이러한 복고풍을 더욱 조장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퇴역적 자세는 금물이다. 특히 지식인 그룹인 대학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 박정희학수에 젖어 있는 꼴은 아직도 넘어야 할 시대의 어둠이다.

5.18광주민중항쟁이 국가에서 인정하

#### 민주와 인권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개념을 즐겨 쓰는 언론

는 법정기념일로 평가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의 기념일이 다. 캠페인성 운동이 아니었는데도 운동으로 격하·희석시킨 정부의 의도가 한심하다. 아직도 군부독재와 연결된 고리가 튼튼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장관이 그 당시 진압군 책임자였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셈이다. 전세계 언론인들이 분노한 5.18민중항쟁을 우리 언론은 모르쇠로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도 광주·전남지역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언론이 무관심일변도이다. 광주라는 지역적 한계에 갇혀버린 5.18을 전국화·세계화 할 일이 과제다. 몇 명이 희생당한가라는 수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는 가라는 인권유린차원에서 5.18은 재조명·재해석되어야 한다. 5월은 노동절, 법의 날을 시작으로 화해와 평화를 연상시키는 어린이날, 어

버날, 스승의날, 석가탄신일, 성년의날 등이 연이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준다. 그러한 5월에 갈등과 전쟁을 드러운 치욕의 현대사가 덧씌워졌다. 5.16과 5.17이라는 두 번의 군부쿠데타가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면서 민주는 아직도 실종된 듯한 지금의 상황은 민주국가로 가는 과도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5.18로 순화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 두 번의 쿠데타를 극복하는 길은 즉, 5.16·5.17을 뛰어넘어 저 평등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5.18민중항쟁을 분명하게 정당화하는 것이다.

#### 국민의 가슴에 못박아서야

민주주의를 그렇게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신의 다른 한편에는 나라남에 대한 절대충성과 복종을 지당한 것으로 믿고 사는 우리의 정치적 사고의 이중성이 민주화에 최대의 걸림돌이다. 인권부재의 실용현장을 외면하고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하지는 주장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친 적이 없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존재들에게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사면해야한다는 억지논리는 다시 한번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겠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나라남, 임금, 왕에 대한 말들부터 가려 써야한다. 민주와 인권, 화해와 평화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전제군주시대의 개념을 여전히 즐겨 쓰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언론은 이윤배반적 작태를 그만 두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하는 사회가 어떻게 민주사회일 수 있겠는가. 대통령님들의 구속이 세계적 뉴스거리인가. 부패가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는 부끄러운 세계적 뉴스일지 몰라도 대통령님들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님들은 직함이 아니다. 더더욱 특별히 취급될 일도 아니다. 부화뇌동한 권력해바라기들은 이번 기회에 사회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28일(수)

제 8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 6월 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87년 6월항쟁의 주역이 '파렴치범'으로 몰려 10년째 안타까운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인공은 87년 당시 대전에서 리어카 야채상을 하다가 항쟁에 참가했던 허정길(41) 씨. 그는 87년 6월 19일 밤 대전역 앞 시위도중, 전경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몰고 가다 전경 1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허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집시법 위반죄 적용을 받아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수인번호 2002번).

그러나,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 허 씨의 고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한다. 그날 허 씨가 시위대와 대치중이던 전경 저지선 쪽으로 버스를 몰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버스를 향해 최루탄이 난사되었고, 버스유리창을 깨면서 최루탄이 날아들었다고 한다. 이때 날아든 최루탄으로 인해 허 씨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에 당황하며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전경들을 덮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장 목격자로서 허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는 박영기(기념사업회 부집행위원장) 씨는 "버스의 앞뒤 유리가 최루탄에 의해 박살이 나고, 버스 내부가 최루탄으로 범벅이 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건"이라며 "살인죄 적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료의 사망에 격분한 경찰들이 조사과정에서 허 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자행한 끝에 '의도적 살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허 씨 석방대책위 구성 벌써 10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은 「대전충남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 산하 「허정길 석방대책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 대책위)를 통해서다. 대책위는 "허 씨가 파렴치한 살인자가 아닌 암울한 한 시대의 희생자라며, 6월항쟁 10주년 기념사업과 동시에 '허 씨의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한 단원운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9일 "6월 민주항쟁 10주년을 기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하며, 여기에 허정길 씨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6월 10일 6월 항쟁 1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허정길 씨 석방을 위한 거리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허 씨 석방문제를 여론화시키고 9월경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극심한 죄책감 속에 옥살이를 하면서도 허 씨는 "10년의 옥살이가 억울한 게 아니라,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혀 부당하게 대접받고 평가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년간 교도소에서 자신을 시국사범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교도소 당국과 마찰을 빚어, 서울·대구·김해·부산·원주·대전·강릉교도소를 거쳐 현 전주교도소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사업회의 심규선 사무처장은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죽인 자들마저 이미 석방된 상황에서 6월항쟁의 참가자인 허 씨에 대한 명예회복과 석방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방 탄원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책위에서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료 납부바랍니다.

지료번호 7618848

### 주요 공판 안내

- ▶5월 29일(목) 이태환(국보법 위반) 오전10시 2단독 524호 선고 함운경(국보법 위반)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선고
- ▶5월 30일(금) 서준형(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4단독 524호 선고 장정일(음란문서제조 등, 소설가) 오전10시 5단독 522호 선고 박수정(국보법 위반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강승현(국보법 위반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전정희(국보법 위반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변성민(국보법 위반 찬양·교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김현일의 2(국보법 위반 찬양·교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및 신건 김지영(국보법 위반 찬양·교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김은아(국보법 위반 찬양·교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김중상(국보법 위반 찬양·교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 ▶5월 31일(토) 이교관의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사저널 기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 출린 디스켓서 단체관련 자료 발견

### 구로지역 사회단체 잇따라 괴한침입

최근 잇따라 구로지역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이 털리고 있다.

얼마전 「구로사랑민주협의회」 산하 단체 등이 괴한들로부터 침입을 당한데 이어 지난주 일요일인 25일 새벽 「구로 청년회」(구로3동)에 2명의 괴한이 침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초 발생한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침입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행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건발생 당일 새벽 1시30분 구로청년회 사무실에 있던 구로청년회 소속 회원에 따르면 괴한들은 사무실 방마다 뒤졌고, 컴퓨터에 입력되어있는 자료를 빼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회원은 "사무실에 누군가 들어와 컴퓨터를 켜는 소리가 들렸고, 자신이 있는 방문을

열려고 해 안되겠다 싶어 '누구야'며 소리치자 놀라서 달아났다"고 전했다. 괴한들은 당시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디스켓을 꽂아둔 채 달아났는데, 지워진 디스켓을 복구한 결과 구로지역단체 관련 자료, 민주노동 운동,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자료 등이 드러났다.

이외관련해 구로청년회 등 구로지역 단체들은 27일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5월 6일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했는데,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던 각종 회의자료 등이 검색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회원과 강자 수강생 연락처 등이 도난당했다(인권하루소식 5월 7일자 참조).

## 원천 철거지구 긴급상황

### 경찰, 외곽봉쇄·전기 차단

경기도 수원 원천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철거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이 27일 저녁 8시 현재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채 공권력과 대치중이다.

이곳 주민 두 가구는 개발지구 내에 5층 철탑(일명 골리앗)을 세우고 7개월째 농성투쟁을 벌여왔으며, 현재 골리앗엔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주민 두 가구와 경기지역철거민연합 회원 등 1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농성자에 따르면, 경찰은 전경 6개중대로 외곽을 봉쇄한 상황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골리앗으로부터 반경 30미터 지역에 깊이 2미터, 폭 2미터의 원형 옹벽을 파 놓았다. 또한 경찰은 골리앗으로 통하는 전기를 차단한 채 서치라이트를 준비하는 등 진압작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 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

###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영흥도 주민과 공권력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구속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영흥도 화전 건설 반대운동과 관련해 이재남 씨등 7명이 구속된 데 이어, 22일엔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영흥화전 건설반대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성일(52), 이성춘(52), 강계환(50) 씨가 인천 담동성당 부근 여관에서 검문에 걸려 구속되었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정윤기(26·대책위 사무국장) 씨 등 주민 5명에게도 사전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흥도 내에는 3백여 명의 전경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민들은 공사에정지와 동인천역 부근 담동성당에서 각각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일 영흥도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갖고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할 예정이다.

##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 주요행사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회의  
때:6월 5일(목) 오후 3시/곳:성공회 대강당/주관: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주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6월 민주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
- ▶청년세대의 대합창 "그해 6월"  
때:6월 7일(토) 오후 6시/곳:마로니에 공원/주관:6월항쟁 10주년사업 청년추진위
- ▶시민문화제 "다시 6월로, 함께 민주주의로!"  
때:6월 7일(토) - 10일(화) 낮 12시- 오후 9시/곳:대화로 마로니에 공원
- ▶국민마라톤대회(제1회 시민달리기대회)  
때: 6월 8일(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곳: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금성무대)-연세대학교(총연장 5킬로미터)  
경기방법: 개인, 가족(3인 이상), 단체1(10명 이상), 단체2(61명 이상)  
주최: 6월민주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한겨레신문사
- ▶이한열 열사 10주기 음악회  
때:6월 8일(일) 오후 6시/곳:연세대 노천극장/주관:이한열 열사 추모사업회
- ▶보건의료인 가족한마당  
때:6월 8일(일) 오후 6시/곳:성균관대 유림회관  
내용: 6월항쟁 비디오 상영 / 4·13호헌철폐서명자 발언/ 장기자랑 등 문화행사
-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때: 6월 9일(월) 오후 4시30분-6시/곳:가톨릭문화관 7층 강당  
선언발표: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의 밤'에서 발표
-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의 밤  
때:6월 9일(월) 오후 7시/곳: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대한성공회 6월민주항쟁 10주년기념 미사와 기념비 제막식  
때:6월 10일(화) 오전 10시/곳:성공회 대강당
-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비 제막식  
때:6월 10일(화) 오후 3시/곳:서울대 IMC관 앞/주최: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 ▶국민대동제  
때:6월 10일(화) 오후 6시/곳:시청앞 광장(서울)  
주제: "참된 민주주의는 아름답다"  
내용: 시민길놀이, 기념식, 진혼제, 음악회 등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29일(목)

제 8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정부, 해도 너무한다”

### 북 돕기운동 내사 ... “강력대응 불사”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남북적십자회담의 타결로 북한동포돕기에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싶더니 경찰이 민간의 모금운동을 수사하겠다는 어이없는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27일 언론보도(문화일보 사회면)를 통해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각계에서는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종교단체는 제외하고 재야단체와 한총련에 국한해서 내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현재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총·전국연합 등 7개 단체가 참가한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등), 경실련 등 28개 단체가 참가한 「육수수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서영훈), 기독교계의 「평화의 쌀 보내기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종순 목사), 불교계의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공동대표 법정 스님 등)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 내사대상으로 분류되는 「겨레사랑·본부」의 민주노총측은 “정부의 조치는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구체화하면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연합 관계자는 “차라리 모금은 자율화하고 사후

감사를 철저히 하는 방식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며 경찰이 내세우는 기부금품 모집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시대착오적 발상” 비난

내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각계 북한동포돕기운동 단체들도 경찰의 수사방침을 일제히 비난했다. 「육수수보내기...본부」의 김동규 기획부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하며 “정부 스스로 못하는 일을 민간에서 추진할 때,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막으려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비상식적인 일

을 벌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평화의 쌀 보내기 운동본부」의 신승민 목사도 “경찰의 방침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부가 법을 들고 처벌하려 할 때는 민간의 힘을 결집해 같이 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동포돕기운동이 확산될 경우, 통일논의의 주도권을 민간에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같은 방침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재야단체만 조사” 형평성 상실

한편, 재야단체와 한총련만을 조사하겠다는 경찰 방침에 대해 「불교운동본부」의 정안숙 사무국장은 “조사를 한다면 모두를 해야 하지 않냐”며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옛날 평화의 댐 모금이나 각종 불우이웃돕기 모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를 벌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불심검문 순순히 응하지 마세요”

### 이대 대동제, ‘불심검문 퍼포먼스’

올들어 대학가 불심검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심검문의 불법성을 알리고 대학생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이화여대 대동제 기간동안 벌어지고 있다. 이대 인권모임 「소중한 사람들」이 마련한 ‘불심검문 퍼포먼스’.

이대 교정을 따라 걷다보면 난데없이 두 명의 여대생이 등장해 길을 가로막는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지나가던 학생들은 별다른 이유없이 신분증을 꺼내준다. 간혹 이유를 묻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그런다”는 말에 순순히 자신을 드러내 준다.

그러나, 이외없이 신분증을 꺼내준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범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이 범한 죄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죄’.

‘검문소’로 ‘끌려간’ 학생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권교육을 받아야 했다. 끝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만든 인권수첩을 받아든 후야 학생들은 ‘자신이 범한 죄’의 대가를 다하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의 회원 김미현(과학교육 2년) 씨는 “대학생들은 자기권리에 대해 일반인들보다도 소극적이고 불감증에 걸려 있다”며 “피해입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깨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30일로 예정된 한총련 출범식을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또다시 대학가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검문을 당하는 학생들이 「소중한 사람들」의 바람 만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지, 아니면 또한번 고개숙인 젊은이로 돌아갈지 궁금하다.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강행과 주민 및 환경운동가 구속 규탄대회**

·때: 5월 29일(목) 오후 2시  
·곳: 정부종합청사 후문 평화은행앞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등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⑧ - 강인영 (광주 인권지기 사무국장)

## 이 땅의 햇살한줌으로 살아가는 인권지기

95년 겨울의 고민  
‘광주 시민의 의식수준은 매우 높고 운동 역량도 충분하다. 하지만 전문적 운동의 토대가 너무 허약한 것은 아닌가’는 고민속에 몇몇 젊은이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인권’이라는 단어에서 광주지역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였고, ‘뒤틀바라지’에서 벗어나 ‘80년 5월 광주’ 이름에 걸맞은 적극적인 인권찾기의 꿈을 키우게 된다. 그 고민은 10년후에는 광주지역에 인권센터를 열겠다는 포부가 되었고, 그 시작은 96년 5월 3일 ‘인권지기’(회장 이도균, 나주금천중앙교회 목사)의 창립이다.

#### 상식을 뒤집는 사건

6:10세대인 강인영(30·사무국장) 씨도 이때 뜻을 같이한 사람 중 하나다. 87년 전남대 1학년이었던 새내기 시절, 태어나서 목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에게 광주는 생경한 도시였다. 입학 후 한 달간은 학교와 자취방만을 오갔는데 인문과 앞까지 전경들이 들이닥쳐 있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순리와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에게 전경이 학교 안까지 들어온 것은 상식을 뒤집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부당함에 대항하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친구들의 모습 또한 그에게 의문이었다.

그는 당당하게 전경들 사이를 뚫고 동아리방으로 갔다. 당시 그는 두개의 동아리에 가입해 있었는데, 그림동아리인 ‘그리세’와 또 하나는 ‘가톨릭연구회’였다. 그때까지만해도 그는 ‘그리세’에 마음이 더 끌리고 있었다. ‘그리세’ 방에 들어가니 선배들이 아무일 없다는 듯이 캔버스 앞에 앉아 데생을 하고 있었다. ‘선배들이 상황을 모르고 있구나’ 싶어 떨리는 심정으로 위급한 상황을 얘기하자 선배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런 일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태도에 너무 화가나 동아리방을 박차고 나와 가톨릭연구회를 찾아갔더니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싸움

을 나가고 없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그의 생활은 크게 변하였다. 몇 달 뒤 87년 6·10항쟁의 물결 속에서 몇 날 며칠밤을 광주시내에서 선배·동료들과 밤을 지냈다. ‘내 인생에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커다란 성과를 가져온, 모두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듬뿍 안겨준 사건’으로 그는 6:10을 기억한다.

#### 신바람나는 운동

동아리와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남대협) 활동을 거쳐 93년 학교를 졸업한 그는 2년간 사진을 배웠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중도포기 없이 운동의 길을 계속 걷고 싶었던 그는 ‘자신만의 능력’을 갖추고 싶었던 것이다. 프

6·10을 기억하며, 신바람나는 그날을 향해...

리랜서로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춘 뒤 그는 본업을 찾게된다(지금 그에게 ‘웨딩포토가 부업이고, 인권지기가 본업이다’). 2년간의 사회경험은 그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깨닫게 해주었고, 유연성을 가져다 주었다.

“의무나 당위가 아닌 신바람나는 운동은 무엇이며, 내가 잘할 수 있고, 나의 특성에 맞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는 고민을 가장 깊이 한 시기였다.

그 고민은 95년 5월, ‘5·18 15주년 행사위원회’의 일과 광주전남연합 인권사업 담당자를 거쳐 인권지기 창립멤버로 결합하기까지 그를 이끌었고, 막연히 생각해온 “사람의 권리를 찾는 운동”에 대한 상을 잡아나가게 해주었다.

#### 늘어나는 인권지기

어느새 인권지기는 한 살을 맞았다. 인권지기는 그간 △양심수 석방운동 및 후원사업 △인권교육사업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미련과 구명활동 △‘햇살한줌’ 발행 △제1회 광주인권사랑마당 개최 등의 사업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더불어 인권지기들도 꾸준히 늘어왔다. 처음 1백50명으로 출발한 인권지기 회원은 매달 20명씩 불어 4월에는 4백여 명을 넘어섰다.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따스한 ‘햇살한줌’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인권지기의 문을 두드려 온 것이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시키는 것 외에도 급박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구명센터’로서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햇살한줌>이 전문인권교양지로 발돋움 해야하고, 4백여 회원들의 성장을 위해선 정기산행, 양심수 자매결연, 인권교육, 재판 모니터링, 교도소 실태조사모임 등이 숨가쁘게 움직여줘야 한다.

하지만 요즘도 이따금 “제가 저런 일(인권운동 정도를)을 할 수가 아는데...” 하는 말을 주변에서 듣는다. 인권운동은 민족민주운동과 무관하거나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보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인권지기의 생각이다. “인권운동은 현재 민족민주운동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민족민주운동 역량의 강화는 인권상황의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대와 사회가 바뀔 수록 인권의 개념과 주요 인권사안들 역시 바뀌어 갈 것이다.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우리시대 인권의 가장 큰 문제인 통일 문제의 해결은 서로 결합된 사안이다”는 설명이다.

#### 인권센터 창립을 꿈꾸며...

1년을 사무국장으로서 살림을 꾸려오면서 그는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런저런 고민 속에 남들이 ‘노처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분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었다.

창립초기, 10년안에 광주에 인권센터를 만들자고 뜻을 모은 젊은이 중 하나인 그는 신바람나는 운동 속에서 그날을 만들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30일(금)

제 8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방패도 두려워 않는 의기

### 전경, 불심검문 항의하는 여대생 폭행

한 여대생의 용기있는 저항이 무관심과 불감증으로 일관하는 현 세태를 준엄히 꾸짖고 있다.

김해전(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4학년) 씨는 지난 24일 저녁 동료들과 함께 학교로 들어가던 길에 전경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경찰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 장소로 예정된 한양대학교의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하던 중이었다.

대학가에선 이미 일상화되다시피한 검문이었지만, 김 씨 등은 무작정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며 적법한 절차를 요구했다. 김 씨 일행은 경찰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소속, 직책, 성명을 알려주고 경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전경들과 김 씨 일행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전경의 방패에 수차례 얼굴을 맞아 왼쪽 귀를 여덟 바늘이나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결국 전경들은 학생들을 놓아주었고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이날 사건에 대해 김 씨는 "담담하게 요구해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부당한 경찰의 처사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지만 하나의 노력이 쌓인다면, 경찰의 불법적 관행도 개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한양대 불심검문 5일째

현재 한양대에선 한총련 출범식을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불심검문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한양대 학생회측은 이와 관련,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교문 주위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그

부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항의하는 학생과 경찰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불심검문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법대에 다니는 한 학생은 "전경 소대장에게 '경찰대학 출신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잘 알 것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경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보내'라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검문에 순순히 응하고 있지만, 불법적 검문에 대한 공분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총련 출범식 전날인 29일 한양대 주변엔 최소 20여 대 이상의 전경버스가 진을 치고 있으며, 지하철 한양대역에서부터 학교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마다 수백 명의 전경들이 삼엄한 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한총련은 "평화적인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는 억지 속에 타대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출입도 철저히 막고 있다.

#### 원천 철거지구 고립 4일째

초등학생 3일째 학교도 못가

경기도 원천택지개발지구에서 고공철탄(일명 골리앗)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과 철거민연합 회원 10여 명이 나흘째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지난 27일부터 골리앗엔 전기와 물이 모두 끊어진 상황이며, 경찰은 외곽에 수백여 명의 전투경찰을 배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리앗 내에 있는 교천만(구갈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씨는 "그동안 받아두었던 물로 식사를 해결해 왔으나, 곧 물이 동남 상황"이라며 "이미 우리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 "밤만되면 10여 대의 서치라이트가 철막을 비추 시야를 막고, 밤새도록 골리앗에 돌을 던져대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다"고 밝혔다. 골리앗 내에는 현재 두 명의 어린이가 같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는 3일째 등교조차 못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경찰이 철거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31일 중으로 철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 5월 17일자 참조>

#### 노진추 울산지부 3명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성두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노진추) 울산지부 회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9일 새벽 연행되었다.

이날 새벽 6시경 조용진(주식회사 진도노조 연양지부 대의원) 씨와 류미진(동광병원 노조 교육선전부장) 씨가 각각 자택에서 연행되었고, 양정승(현대자동차 노조 전 대의원) 씨가 오전 8시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현재 울산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가족면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노진추는 지난해 10월 6, 7일 성두현 대표를 비롯한 회원 31명이 대거 연행되어 이 가운데 27명이 이적단체 구성·가입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지난 4월 8일에도 부산연락소 회원 5명이 연행·구속되었다.

바로잡습니다.

5월29일자 2면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강인영 씨는 조선대가 아닌 전남대를 나왔습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기획시리즈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90년대 들어 자유권 조약, 사회권조약 등 많은 국제인권조약에 서명비준함으로써 국제법적 틀에 걸맞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요 유엔인권조약은 가입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 당사국 '정부 보고서'의 제출과 각 조약에 근거한 유엔전문가위원회의 심의와 권고로 요약된다. 위원회의 권고는 보통 △해당정부의 진전사항과 이행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관심 표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고안의 제시로 나타나며, 위원회는 심의과정을 풍부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보고서를 비롯하여 기타 정보를 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조약에 대한 정부보고서만이 아니라 민간보고서가 여러차례 제출된 바 있다. 이러한 심의 과정이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유엔의 권고안과 정부의 답변 등이 널리 홍보되어야 하며, 그 이행여부에 관한 모니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제출이나 유엔권고안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홍보는 극히 미미했으며, 민간보고서 제출 이후 지속적인 민간부분의 모니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 99년 2차 보고서 제출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어린이권리조약)'의 이행사항에 관한 모니터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 모니터는 유엔권고안 이행사항에 관한 정부 각 부처의 답변을 모은 외무부의 답변문에 기초한 것이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대회'의 (연대회의)와 천정배 의원(국민회의)의 협력을 받았다.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어린이권리조약은 올해초까지 1백90여 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국제조약으로 우리 정부는 91년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정부는 조약 제44조에서 규정된 의무에 따라 94년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96년 1월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나라 어린이의 권리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32개항에 이르는 권고사항이 발표되었다. 최초보고서 제출된 5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99년 2차 보고서 제출을 불과 2년 남짓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미약한 수준에서나마 조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해 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 차별방지에 대한 대책 부재

유엔 권고안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그간 정부의 노력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모니터 작업을 진행해 온 류은숙(연대회의 실무간사) 씨는 "질 의서에 대한 부처간 떠넘기기, 책임자를 밝히지 않으려는 태도에 두터운 벽을 느껴야만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고사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냉대를 실감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어렵게 입수한 정부의 답변문을 분석한 결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조약 체결당시 유보했던 3개 조항(부모에 대한 어린이 면접교섭권, 입양제도, 상소권)가운데 정부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만 유보를 철회할 예정일 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철회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하는 기초작업으로서 자료·지표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별도의 기구·조직등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소녀, 장애아동, 혼혈생아등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지속 문제에 한국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이들 아동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예정

한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방지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며 96년 10월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를 설립해 조사연구 및 국민계도 사업을 추진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학대, 성폭력,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정부는 답변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5회에 걸쳐 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설치 및 음부즈맨 제도 ② 3개 유보사항 철회 및 "고용허용최소연령에 관한 IL0조약 제138호" 비준 ③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 사업 ④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권고안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행사와동정

- '재벌의 변칙세습, 실태와 대응방안(삼성사례 중심)' 정책토론회
  - 때: 5월 30일(금) 오후 2시-6시 20분
  - 곳: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민주노총, 민교협
  - 발제: 삼성사례의 회사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곽노현 방송대 교수) / 삼성사례의 세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옥무석 이대법대 교수) / 재벌 경제구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홍덕률 대구대 교수)
- 한국국제문제연구소 개소식
  - 때: 5월 30일(금) 오후 7시
  - 곳: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 역 6번 출구에서 5분 거리(986-0025)
- 삼미특수감 정리해고 사례설명회
  - 때: 6월 3일(화) 오후 5시
  - 곳: 민주노총 회의실(문의:579-497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5월 31일(토)  
제 8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재벌을 도마에 올리자

### 민노총·민교협, "삼성 변칙세습 추궁"

은 국민의 시선이 노동법·안기부법 낚치기 정국 등으로 쏠려있는 틈을 타 슬그머니 진행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삼성그룹이 이견회 회장의 외 아들인 이재용 씨에 대한 3세 승계작업을 변칙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부정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삼성그룹의 변칙세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재용 씨는 아버지로부터 95년 12월 61억원을 증여받는다. 이 때 증여세로 16억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에스원과 엔지니어링 주식을 구입한다. 두 회사는 곧 상장되었으며, 이 씨는 주식을 처분해 총 5백63억원의 자금을 만든다. 이어 이 씨는 그 돈으로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96억원 어치, 삼성전자의 사모사채를 4백50억원 어치 사고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도 산다. 그 결과 이재용 씨는 현재 중앙개발의 지분 62.5%, 삼성전자의 지분 0.97%, 제일기획 지분 35.3%를 취득하게 되었다.

중앙개발의 순자산가는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어, 전환사채 형식으로 이 씨가 인수한 자산액은 최소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최초 61억의 재산을 증여받아 세금 16억원만을 낸 채 이 씨는 수천억원의 돈을 고스란히 품안에 넣었고, 동시에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61억이 순식간에 6천억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는 삼성그룹 세습과정은 30일 민주노총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재벌의 족벌경영과 변칙세습(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토론회 장에서 공식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삼성의 변칙세습 과정은 현행 회사법에 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것은 중앙개발이 전환사채 발행의 본 목적인 금융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 씨를 제1주주로 앉히는 데 목적을 두고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며, 또한 수천억원의 값어치가 있는 전환사채를 1백억원도 못되는 가격으로 발행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으로 발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곽 교수는 "삼성

그룹의 변칙 증여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그 방법으로는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소송자격을 가진 중앙개발의 주주가 대부분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제기의 한계가 있으며, 재소기간이 오는 6월이면 끝난다는 점도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정치권·언론, 쥐죽은 듯 침묵

정작 문제는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재벌의 변칙세습과 족벌경영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에 있다. 곽 교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재벌승계과정의 실태와 수법을 전부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응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자 국회"라는 말이 드러내듯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재벌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강한 재벌의 로비력에 의해 언론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밝혔다.

##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우토로토지문제조사단 일동은 지난 24-27일까지 현지 조사활동을 벌이고 서명운동등 국내외적으로 우토로 제일동포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박기호 신부, 김경남 목사, 박연철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빠른 시일내 조사보고를 작성해 국회와 정부, WCC·로마가톨릭등 세계교회,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주거회의 등에 호소할 예정이다.

89년부터 8년간 계속된 우토로 마을 토지퇴거소송은 오는 6월 1일 2심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있는데, 우토로 주민들은 재판에 패소하고 강제퇴거당할 것을 우려해 인권협에 공식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사단은 25일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와 우토로 지역의 토지소유권자였다가 이를 몰래 매각해 주민들을 강제퇴거위기에 처하게 한 '일산사채'(일산 자동차의 계열기업) 공장주변에서의 데모행진에 참여했다. 또 26일에는 우토로 제일동포들을 직접 면담하고, 26·27일 양일에 걸쳐 우지시청, 교도부청을 방문해 담당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우토로 문제는 전후배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유엔이 정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토로 문제는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가 아닌 일제식민지 치하라는 역사적·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료토부, 우지시청 행정당국이 구체적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 <인권하루소식> 97년 5월분 총목차(875-895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875	5/1	1	국적법에서도 차별받는 의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 한국지부와 NCC 등 공청회 개최/전문 철거강제에 폭행당해 철거민연합 간부 3명 중상
		2·3	5월호 총목차(875-894)
876	5/2	1	공포에 짓눌리는 철거민, 용산구 산천동·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폭력 극성/삼성, 노조설립 저지 안간힘... 민주노총, 부당하고 철칙 등 촉구/행사와 동정
		2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조약을 중심으로 본 아이들의 인권" 어린이·청소년연대회의 출판기념회
877	5/3	1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2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새책 소개- '정말이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처럼』 창간호(5-6월호)
878	5/7	1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과문 잇따라
		2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침탈, 컴퓨터 파손·자료 검색 흔적/전국연합 CUG 개설/주간인권호름(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3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 교수)
879	5/8	1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했다"/행사와 동정
		2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오완호 AI 한국지부 사무국장)
880	5/9	1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5·18 17주년 행사 7-25일, 피해자 치료센터 건립위한 토론회 열려/경기여성 공동대책위 결성
		2	세계의 인권<13> 가정 - 물려받은 아버지, 위기의 가정
881	5/10	1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사회단체, "관선이사 파견" 주장 등 경기여성 정상화 촉구/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
		2	<자료요약>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882	5/13	1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학교를 학생에게" 통신상 서명운동 한창
		2	아프리카, 아동 성학대 심각/은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주간인권호름(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3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883	5/15	1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국민대·부산 동의대 파문/서총련 출범식 3백15명 연행, 구속 16명/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과거청산 국민위, 전·노 사면반대 1980인 선언과 인권피해 증언의 장
		2	<현장 스케치> 돼지처럼 쫓겨난 양돈마을 철거민들, 동아건설·적준개발 밀어붙이기 한판/인권영화 ⑤ <꽃잎> <부활의 노래>- 5·18 영화의 민중적 방식
884	5/16	1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적선은 커녕 쪽박깨기", 북한돕기문화공연 원천봉쇄
		2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을 아니다"/국민인권기구 연구 본격화- 민주법연, 시민운동지원금 받아/5월 항쟁복원, 과거청산부터 - 종교·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행사와 동정
885	5/17	1	철거민 골리앗 투쟁 7개월째, 수원 원천철거지구 가수용단지 놓고 주택공사·철거민 대립/류재을 씨 사인 끝내 못밝혀, 경찰 도청앞 노제 막아/제7회 5·18 시민상 곽노현 교수와 박연철 변호사 수상
		2	인천 중부서 항의집회 참가자 25명 또 연행,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새책 소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2』

### <인권하루소식> 97년 5월분 총목차(875-89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886	5/20	1	여성인권 "아직도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진보적 국제소식 전달", IPECK <아침세계소식> 발간
		2	"5·18 문제 해결안됐다",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5·18 광주 방문기, 정부 5·18 기념식에 쫓겨난 사람들/주간인권흐름(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887	5/21	1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언론 자료는 국가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6월 선고
		2	광주지역 80년 5월 밤불, 류재을 장례투쟁 중상자 속출/5·6공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멕시코 진출 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 대우노조 진상조사 및 '해외경영 윤리감령' 체결 촉구/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888	5/22	1	용기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2	인권영화⑥ <캐나다 베이컨> - 군산복합체, 독점자본에 대한 통쾌한 풍자/제3자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행사와 동정
889	5/23	1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 사위보장 촉구' 집회
		2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 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위한 토론회/"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요구,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890	5/24	1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경찰, 고 류재을 씨 도청노제 끝내 불허/97년 주요 경찰폭력 사건일지/작가회의, 북녘동포돕기 행사
		2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하인회 씨 원심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여연 여성환경선언 "제품 불매운동·정책참여" 요구/새책 소개 『인권교육의 기법』 『청소년 인권보고서』
891	5/27	1	말 한마디에 입 떼기는 세상, 한총련의장 통신 ID 사용증지/경남노협 김윤규 의장 등 구속, "삼성노조 지원 차단 의도"
		2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류재을 씨 죽음 의문사로 남아, 24일 망월동 구 묘역 안장/주간인권흐름(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3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 교수)
892	5/28	1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2	출린 디스켓서 단체관련 자료 발견, 구로지역 사회단체 잇따라 괴한침입/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 주요행사/원천 철거지구 긴급상황, 경찰 외곽봉쇄·전기 차단/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
893	5/29	1	"정부, 해도 너무한다" 북 돕기운동 내사, "강력대응 불사"/"불심검문 순순히 응하지 마세요" 이대 대동제 '불심검문 퍼포먼스'/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강행과 주민 및 환경운동가 구속 규탄대회
		2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⑧ 김인영(광주 인권지기 사무국장) - 이 땅의 햇살만큼으로 살아가는 인권지기
894	5/30	1	방패도 두려워 않는 의기, 전경 불심검문 항의하는 여대생 폭행/원천 철거지구 고립 4일째, 초등학교 생 3일째 학교도 못가/노진추 울산지부 3명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행사와 동정
895	5/31	1	민노총·민교협 토론회 "삼성 변칙세습 추궁"/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2·3	5월 총목차(875-895)

# 인권하루소식

## 97년 6월

### (제896호 - 제914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3일(화)

제 8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이권이다! 인권이다!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를 비롯한 재계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78개 시민·노동·종교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경제단체에 대한 항의표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기독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재계, “경제에 엄청난 손실”

고용허가제에 대해 재계는 “경제를 위해 절대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31일 건의문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 부여 및 내국인근로자와의 동등임금지급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겪 기업 경영의지를 송두리째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대위측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한국경제 양측면 모두를 위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

혔다. 공대위는 “9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국인노동자 현지 송출업체에서 받는 수수료의 상당부분이 로비자금 또는 뇌물로 한국에 유입된 것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는 천문화적인 이권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 “인권보호 위해 필수”

또, ‘고용불안과 인건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재계측 주장에 대해, 공대위측은 “현실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급속도로 상승하는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이는 등 오히려 국내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며, 송출비를 근절하고 불법체류시장을 없애기 때문에 인건비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계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경제적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됐다. 공대위측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국가라는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조선족 사기피해자 대표 3인은 2일부터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서영훈 등) 사무실에서 “조선족사기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 경찰, 시위구경하던 시민 방패로 찍어

### 두개골 부서져 입원...병실까지 찾아가 행패

경찰에게 요즘세상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지난 1일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던 시민 이철용(33·건설노동자) 씨를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힌 경찰이 2일엔 이 씨가 입원중인 이대부속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다.

2일 낮 12시경, 소속을 밝히지 않은 사복형사 10여 명이 “환자를 조사하겠다”며 이 씨의 병실로 찾아왔다. 보호자로 있던 이 씨의 선배 박기호(38) 씨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소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형사들은 오히려 박 씨의 목살을 잡고 끌어내려 하는 등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돌아갔다.

또한 경찰은 이 씨의 하숙집(화양동)을 두 차례 방문해 이 씨에 대한 신변조사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숙집 주인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냐”며 몇마디 넘겨짚다가, 별 대답을 얻지 못하자 “전경들이 학생인줄 알고 때렸나보다”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갔다. 하숙집 주인은 “평소 너무나 착실한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서울시 신당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중, 백골단 5-6명에게 잡혀 집단구타당했으며, 이로 인해 두개골이 부서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씨는 “방패와 끈땀 등으로 맞았다”고 밝혔으며, 박기호 씨도 “철용이가 입고 있던 점퍼 목덜미 부분에 군화발 자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쪽 눈에 시퍼런 멍이 든 이 씨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며, 말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또한 머리에 고인 피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 뇌수술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주요 공판 안내

- ▶6월 3일(화)
  - 김동운(국보법)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 정지아, 이용석, 조창목(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이미정, 박종석의 1(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염오순, 방진욱의 1(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차승엽(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② 국가위원회 설치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정부가 최초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귀찮고, 정부보고서를 구하기 위해 관련부처마다 전화를 했다. 자기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대답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보고 내용 대로라면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정부가 96년 1월 18일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 읽어내린 문건에 따르면 "7천1백12명으로 구성된 지방 차원의 아동복지 위원회가 조약에서 인정한 아동의 모든 권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있고, 95년 8월 설립했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에는 외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분명히 구성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언급한 95년 8월 당시에 이 위원회는 유니세프의 초청을 받은 몇몇 전문가의 협의 모임 수준이었고, '설립'에 이를 조직체제나 규약 등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조직을 시도한 '한국아동권리위원회'를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로 여겨지게끔 유엔에 과장, 허위 보고한 것이다.

이 점을 민간단체가 지적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존재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자 올 5월에 내놓은 정부 답변문은 "동 위원회가 정부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이라고 답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동 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발한 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정부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도 않다.

다시 원점으로

그렇다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한국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에 관심있는 일부 민간 전문가들의 협의기구 수준으로, 법적 뒷받침을 받는 공식기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애초 아동 권리를 위한 중앙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지점이다.

현재 아이들의 인권, 복지, 교육에 관한 업무는 각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조약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기구는 없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조직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에서도 "정부는 조약의 이행을 조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중앙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아동 인권·복지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각 지방 자치단체 산하에 하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민간단체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구현을 위한 중앙기구를 설치해야 할 과제는 계속되는 현안이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나 '한국아동권리학회' 창설 등으로 고양된 민간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망된다.

주/간/인/권/호/름

(97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 5월 26일(월)

안기부 대전지부, 대전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등 30여명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자칫 북한의 전쟁 준비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이북 5도민회동 실행민단체, 남북적십자사회담의 '기정기탁제' 합의에 환영/김혜전(한양대 자원공학과 4년)씨 학교 정문앞서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적법절차 요구하던 중 전경으로부터 폭행당해/25일 새벽 구로청년회 사무실등에 피한 침입

◆ 5월 27일(화)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우토로 토지문제조사단, 24-27일 현지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의적으로 우토로 재일동포들의 주거권 보장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혀

◆ 5월 28일(수)

'일부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해산식 갖고, 그간 모금한 5억3천9백여만원을 정신대 할머니 1백51명에게 전달/현대건설, 95년 9월 한전과 영흥화전 1·2호기 토목공사 등을 계약했으나 주민들 반대로 공사지연되었다며 주민 12명을 상대로 6억7천9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지법 제1부(이종왕 부장검사), 제자들을 성희롱한 서울대 약대 구양모 교수를 무고 혐의로 구속/한국통신노조,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제출/유엔인구기금의 '97년도 세계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8만5천명의 여성이 출산과 관련해 숨겨

◆ 5월 29일(목)

환경운동연합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소각장 건설반대 시민연대 서명운동 선포식 갖고 1백만명 서명운동 돌입/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지부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 5월 30일(금)

국제노동기구 96년 노동통계연감 등, 한국 노동시간 49.2시간으로 세계에서 8번째 긴 것으로 나타나/한양대에서 열릴 제5기 한총련 출범식 전야제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 학생 9천여명 도심서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 벌여/서울지법 형사6단독(김형진 판사) 소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설가 장정일 씨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죄 등 적용해 징역 10월 선고된 법정구속/기독교계 인사 2백55명, 정부의 북한식량지원 촉구

◆ 6월 1일(토)

<한겨레> 보도, 국방부가 33년 동안 5급이상 일반 군무원 7천여 명을 편법 임용하다 96년 5월 법적 근거미련한 것 드러나/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심수 40여명 5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등에서 '진보정당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벌여/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이석욱(전 양정중 교사)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서 원고승소판결 내린 원심재고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내

인권 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 씨가 '음란문서 제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을 때 이 소설을 읽어 봤다는 제주꾼 몇몇 사람에게 소감을 들어 보았다. 난잡하고 변태스럽기는 <거짓말>이 <사라>보다 더 "깨다"는 것, 그러나 확실히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진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소감이었다.

재판을 받으러 파리에서 귀국하고 전혀 도망칠 우려 없는 장 씨에 대한 실험 선고는 인신 구속 제도의 지나친 남용이며 분명한 인권침해이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로 문단 쪽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은 초점이 맞지 않고 있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성적 억압이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억압되어 있는 사회"라는 주장은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옳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법정에서 그런 함변쯤은 할 줄 아는, 웬만큼 알아빠진 포르노 업자들도 포르노현상이란 이 사회의 근원적인 지배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배설물이자 거꾸로 이 사회의 지배구조를 떠받쳐 주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장 씨가 인정받는 기성문인임을 내세워 그의 '예술'에 대한 법적 제재를 비난하는 주장도 자칫 기성 문인만의 면책 특권을 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들린다. 나는 솔직히 왜 '예술'에는 포르노 표현 권을 주고 '청계천 아저씨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음란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따로 성인 책방에서 팔면 된다는 '해결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제도가 생기면 청계천 등지의 싸구려 포르노를 정식으로 승인해 주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음란성'을 띤 예술작품은 그것들과 같은 진열대에 갇히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

이다. 예술작품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역시 현행 법제도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어설픈 주장이다. 이 주장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숭상되어 온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 즉 '악화는 반드시 악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사상(예술)은 자유시장에 내달리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상(예술)에 의하여 구축된다는 천진스러운 논리와 연결되는 데, 나는 이런 믿음을 조금도 가질 수가 없다. 대중매체가 소수자의 손에 집중되고 논설이나 보도가 갈수록 보수 일색으로 획일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직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존재를 믿는 현실감각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여성의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 보라"

비하와 상품화를 버팀목으로 하여 남성 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패권을 잡고 있는 이 사회에서 포르노가 공식적으로 자유시장에 진입한다면 우리의 대중문화는 당장 청계천식 포르노에 제압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포르노야말로 여성의 비하와 상품화라는 점에 있어서 바로 이 현실의 지배질서의 적자(適子)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단 측 주장의 문제점은 그 악귀 같은 포르노가 항상 함께 편승하고 따라 다닌다는 데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로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생각해 때문인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념에 투철한 나라이다. 실사 특정 표현(포르노 등)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이를 제약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확립된 관

례이다. 이런 전통은 치열했던 민권운동시대를 거쳐 표현의 자유를 쟁취한 미국 국민의 값진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어려운 싸움을 통해 획득한 그 자유로운 표현 공간에는 지금 방대한 포르노가 요박란 듯이 들어앉아 있다.

이런 풍토에서 캐서린 A 매키넨은 포르노에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가 포르노에 들어대는 잣대는 보수주의자가 가부장적 지배질서의 유지를 바라면서 들이댄 '건전한 성도덕'이라는 추상적인 잣대와는 완전히 다른 '평등'이라는 잣대, 즉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을 받는 여성들의 평등권이 라는 잣대인 것이다. 이 참신한 주장은 앞으로 우리의 포르노에 대한 인식, 나아가서는 자유권 전반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예상된다.

말은 아름다울수록 더 사람을 속이는 법이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지배 의지나 어두운 욕망을 '인권', '도덕', '사랑' 따위 말로 아름답게 치장한다. 이런 속임수를 가려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무기는 '평등'에 다름이 아니다. 인권운동은 항상 '평등'의 땅을 굳건히 딛고 '자유'를 위해 싸움으로써 '인권운동'으로의 타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포르노,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어차피 막을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 '평등'이 현실이 아닌 단지 말 뿐인 사회에 머물러 있는 한에서는 포르노는 계속 살아 남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이 현실이며 '말' 뿐이 아닌 사회에서는, 인종적, 성적 공격이나 성적 비방의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것이다. 인간과 물질과의 성행위, 인간과 종이 꼬가리와의 성행위, 현실 세계의 남자와 비 현실 세계의 여자의 성행위는 사람들의 성적 흥분을 싸늘하게 식혀버릴 것이다." (캐서린 A 매키넨)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4일(수)  
제 89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 사회단체 · 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사회단체 및 각 대학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통신 ID가 줄줄이 삭제당하고 있다. 이에 통신동호인들은 이번 사태를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컴퓨터통신 '나우누리'의 등록자 가운데 삭제된 단체 및 개인 ID는 무려 33개에 달하며, 그 가운데에는 center(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인천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인 천·부천연합) 및 애국한양, 고려총화, 전남총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글들이 삭제당하고 있다. 인천연합의 경우, 나우누리에 등록된

지 한달도 안됐으며, ID를 사용해 게재한 글도 '하나의 대회(8·15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호소문' 하나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 관계자는 "집시법 5조2항(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됨) 위반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정보통신부(정통부)가 '협조공문'이라는 교묘한 형식을 빌려 사실상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정보통신담당 최세진 씨는 "ID삭제가 정통부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통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정치적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우누리측도

통신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번 조치가 나우누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통부 장관의 명령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이텔 참세상은 "불법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요청이 왔다"며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계약과 사업자신고를 취소 당해 운영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ID의 사용증거는 통신상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따라서 통신동호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인 '천우물',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정보통신검열 철폐시민연대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도 2일 최근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치적 언론검열"이라며 △무단 사용증지된 ID의 즉각 복구 및 공식 사과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즉각적 개정 등을 촉구했다.

#### <통신단체들의 반응>

### "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 '천우물': 정통부의 판단에 따라 검열과 삭제의 가위를 들이대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정통부와 나우누리는 게시물의 삭제가 어떤 근거에서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댈 경우,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진정한 여론의 형성을 막고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온통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통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통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가능케 하고 있다. 게시물의 이적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통부의 명령만으로 통신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통신공간은 한쪽의 일방적 선동공간도 아니며,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공간도 아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의 검열이란,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주체가 자신이 판단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누가 어떤 권리로 우리의 입과 눈과 귀를 강제하는가? 우리는 정통부에서 만들어놓은 '윤리'와 '강령'을 거부한다. 검열을 악용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중지하라.

### "폭력·과잉진압이 죽음 불러"

전국연합, 유 전경 죽음 애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3일 고 유지용 전경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경찰의 상식을 넘어서는 폭력 과잉진압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언론측에 대해 추측과 정략적 의도를 배제하고 한 억울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하는 입장에서 수사·보도하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전국연합은 유 씨의 사망과 학생들의 증상이 경찰의 무조건적인 집회 불허와 원천봉쇄 속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빚어진 만큼, 한총련의 평화적 집회개최를 허용해 조속히 출범식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 조약 제9조 3항;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조약 제21조 가항;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71조는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치 않으며, 민법 제878조와 제881조에서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조약 제 40조 2항 나호 5; 소년사범의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 철회 가능성 시사

유보란 어떤 조약에 서명, 비준, 동의, 가맹시에 정부가 붙이는 조건이다. 그 정부는 어떤 국제조약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어떤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로 유보를 하는 것이다. 조약의 완전한 수용을 바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보조항의 철회 의사를 물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96년 1월, 제 11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출석한 정부 대표단은 "유보 조항들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첫머리에서 밝혔다. 특히 9조 3항은 민법의 개정 조항으로써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보조항 철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여 준 자세를 환영"하며, "한국대표단이 진술했듯이 민법 개정으로 한국이 조약 제9조 3항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했다.

### 아직도 변함없이 '유보'

그러나, 1년이상이 지난 시점인 97년 5월 현재의 답변은 "국내법과 상충되어 철회할 수 없음(외무부 인권사회과 답변)", "유보를 철회할 계획이 없음(법무부 답변)"이다. 적극적으로 철회를 고려하겠다는 9조 3항에 대한 답변도 여전히 "추진에 정"일 뿐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조약 제32조의 '최저 취업 연령의 규정'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ILO 제138호 조약 비준을 권고하였다. ILO 제138호 조약은 15세 미만자(개도국은 14세)의 취업을 금지하면서, 연소자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는 18세(일정조건하에서는 16세)를 하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97년 5월, 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의 최저연령을 종전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유해위험 사업장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 ILO 조약 제138호의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광주 정평위, 동티모르 지원사업 활발 특별헌금 모금·항의엽서 보내기

광주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황양주 신부, 광주 정평위)를 중심으로 한 동티모르 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광주 정평위는 지난 5·18 기념미사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83개 본당에서 △동티모르 다큐멘터리 관람 △동티모르 지원 특별헌금 모금 △항의엽서 보내기 운동 등을 벌였다. 전경진(광주 정평위) 간사는 "올해 5·18미사는 5·18 정신계승차원에서 80년 광주민중항쟁 상황과 유사한 동티모르 분체를 다루게 되었다. 5천통의 항의엽서를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보냈고 특별헌금이 4·5천여 만원이 모금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별헌금은 동티모르 현지 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 정평위는 앞으로도 동티모르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7월 갖게될 정평위 회원 모임을 통해 동티모르 현지 교회와의 자매결연등 지속적 지원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 원천 철거민 투쟁 마무리 가수용단지 설치 결정

경기도 수원시 원천택지개발지구의 철거싸움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6일부터 경찰병력 6백여 명이 투입되어 긴장이 고조되던 원천지구에서는 31일 주민과 대한주택공사측간에 △원천지구 내 가수용시설 설치 △내년 인근지역 공공임대아파트로의 입주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또 철거과정에서 입은 피해와 관련, 보상금 8백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공공철탑(골리앗)을 쌓고 농성을 벌여왔던 주민 두 세대는 오는 27일까지 가수용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골리앗에서 철수하게 된다. 한편,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 윤승노 부본부장은 "철거민들의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을 뿐, 가수용단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그밖의 합의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 4요 공판 안내

### ▶6월4일(수)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유민희(국보법 찬양·교무등) 합의7부 423호 오전10시 신건  
6월5일(목)  
김태우의 2(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 오전10시 합의23부 선고  
전경희(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이남영(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412호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5일(목)  
제 8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언론, 또다시 광분

### 전경사망 '의도적 오보'...경찰폭력엔 침묵

언론의 마녀사냥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를 통해 학생운동 진영을 '미친 폭도집단'으로 몰아갔던 언론이 지난 2일 시위진압 과정에서 전경사망사건을 기회로 또다시 '학생운동 망국론'을 들먹이며 광분하고 나섰다.

유지웅 상경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 일간지는 3, 4일에 걸쳐 1면톱, 사설, 기획, 해설, 인터뷰기사 등을 다양하게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집방향이 유 상경 사망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뜻을 표하고,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한총련 비난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여론몰이용 편집에 치우치고 있으며, 심지어 '의도적 오보'까지 내고 있다는 인상이 짙어지고 있다.

사 바로 밑에 '쇠파이프'를 든 학생들과 쓰러져 있는 백골단의 사진을 배치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전경이 학생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예단을 내리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조선일보(3일자 41판 사회면)는 심지어 「전경, 시위 학생에 맞아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시위대의 집단폭행에 의해 전경이 사망했다"는 단정 보도(담당기자 조희련·박용근)까지 내보냈다. 평소 정확한 정보력으로 소문난 조선일보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오보(?)'였다.

#### 이해하기 힘든 오보

이러한 언론보도에 부응하듯 시민들의 반응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일보 3일자 2면(「폭력시위 언제까지」)에서 연세대 김 모 씨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시위문화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앙일보 3일자 사회면(「또 전경희생인가」 개탄)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생들은 폭력

을 행사하지 않도록..."(송두환 변호사)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학생 본분에 맞는 행동을..."(주인기 연세대 교수) 등의 주장이 실리면서 유 상경 사망의 책임을 고스란히 한총련에게 돌리고 있다.

조선대 류재을 씨 죽음 1단 처리 한편, 언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편파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유 씨가 사망하던 날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중상을 입은 중앙대생, 1일 백골단의 집단폭행으로 두개골이 부서진 이철용 씨 사건에 대한 각 일간지의 보도는 1단 기사에 그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죽지는 않았다'는 변명도 가능하겠지만, 지난 3월 시위대중 사망한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건을 되돌아 보면, 그러한 변명 또한 공색할 수밖에 없다. 당시 거의 모든 중앙 일간지들은 류 씨의 사망사실만을 1단 기사 정도로 보도했을 뿐이었다.

#### 경찰폭력에 관대해야 하는 이유

중앙일보 3일자 3면에서 김상우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총련측이 '학생들이 쇠파이프로 때린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책임의 상당부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의 문성웅 기자도 3일자 32면 기사를 통해 "부검결과에 상관없이 류 상경의 죽음이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총련의 책임론을 들먹였다. 반면, 류재을 씨의 사망 당시엔 누구도 '경찰의 책임' 또는 '경찰폭력 근절'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침묵으로만 일관했던 것이다.

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권력이 친북단체의 불법집회를 진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언론이 왜 경찰의 폭력을 문제삼지 않는지를 솔직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

때: 6월5일 오후3시-7시/ 곳: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기조연설: 민족민주열사와 6월 항쟁(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주제발표: <1부>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정치적 타살인 의문사에 대해(박원순 변호사)

·법외학과 의문사(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시례연구-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김용갑(김선수 변호사)

<2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과 정신계승의 방향(배동인 강원대 교수)

·육중 희생자의 문제(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주최: 과거청산국민위 ·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등

##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96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에 관한 백서는 발간한 바 없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분산된 자료의 적절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아동정책에 관한 각종통계 및 지표자료는 법령 및 관련부처를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자료지표의 관리는 별도의 기구 조직 또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관계부처의 정책 및 국내의 통계지표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97년 5월, 보건복지부 답변)

이같은 정부 답변에는 유엔에서 앞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었을 뿐 실행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인정한 대로 아동에 관한 자료 수집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매년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권리'는 주요 항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주류집단인 '학생'에 대한 자료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산출되고 있지만 빈곤, 장애, 가족결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더구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백서'조차 없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조차 없다.

#### 어린이·청소년 '권리'지표 없다

유엔의 권고대로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조약에서 포괄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루는 '권리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학제간 연구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어린이·청소년 정보센타'를 만들어서 필요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마치 5년마다 '인구 및 주택총조사'가 있듯이 '어린이·청소년보고서'가 3년 혹은 5년마다 발간되어야 한다.

#### 조약에 대한 국가 홍보 부재

한편, 국내에서 정부의 보고서나 유엔의 권고안을 접해본 사람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될 것을 권고한다"는 유엔의 마지막 당부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참가 후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최초보고서 심의자료 bulletin 작성(배포처 미확인)"이라는 외무부의 답변에서나,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바, 앞으로 국가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서나 조약에 대한 홍보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여러 유엔인권조약에 관한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유엔 권고안이 알려진 것은 정부의 홍보가 아니라 민간부분의 네트워크 홍보, 언론작업에 힘입은 것이었다. 조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정부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을 응당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 영흥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 생존권 위협

인천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30분이면 찾아갈 수 있는 섬, 영흥도. 굴, 바지락, 대합 등 풍부한 어자원과 비옥한 땅으로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던 영흥도에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총 9백60만 Kw 용량(핵발전소 12개, 국내전력공급량의 35% 해당)에 달하는 유엔탄화력발전소 12기가 이곳에 들어서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영흥도가 고향이면서도 건설현장 일로 외지를 떠돌아다니던 정윤기(26·주민대책위 사무국장) 씨는 벌써 1년이 넘게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반대투쟁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다. 정 씨는 96년 5월 고향산배들과 함께 무비카 메라 한대를 들고 보령·서천·영광·울진 등의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를 돌아보았다고 한다. 그 때 만난 보령 주민들이 "절대 못 짓도록 막아야 해요.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요" 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본 이후 정 씨는 이번 싸움에 발 벗고 뛰어들게 되었다.

발전소 건설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해양생태계의 파괴다.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전소의 터빈을 돌리고 나오는 온배수는 평균수온보다 7도 이상 높고, 1일 배출량이 한강물의 1.5배나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온배수가 바다로 유입될 경우, 플랑크톤의 생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이곳에 서식하는 바지락, 굴, 낙지 등의 멸종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에게는 생존수단의 상실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농사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정윤기 씨는 "발전소 주변에 자주 발생하는 안개는 농작물의 성장에 피해를 줘, 수확량이 50%나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절망케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이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영흥도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근의 덕적·자월도 등도 온배수 배출에 따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발전소 12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발생할 아황산가스(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1.5배로 추정)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영흥도 주민들에게 이번 싸움은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었다. 특히 젊은이들을 제쳐두고 할머니들이 직접 몸싸움을 벌여가며 공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은 현 사태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영흥 주민들은 지난 5월 17일부터 인천시 담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번 농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은 사무국장 정윤기 씨다. 마을 어른들이신 주민대책위 공동대표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른 나이에 결혼해 벌써 7살난 큰딸과 세살박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정 씨가 가족부양의 부담과 부모님의 만류마저 물리친 채 투쟁에 참가하는 까닭은 무척 단순하고도 당연하게 들린다. "고향을 지키며 살고 싶다. 아이들한테도 떳떳하고 싶다..."

### 한총련 발표 "프락치 조사과정서 사망" 안전기가 · 공정수사 보장 뒤 자수하겠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4일 오후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이석(23·선반기능공) 씨는 프락치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가격을 당한 후 잠을 자다가 죽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수사와 한양대에 남아있는 수배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안전기구를 보장한다면 당사자 2명과 목격자, 현장검증등 모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다시한번 정치불이식 한총련 탄압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3일 오후 5시경 학생회관 5층에서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석 씨를 발견, 총학생회 간부가 그를 5층 방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프락치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일 오후 6시 진술서를 받으려는데 갑자기 진술서를 받으려던 학생의 목을 졸라, 요청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들어와 이를 막은 뒤 다른 학생 2명이 들어와 재조사를 벌였다. 그 학생들은 이 씨의 손을 묶고 몇 차례 가격으로 주의를 준 뒤 다시 진술을 받았으며, 새벽 2시경 모든 진술을 마치고 같이 잠을 잤다. 이튿날 오전 9시경 이 씨의 상태가 이상한 것이 확인돼 진료단에게 연락을 하고, 진료단이 호흡정지등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확인한 뒤 곧바로 한양대 병원으로 옮긴 것이다.

#### <자료> 기자회견문 한총련 입장

류지웅 학우의 죽음에 이어 오늘 또한 청년의 죽음을 맞이한 우리는 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고 이석 씨의 죽음과 유기죽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한총련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고 이석 씨는 프락치로 확인되고 조사 과정에 가격을 당한 후 잠을 자다가 죽

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프락치 발견은 하루 이들의 일이 아닙니다. 류재을 열사의 장례식 도중에도 수많은 프락치가 발견되었고 그중 한 명은 경찰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하며 프락치 활동을 감수받은 바 있습니다. 출범식 행사가 진행되는 30일부터 한양대에서는 수많은 프락치가 발견되었고 모두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행사기간 중 한양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기부, 사복경찰, 프락치들 수는 출범식을 준비하던 학생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시위진입에 나서야 하고 수많은 비정상적인 청년들이 프락치로 활동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이 바로 무고한 청년들의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좀도둑으로 파출소와 경찰서 법원을 출입하는 어린 청년들에게 다가가 구제해준다는 조건으로 프락치를 강요합니다. 대부분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비행청소년이며 심지어는 장애자도 있습니다. 협박과 돈으로 수많은 소외받는 청년들에게 비정상적인 활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류재을 열사 장례식에서 확인된 것은 이런 프락치 활동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발견되는 대부분의 프락치를 정권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 그냥 돌려 보냅니다. 하지만 돌려보낸 프락치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정권은 한보비리, 대선자금비리 등에 대한 국민들 의욕과 항의가 거세지자 언제나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투쟁해왔던 한총련을 와해시키기 위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탄압의 양상은 다양하고 입체적입니다. 살인적인 시위진압, 학생회실 전화도청, 학생간부들의 무선호출기 도청, 미행, 프락치활동, 한총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음해 공작 등 그 인력과 방식은 상상을 초월해 총

공세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 보여주었던 정권의 모습은 극에 달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진압 수많은 프락치 파견, 경찰 입장을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언론, 살인적인 진압동등. 언론은 한총련의 평화적 개최에 대한 의지와 활동에 대한 보도는 묵인한 채 학생들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했습니다.

평화적인 한총련 출범식을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이후 학생, 전경, 시민들의 피해와 부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지영(경희대 수원배움터 사회과학부 1학년), 유수(중앙대 안성배움터 사진학과 4학년), 대경총련, 남총련 소속 학생 등 50여 명이 크게 부상당했고 학생진료단을 거친 학생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민 이철용 씨는 진압경찰에 항의하다가 백골단 6-7명에게 구타당해 지금 중태입니다.

이같은 모든 불상사의 원인은 정권의 부패함에 있습니다. 정권이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학생들을 이에 항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막는 전경도,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프락치도 없을 것입니다.

#### ■ 한총련의 입장

1. 고 이석씨에 대한 죽음에 애도하며 모든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1. 한총련은 이번사건이 다시 한 번 정치불이식 한총련 탄압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 한총련은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1. 프락치 활동, 전경사망, 학생 시민 중태등 모든 사건의 원인인 부패한 김영삼정권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1. 공정수사가 보장된다면 당사자, 목격자, 현장검증등 모든 수사 협조에 응하겠습니다.

1. 작년 연세대처럼 무리한 학내진입 시도시 돌발할 예기치 못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프락치 사망 사건과 무관한 학생들의 안전기구가보장을 요구합니다.

<인권하루소식>  
6월 6일자는 휴간입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7일(토)  
제 8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공권력 폭력 좌시할 수 없어”

### 여대생 성추행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대생 7명이 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정에서 전경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여성·인권단체와 함께 관련 경찰들을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일괄적으로 무혐의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지말라는 교육을 하였고, 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관의 진술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건물 내부에 최루가스가 가득해 성추행할만한 여건이 못됐다는 점 △취재기자가 수십 명이 있어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고소인들은 항고이유서에서 "증거로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성추행 사건에 있어 고소인의 진술은 가장 중요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기있게 고소한 고소인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참고인들의 진술에만 치중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찰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경찰들이 가혹행위 금지 교육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96년 8월 19일 박일용 전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에서 '시위현장에서 총기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으로 보아, 전날인 18일자 독수리 계획에 기재된 '농성자들을 연행할 때 절대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의례적인 문서양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세대 종합관에 출동해 당해 시간에 진압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최루가스가 가득한 상황은 오히려 성추행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며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앞의 학생 어깨에 걸치도록 하는 자세를 이용해 경찰이 손으로 가슴이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성아 간사는 "몇몇 학생들은 항고를 망설이기도 했지만, 공권력의 비도덕성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뜻에서 다시한번 의지를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 "김 대통령 퇴진, 보안법 철폐"

5일 전북 민가협·전북 인권선교협의 회 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주교도

소에 수감중인 손병선·김성만 씨등 양심수 11명이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양심수들은 △김영삼 대통령 퇴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한총련 자성...투명수사 당부 전국연합 애도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지용 전경과 이석 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전국연합도 학생운동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한총련은 정권의 폭력성을 타하기 전에 한총련의 방침과 노선이 얼마나 국민정서에 부합했는가를 먼저 평가하고 자성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평화로운 출범식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출범식 자체를 원천봉쇄한 당국의 무리수가 불행한 사태를 야기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총련의 허물을 당국의 위기탈출용으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 ■ 행사와동행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때: 6월 9일(월) 오후 3시 · 곳: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국회복지포럼 · 주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 6월 항쟁 10주년 기념행사
  - 6월항쟁 10주년 시민문화제 및 민주주의 박람회 등
  - 때: 6월 7일(토)-9일(월) · 곳: 대화로 마로니에 공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개설
  - 여성단체연합은 5일부터 한국여성운동정보 홈페이지 「Women21」을 개설한다. Women21은 최근 여성문제의 현안을 소개하는 '핫이슈', 10개 부문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DB제공서비스', 대중 의견수렴창구인 '토론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소: http://www.women21.or.kr 문의: 273-9535



###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최종회>

####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 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무료로 형사사건을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무료로 형사해택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반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형사변론실시는 위 기관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민들을 위한 무료형사변론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오다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비판과 그 필요성을 계속 지적받자 이를 받아들여 실시된 것이지만 소년법들을 위한 사법제도개선 조치로 행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실시전부터도 소년법은 무료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국선변호인제도에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활동이 일반사선변호인들에 의한 변론만큼 충분하고 효과적인 변호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하다.

####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법무부 답변: 또한 청소년 선도위원, 보호관찰소 보호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으로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를 96년 7월 1일부터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자의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론: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예방, 사

회적응 훈련실시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들은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이 지역명망가 중심의 상공인들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속적인 선도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을 통합하는 것은 청소년보호관찰제도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에 극히 사소한 안전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것과 같이 효율적인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이루어졌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소년법 선도를 위한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되나,

####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1995-2004년)'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써 중요한 권리이다. 무지를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정부가 인권교육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권리당사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조약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건 물론이고, 가르쳐야 할 교사들도 여기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아동인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판사, 법집행공무원, 보건 의료요원 그리고 조약이 포괄하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을 해낼 임무를 띤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아주 먼 얘기일 뿐이다.

95년 5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조약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하지만 한 학교에 1권씩 돌아가기도 힘든 실정이었다고 유니세프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정부는 '인권교육' 이행에 대한 답변에서 늘상 유니세프의 활동을 내세워 설명하고 있다. 유니세프의 아동과 인권교육을 위한 활동은 이미 널리 인정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유니세프의 활동인 것이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니다. 97년 5월, 교육부는 "이미 아동권리 교육을 교과 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학교 도덕교과과정을 아무리 눈썰고 살펴봐도 조약에 관련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학년에서나 국가에 대한 맹세와 국가계약법으로 시작되는 교과서에는 학교에서 지킬 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일, 예절교육 등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지, '조약내용'의 언급은 차치하고라도 '권리'라는 단어조차 발견하기 힘들다.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과서에서 10여 쪽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권리'가 유일한 예이다.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타당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갖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기본 교과 과정에 권리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소년법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형편은 여전하다.

####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법무부 답변: 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 1월 8일부터 소년원의 명칭은 '학교'로 변경하고 소년 범죄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반론: 1997. 1.8 부터 소년원을 학교로 바꾸어 직업교육 및 일반 교과목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하여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의 비행청소년의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도권에는 서울소년원과 여자들만 수용하는 안양소년원 두 곳이 있을 뿐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10일(화)

제 9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통신검열...검열철폐로!

###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최근 잇따른 컴퓨터통신 ID삭제 조치에 대해 관련단체와 통신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최근 각 단체 및 개인 ID사용을 정지시키고 게시물 삭제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열흘 동안 50여 개 ID 삭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천리안' '나우누리' 등 컴퓨터통신 서비스업체로부터 사용을 중지당한 ID는 총 50여 개에 달한다. ID와 게시물의 삭제는 서비스업체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ID삭제의 근거로 작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위헌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6월 4일자 참조>

(주)데이콤의 '천리안'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전국연합(ID: NADUK)도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ID를 사용중지당했으며, '96·97 경찰폭력 주요사례' <성명> 한총련 출범식 개최허용 촉구' <성명> 경찰은 왜 국민을 때리는가' 등 세 건의 글을 삭제당한 바 있다. '천리안' 측은 전국연합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정보

통신부로부터 3건의 글을 삭제하고 ID를 중지시키라는 공문이 왔다"며 "위반 사항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집회 선전·선동) 위반"이라고 밝혔다.

#### 대선 앞두고 '대대적 검열' 우려

이와 관련, 전국연합은 지난 4, 5일 (주)데이콤과 정보통신부에 각각 공문을 보내 "ID사용정지와 게시물 삭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중앙일간지 사과문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연합 안태원 간사는 "대선을 앞두

고 대대적인 검열의 가능성이 있다"며 "법통신인 연대모임을 꾸려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ID사용정지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과 업무방해 혐의로의 고소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보통신담당 최세진 씨는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판정을 받았듯이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철폐싸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10일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정보통신부 앞 시위 등도 계획하고 있다.

#### '천리안'에서 삭제 당한 전국연합 게시물(주요 내용 발췌)

### "이 글을 게재하는 것은 '불법집회 방조죄'입니다"

- 경찰당국은 무리한 원천봉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평화적인 출범식 개최를 보장하라! -

1. ... 우리는 학생들의 연례적인 행사인 출범식에 대한 경찰당국의 무리한 원천봉쇄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또다시 불의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찰당국에 근거없는 원천봉쇄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평화적인 출범식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 ... 학생들이 이미 평화적으로 출범식을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이 이른바 한총련의 친북, 이적활동이 우려된다는 막연하고 근거없는 이유로 학생들의 정당한 연례행사인 출범식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명백히 과잉반응이며 이성적이지 못한 처사이다.
3.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경찰당국이 학생을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무분별한 과잉진압과 일체의 학생활동에 대한 철저한 원천봉쇄방향이 사태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 원천봉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평화적인 출범식 개최요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997. 5. 20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인권하루소식>이 지령 900호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세계 여성장애인 한자리에” 「빛장」 등 12명 국제포럼 참가

국제여성장애인리더쉽 개발을 위한 포럼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후속작업으로 국제장애인연구소(World Insitute Disabilities)가 주최하고, 미국정부와 민간단체 '2000 프로젝트'(projects)가 공동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전세계 90개국에서 2-3백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참가하여 여성장애인의 리더쉽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 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후속작업

국내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빛장)을 주축으로 박영희(참가자 대표·빛장 운영위원) 씨, 이낙영(한국맹인여성회)씨 등 7명의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참가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국가 여성장애인 운동가들을 직접 만나고 여성장애인 운동의 이념과 실재를 배우고 돌아와 국내 상황에 맞는 여성장애인운동의 이론과 실천방향을 모색한다"는 포부를 세우고 있다.

박영희(37·휠체어 장애인) 씨는 "다른 나라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차별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알맞은 해결책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다. 또한 "장애인이란 힘든 여행이 될 것이라는 각오는 하고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부담감과 함께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국제포럼에서는 △리더쉽의 양상들 △교육과 개발원조 △건강과 가족 △고용전략 △의사교류와 기술 등 5가지 주제와 연관된 워크샵이 열리며, 국가별 장애여성 현황 발표시간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 주요 공판 안내

#### ▶6월10일(화)

김동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정숙(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전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오후2시 2단독 317호 속행

박호의 4명(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신건  
한수정(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 ▶6월11일(수)

김중범(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2단독 317호 속행  
나현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전해투) 오후5시 4단독 524호 속행

#### ▶6월12일(목)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6월13일(금)

함운경(국보법 불고지) 오전11시 10단독 525호 속행  
변성민의 6명(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 주/간/인/권/호/름

(97년 6월 2일부터 8일까지)

#### ◆ 6월 2일(월)

나우누리, 통신망에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실은 이용자의 ID 무더기로 사용금지/건설교통부, 98년 1월부터 일용직에 대해 퇴직금 지급토록 할 방침/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 국내최고기준의 최고 13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주민들 반발,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주민 반발로 가동중단/한국의국인노동자관련법대체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촉구하며 기독교회관서 농성돌입/최근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여아 성추행 사건과 동거녀 폭행 사건으로 시민단체들 반발/서울시교육청, 전교조 활동 관련 김귀식위원장과 유수용 서울시지부장등 2명에게 정직 2개월씩 징계조치/개신교 15개 교단, 정부의 대북지원대책 촉구/알제리 5일 실시될 총선 앞두고 있던 폭탄테러로 1백30여명 사상

#### ◆ 6월 3일(화)

정부, 가을 정기국회서 음비법 개정해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키로/경찰, 한총련 시위관련 6백35명 연행, 이중 49명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2일 한총련 출범식 장소인 한양대 부근서 시위대와 대치중 사망한 유지웅 상경 퍼포포 그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특수2부, 입시학원으로부터 각종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고교교사 2천여 명의 명단 확보, 교육부에 징계요청 방침/통일원, 한겨레신문사가 95년부터 설립을 추진해온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법인설립 허가/한국개발연구원, 외국인력 도입 효율성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 필요하다고 주장/프랑스 총선 이후 여성의원 63명으로 2배 증가

#### ◆ 6월 4일(수)

국방부, 98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9천5백11억원(13.6%)이 증가한 16조3천16억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재경원에 요청/과천 종합청사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3천여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집회/(워싱턴 포스트)지 보도,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물윤리자문위원회 인간배아의 복제를 부분 허용키로 결정

#### ◆ 6월 5일(목)

정부, 이석 씨 사망사건 관련 한총련의 폭력행위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특별검거령을 내리고 6월말까지 조기검거키로/여아 한총련의 이석 씨 폭행치사사건에 대해 일제히 규탄성명내고 한총련의 자진해산 촉구/황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민·사회단체, '학생운동의 거들남'과 '당국의 신중한 대처'를 한총련과 정부당국에 각각 촉구/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내 중고생 3천89명중 78.1%가 가출충동을 느끼며, 12.5%가 가출경험있어

#### ◆ 6월 8일(일)

울산 효성티앤시 노조 발표, 회사측의 교섭거부에 항의해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강제해산시키면서 폭력휘둘러 노조원 12명 부상/한겨레신문사·'6월민주항쟁 1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주최한 시민달리기 '행진 610'에 3천2백여명 참여

인권  
시평

###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허는 장이 되어야

곽 노 현 (방송대 법학 교수)

요즘 방송사와 신문사가 연이어 대선 주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여당측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언론사들이 대선 주자 토론회를 경쟁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니 92년 대선 당시와 비교할 때 격세지감이 들기도 한다. 현재 대선주자 토론회는 각 주자의 이력과 신상을 중심으로 약점 들춰내기과 흠집내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시켜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요구도 적지 않지만 이 경우 후보들에게는 더욱 쉬운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선 주자 각각을 놓고 미묘하게 분담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형식상, 정책과 미래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면 과거의 흠집이나 실책 추궁에서 비롯되는 그나마의 긴장감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가 비전과 국정 현안을 놓고 전개되는 여야간의 치열한 정책대결식 토론회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규명 논의 대신 개인의 윤리적 책임론 제만이 전면에 부상하기 쉽다. 그 결과 기껏해야 '과거에 이러저러한 입장이거나 견해를 바꾼 사실이 있느냐'는 식의 단순질문이 행세하게 된다. 간혹 정책질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통계수치 암기력 테스트로 골탕을 먹이려는 것인지 국정의 최고책임자에게 필요한 폭넓은 사회적 인식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려는 것인지가 뚜렷치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 패널리스트의 문제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명색이 대선주자라는 이들이 민주화나 사회정의의 위해

### 대선주자 토론회에 부처...

땃땃하게 내놓을만한 업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여권후보들의 경우 그저 권력지분 유지를 위해 나선 듯하고 이른바 김심을 향해 발언하는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다. 정발협의 동정과 청와대의 풍향에 온 신경을 쏟다보니 책임있는 국정수습방안을 밝히거나 개혁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소신있게 내놓는 따위의 현상은 볼 수 없다. 그저 추상적인 좋은 말로 모든 것을 얼버무리며 물밑으로는 구태를 계속할 뿐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현 정권과 지지기반이나 득표전략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른바 신한국 구룡들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기만 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니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예컨대 국민들은 현 정권의 개혁이 '방향을 옳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여권 경선후보들로부터 듣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현 정권은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였길래 이런 꼬라서니를 하게 되었는지, 다른 개

혁정도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현 정권은 어째서 그러한 전략을 선택할 수 없었는지,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그러한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핵심문제들이 좀처럼 개선되거나 추궁되지 않기 때문이다.

#### 민주화를 위한 업적은 무엇인가

특히 다음 대통령의 임기중 실질적 중요성을 더해갈 인권과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패널리스트가 거의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단골메뉴인 노동법만 해도 언제나 날치기라는 질타적 흠을 문제 삼았을 뿐 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같은 날 날치기 처리된 끝에 곧 소집될 임시국회의 제1의제로 이미 올라 있는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그나마의 언급도 없었다. 반인권적인 지역차별문제나 외국인노동자문제, 그리고 사회복지문제도 마찬가지로 신세다. 더욱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난민과 망명자 등의 인권문제나 통일 이후의 북한지도층 처리문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는 거의 없다. 드물게 논의되는 경우에도 케케묵은 안보논리와 경제논리의 반복만이 들릴 뿐이었다.

#### 인권·통일단체들이 해야 할 바

한마디로 적지 않은 대선주자토론회가 이미 진행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은커녕 과거에 대한 정치적 반성의 효과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자금의 텔레비전 토론회가 전파의 남비라는 비판을 피하고 정치적 각성과 토론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과 인권을 축으로 각 후보들의 비전과 지혜, 인품과 개성을 엿볼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인권단체와 통일단체들이 다수 개발하여 언론사에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재개발지역, “무서워 못살겠다”

### 집단폭행에 부너자 성폭행까지

철거를 목전에 둔 지역 주민들이 철거 구역원들의 협박과 폭력에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 이 지역 아주머니 2명이 철거구역원들에게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정 아무개(41) 씨는 “7-8명의 구역원들이 세입자대책위 사무실로 찾아와, 사무실 앞에 걸려있는 깃발을 내리러면서 시비를 걸어오다가 속옷을 찢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으로 김성진(32) 씨 등 적준개발(대표이사 정숙중) 소속 구역원 3명이 용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손찌검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담당형사는 “주민들 주장대로 성폭행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 쌍방 폭행 사건 정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원동 주민들은 지역에 상주하

고 있는 구역직원들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홍성군(41) 씨는 “낮에는 물론, 밤 12시에도 두세명씩 떴다 다니며 ‘보복이 두려워 못살겠다’ 등 협박과 욕설을 지껄이고 다닌다. 구역원들은 주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역직원, 마을 순찰하며 협박 한편, 지난 4월 29일에도 이 지역에서는 철거구역원들의 주민집단폭행 사건이 발생 한 바 있다. 특히 이날 도원동을 방문했던 서울지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구역원들에게 집중구타를 당해 이태고 서울지역철거민연합(서철연) 의장이 전치6주의 부상을 입는 등 20여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의장 등 서철연 회원과 주민 11명은 재개발조합 조합장 김원한 씨와 적준구역 대표 정숙중 씨, 기타 성명불상의 구역원들을 지난 5월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민변, ‘통신 검열’ 비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최근 컴퓨터통신 ID의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파문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컴퓨터통신의 통신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이 엄정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위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1997년 6월 11일(수)

제 9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대책 없다. 이사부터 가라”

가옥주와 세입자를 포함해 총 1천1백여 세대가 거주하던 도원동 재개발지구는 현재 주민의 50% 가량이 이주한 상황이며, 남아 있는 세입자 70-80여 세대가 대책위를 구성해 가수용단지 설치 등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측은 오는 8월말까지로 이주기한을 통보하고 있으나, 이주대책은 물론, 이주비용조차 마련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 이경자(44) 씨는 “재개발조합측은 주민들이 이사가고 나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면 이주비용을 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3개월 후에 이사비용을 준다니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는 7월경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는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 박종철 열사 추모비 제막

### 물고문 형상화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회장 김승훈 신부)는 10일 6월항쟁 10주년을 맞아 서울대 도서관 옆 잔디밭에서 유가족과 재야인사, 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비 제막식을 가졌다.

화강암 두 기둥 사이의 푸른빛 동판에 옥조 물 속에 처박힌 사람의 머리,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막 비상하러 날갯짓을 할 찰나의 한 마리 비둘기, 앓듯게 보이는 두상-87년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 열사의 추모비 모습이다.

추모비 앞면에는 시인 김정환 씨가 쓴 “박종철, 여기 10년 동안 견고해진 눈물로 너를 세운다”로 끝나는 시문을 써넣었고, 뒷면에는 “박종철 열사의 숨결은 민주주의 진한 내음으로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새겨 넣었다. 추모비 설계는 화가 홍성담씨가, 조각은 김희상씨가 맡았다.

##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와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종배)가 주최한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가 지난 5일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3월 5일 열린 제1차 학술회의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방치된 민주열사들과 의문사한 이들의 문제를 집중조명하는 세 차례의 학술회의 중 두 번째 학술행사이다. 제1차 학술회의가 근현대사의 흐름을 짚어보고 민족민주열사들의 희생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자리였다면, 2차 학술회의는 구체적으로 폭력적인 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의문사 문제에 대해 원인과 현황,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들을 진단하는 자리였다.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제안

이번 학술회의 제1부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에서는 먼저, 박원순 변호사가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박 변호사는 의문사를 “1)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 2) 사인에 관한 진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죽음 3) 사인의 은폐 및 조작의 동기가 정치적 이유나 정부기관의 책임 회피에 있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청산의 과제들을 열거하면서 “과거청산의 가장 큰 과제는 의문사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의문사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법원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수사기관의 비협조와 장애물로 등장하는 법제도의 문제, 우리 사회의 패카시즘적 분위기, 전문가와 전문단체의 부재 등이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육중 사망원인, ‘강제전향공작’ 다수 차지

제2부에서는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하여’란 주제로 배동인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배 교수는 “시기별로 박정희 정권시기에 66명, 전두환 정권시기에 78명, 노태우 정권시기에 1백10명, 김영삼 정권시기에 58명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정희 정권시기에 발생한 열사들의 사망 형태인 분신, 투신, 활북, 옥사, 고문 등에 의한 타살 의문사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육중 희생자 문제’란 주제로 보조발제에 나선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 씨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법살인이 이어져 왔던 사례들을 분석하고, 감옥에서 발생한 전향공작의 참혹함과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은 장기수들의 문제를 제기했다.

권 씨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육중 사망자 79명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70년대 사망자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원인은 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진행된 강제전향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전향공작으로 인해 사망자 79명중 단식 및 고문후유증(31), 자살(10) 등의 원인으로 죽어갔다. 권 씨는 “사상을 이유로 고문과 사형이 정당함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반민주적 요소 척결과 민주주의의 실현, 국민기본권의 보장 등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 인권영광 ① -〈산부인과〉

### ‘산부인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감독·박철수/주연·황신혜, 방은진

영화가 시작되기 전 일단 껌을 하나 까서 입 속에 넣었다. 하루 전에 먼저 이 영화를 본 친구가 충격적인 장면이 속을 거북하게 할 것이라고, 가능하면 음식을 먹지 말고 가라고 했던 것이다.

결과를 미리 말하면 나는 껌을 그리 씹지 않았다. 대신 조금 울었다. 감독 스스로 ‘까칠 시네마라고 이름붙인 영화 〈산부인과〉는 일관된 줄거리를 띠고 있지는 않다. 상당히 진보적이고 감정의 기록이 심한 성격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하지만 두 딸을 둔 기혼녀 한정연, 인정 많고 매사에 사려가 깊은 미혼녀 민혜석, 전혀 다른 성격의 이 두 사람은 산부인과를 지키는 전문의이자 자신들 역시 산부인과적 환부를 갖고 있는 잠재적 환자다. 두 의사는 옴니버스 식으로 이어지는 사연을 들려주고, 충고하고, 판단하고, 해결해 주기까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시초를 닮아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갖가지 기가막힌 사연들이 부산하게 뒤얽힌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왕에 태어난 사람들은 첨예하게 갈등하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하면 새로운 문제를 배태하기도 한다. 은밀한 불륜과 비열한 추행이 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탄생시키는가 하면, 성을 남용하다가 생긴 생명을 공산품처럼 제거하려는 철면피나 철부지도 드나든다. 딸만 내리낳은 임신부의 투신 위협이나, 천운이 있는 생시에 가문의 종손을 낳기 위해 출산 시간을 늦추려는 기이한 노력들은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비애를 느끼게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새로운 것이거나 생명과 삶에 대한 전혀 다른 각도나 깊이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단지 요즘 만병통치제로 쓰이는 웃음에 질여져 다양하게 그리고 가볍게 나열되는데도 호쾌하게 웃을 수 없다는 것이 좀 다를 뿐이다. 또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관객을 향해 대사를 하거나, 핸드 헬드 카메라를 사용해 화면 구도를 불안정하게 연출하는 것 등도 그동안에 많이 답습된 기법들이라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기의 머리가 자궁을 빠져 나오는 자연 분만 장면이 서너 번, 직접 매스로 배를 가르고 기구로 해집어 아이를 꺼내는 제왕절개 장면이 두 번이나 ‘여과없이’ 나온 것은 친구의 말처럼 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이 장면이야말로 껌을 씹게 하는 동시에 눈물이 솟게 하는 장면이었다. ‘집승보다 더 무자비한 과정을 거쳐서 천부인권을 가진, 전상천하에 유아독존하는 인간이 태어나는구나. 저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인간 사이에 높낮이가 있을 수 있을까. 어머니의 큰 고통을 뚫고 태어나는 존엄한 벌거숭이데!’

아직 진행중인 장면 위로 스태프들의 이름이 씌어진 자막이 올라가고 영화는 또 한 번의 진부한,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을 던진 채 정지된다. 영화의 모든 것이 현실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

김경실(민주언론운동협의회 영화반 회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12일(목)

제 9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 한총련 출범식 발미,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한총련 출범식 이후 대학생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 검문·검색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경찰이 6·10행사에 참가하려는 학생들까지 마구 연행하는 등 대학생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조선대 이 아무개(토목과 4학년)씨 등 5명은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유동 YWCA에서 열린 '6·10 항쟁 10주년 정신계승대회'에 참석하려 가던 길에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사진 대조를 해야겠다"며 이들을 광주 북부경찰서로 강제연행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경찰은 "6·10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위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얼굴 사진을 찍어야 보내줄 수 있다"며 학생들을 강제구금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학생을 구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학생들이 모이면 한총련 출범식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으며,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학생들을 격리코자 했다"고 밝혔다.

연행된 한 학생은 "합법적으로 허가된 집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출범식과 무관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 씨 등과 마찬가지로 6·10행사장에 가던 조선대생 김 아무개 씨(물리학과 2년)을 비롯한 4명의 학생들도 행사장 주변에서 경찰에 의해 "학생들은 이런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라며 제지를 당해 되돌아오고 말았다.

한편,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현재 까지도 광주로 진입하는 외곽 곳곳에서는 검문·검색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 서준식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준식 씨는 지난 71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을 복역한 뒤, 사회안전법에 의해 10년을 더 복역하고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까지 4차례 보안관찰처분을 연장·적용받아 왔다.

보안관찰법은 89년에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제1조)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내란 및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2, 3조).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매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을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거주지·재산상황·가입단체·종교·교우관계 등과 심지어 만난사람의 인적사항까지 보고해야(18조)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고 있다.

2-3일 전부터는 전경들이 출범식 참석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목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분확인을 이유로 학생들을 연행하고 있다.

## 경찰폭행 중상입은 이철용 씨 국군통합병원으로 강제이송

지난 1일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다 전경들에게 집단폭행 당해 중상을 입은 이철용(33, 일용직 노동자) 씨가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권하루소식 6월 3일자 참조>

이 씨는 폭행을 당한뒤 이대부속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경찰이 이 씨의 신병을 군 수사대에 넘김에 따라 5일 서울시 등촌동 소재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씨가 군 수사대로 넘어간 까닭은 경찰의 신원조사 결과, 12년전 방위복무 도중 탈영한 사실을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통합병원 내 수감자 병실에 입원조치됐으며, 면회도 제한받고 있다.

10일 이 씨를 면회한 박기호(38) 씨는 "경찰이 이 씨에게 5·18 광주순례모임에 참가한 사진을 보이며, 관련사실을 추궁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사건을 은폐하고 이 씨를 폭력시위분자로 몰아가려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곧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이마부위가 함몰되고, 목뼈 2대에 금이 갔으며, 턱뼈가 부서져 3급 정도의 향후 언어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머리속에 피가 고여 13일 뇌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오는 19일 KNCC 회관에서 이철용 씨 사건을 비롯해 경찰에 의한 '시민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경찰폭행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도 촉구될 예정이다.

## 죽음으로 저항한 할아버지 운전기사 부산 국민캡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한평생을 택시노동자로 살아왔던 홍장길(58) 씨의 음독자결 사건이 부산지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홍장길 씨는 부산시 택시회사 국민캡(주) (회장 허준도) 소속으로 24년 8개월간 일해왔으나, 회사측의 일방적인 분할매각 조치와 생존권 위협에 항의하며 지난 5월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홍 씨의 죽음을 가져온 국민캡 파문은 지난 3월 회사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1백63대의 보유택시 전부를 시내 4개 회사에 분할매각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시작됐다. 회사측 방침에 대해 노조측은 "직접적인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을 겪게 된다"며 매각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회사가 나눠져 매각될 경우, 국민캡 소속 노동자 3백50여명은 직장을 옮겨야 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회사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근속연수, 복지혜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3개월간 견습사원으로 일해야 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번 매각조치를 사실상의 정리해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이 개인적인 치부수단으로서 분할매각을 악용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민캡 매각시 받게되는 프리미엄은 택시 한 대당 1천9백여 만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허준도 회장은 24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주, "법은 내 품에"

그러나, 이같은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캡 분할매각에 대해 현실적인 제재를 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택시회사의 분할매각이 현행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 제10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건교부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회사 매각의 조건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건교부 훈령을 이용해 사업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안정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동시에 업주들은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분할매각을 악용한다"며 "택시사업체의 매각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및 경력인정을 전제로 한 전부양도(한 회사로의 매각)가 이뤄지도록 훈령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캡 문제, 부산 전역으로 확산

홍 씨의 사망 이후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사회단체들은 '고 홍장길 동지 장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분할매각이 철회되고 건교부 훈령이 개정될 때까지 장례를 미룬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일과 7일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노동자들과 대학생, 사회단체 회원 등이 부산역 광장에서 잇따라 규탄대회를 가지는 등 연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대검 공안부는 안기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열고, 한총련을 와해시키기로 결정했다.

고 이석 씨의 죽음을 발미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한총련 고사작전은 학원의 자치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처사이며,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반인륜적인 작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10일 발표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성명서를 소개한다(편집자주).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한총련과 학생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

1. 오늘 대검 공안부는 안기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 수사본부 회의를 가진 후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에 대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에 속해있는 전국 156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는 8월 1일까지 탈퇴하지 않는다면 총학생회장 등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 우리는 이러한 대검 공안부의 발표가 올바른 법치가 아닌 과거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한다. 한총련은 그동안 여러 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전국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가입한 공개 학생대중단체이며 이 한총련 조직 속에는 다양한 주의와 주장을 가지고 있는 총학생회가 속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그런데도 대검 공안부가 사법부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내려져야 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몹시 부당한 탄압이라고 판단된다.

4. 특히 한총련에게 적용하겠다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규정의 경우 이는 복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데 금번 계기가 된 한총련 출범식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적행위를 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5. 한총련이 단체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지고 자 한 것일 뿐 복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 목적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거나 복과 팩스 교환 같은 초보적인 교류조차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이러한 마녀사냥식의 이성을 잃은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6.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진 결사의 자유를 대검 공안부는 명백히 부정하고 있다.

고 이석씨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한총련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한 당국의 강경진압과 대선자금 공개라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눈감고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탄압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1997. 6. 10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13일(금)  
제 9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에 관한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의 사회

복지서비스 책임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권리와 보호 수준 등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성 교수(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와 김용일(한국사회복지사회회 회장) 씨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했다.

백종만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임을 밝히고, 최저생활의 보호뿐 아니라 발달의 욕구에 대해서도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없어도 복지사업 가능하도록**  
이밖에도 시설 및 법인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소개됐다.

윤 교수가 발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법인을 구성할 정도의 재산이 없어도 전문지식과 경험,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업을 개방하는 조항 △국가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고시제도를 도입하는 조항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산 사항과 자산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한총련 무기한 단식농성

### 대선자금 공개요구

12일 오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 31명은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5기 한총련 구국 단식단 명의로 발표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공개와 임기내 즉각 퇴진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성당 주변에 전투경찰을 배치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으며, 농성장으로 배달되는 음료수까지 차단하고 있다.

## 좌익사범합수부를 주목하라

### 고려대생 15명 긴급체포

고려대 재학생 및 졸업생 15명이 12, 13일 이틀사이에 긴급체포되었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과거 총학생회 간부를 지냈던 이들로, 고려대 총학생회측에 따르면 연행자들 대다수는 NL계열의 공개조직인 '청년'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15명은 대부분 자택이나 학교부근인 제기시장에서 연행되어 잠안동 대공본실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연행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이 총학생회측에 따르면 이들 연행자외에도 추가 영장발부자가 15명 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조직사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전국연합 교육선전국 상근자인 최애경(95년 고대 총학생회 선전국장) 씨의 연행에 대해 "경찰이 한총련에 대한 마녀사냥을 넘어 시민·사회단체 실무자까지 구속하는 공안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이석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개되고 있는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의 활동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민주화 세력 탄압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행자 명단> ·강성훈(전기공학 94) 김양남(한국사 93) 류석상(국어교육 92) 이정원(체육교육 93) 원정연(건축공학 93) 이선정(농경 93) 윤호준(96년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정희일(법학 93) 조윤정(국어교육 93) 최애경(95년 총학생회 선전국장, 졸업생) 홍석범(금속공학 93) 홍연아(컴퓨터공학 91, 졸업생)

·군복무중 기무사로 연행: 김성희(95년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권용찬(통계 92) 이용남(무역 92) 이상 15명

## 세계의 인권 <14>

### 자유를 위한 맞섬, 언론인의 댓가

언론-말이나 글로 자기 사상을 발표하여 여론의,

언론자유- 근대헌법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는 자유의 하나로써 개인이 그 사상이나 의견을 언론에 의해 발표하는 자유,

언론통제- 국가가 공권력으로 민중의 표현 활동을 제한하는 일

국어사전에는 이런 짤막한 설명이 달렸을 뿐이지만 위 단어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치러지는 식탁이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식탁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주문할 수 없는 음식이다. 따라서 식탁을 치르는 임무를 띤 언론인들의 역할은 자못 크지만, 일부 언론인들은 편식을 부채질 하기도 하고 조미료를 듬뿍 치기도 하고 어떤 재료는 아예 시장조차 보지 않는다.

특히, 인간에게 일어나는 큰 재해중의 하나인 인권침해에 관해선 어떠한가? 언론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비난 받을 대상을 성급하게 지정하고 포화를 쏟아냄으로써 시끄러운 관찰을 통해서 보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일을 자주 저지른다. 한편론 언론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재빠른 대응을 끌어낼 수 있는 '선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언론인이 이런 힘을 발휘하려 할 때엔 종종 막대한 댓가가 따른다.

'표현 및 정보교류 자유에 관한 국제네트웍'(IFEX,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and Exchange Network)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에 전세계적으

로 일어난 언론자유 침해 사례가 1천5백여 건에 달하며, 40~50명에 이르는 저널리스트와 그밖에 언론 종사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인들이 치르는 댓가란 납치(3%), 협박(8%), 법적 규제(17%), 체포(27%)와 폭행(21%)이며 심지어는 피살(4%)이다.

마피아나 약물밀매집단, 정치적, 종교적 극단주의자의 공격과 정부의 언론 통제는 계속되는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다. '국경없는 기자들(Reporters sans frontieres)'이 보고하는 언론인들의 전선에선 최근에도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살해!

97년 3월 29일, 이란의 테헤란 교외에서 45세의 남자 시체가 땅에 반쯤 묻힌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Me'yar"라는 월간 잡지의 편집인인 Ebrahim Zal Zadeh 씨로 시체로 발견되기 1개월전에 보안당국에 연행되었다. 그는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안전가옥으로 끌려갔고, 그의 가족들은 당국으로부터 연행 사실에 관해선나 혹 그가 죽더라도 그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4월 27일, 르완다의 격월간 잡지 "Umuravumba"의 편집장인 Appolos Hakizimana 씨가 살해당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 두 명에게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것이다. 죽기 3개월전에는 그의 납치당할 뻔했으나, 총으로 위협당해 차에 실리기 직전에 이웃들의 저지로 간신히 모면한 적이 있었다.

#### 폭행, 공격, 체포!

2월 4일, 유고 벨그라드, 대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여러 명의 언론인들이 폭행당했다. 그 와중에 카메라 기자인 Maria Fleet의 카메라가 망가졌다. 4월 11일, 알제리의 한 아랍어 일간신문의 언론인 Bouabdallah 씨는 경찰에게 체포되어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 지금까지 당국은 그의 구금에 대

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4월 11일 아침,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잡지사 "Nefes"의 건물 입구 밖에서 폭탄이 터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뿐이지만 이 사건에 책임질만한 어떤 집단이나 개인도 드러나지 않았다. 4월 18일, 과테말라에서는 불법적인 습격을 통해 텔레비전 뉴스프로그램 "Noti-7"과 일간 "A1 Dia"의 비디오테이프와 원판사진 등이 강탈당했다. 4월 25일 소말리아에서는 AFP 특파원인 Ali Musa Abdi 씨의 집이 수류탄 투척을 받았다.

####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한편, 천안문 학살 때 민주세력을 지원한 언론인들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했던 중국에선 '반-혁명' 범죄 규정에 대한 개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제펜(International Pen)의 '투옥작가 위원회'는 법이 개정된다 해도 '반-혁명' 혐의로 중국과 티벳에서 수감되어 있는 39명의 언론인과 출판인들이 별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은 '반-혁명' 범죄 규정을 단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는 문구로 바꿀 계획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암울한 공격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배달되는 신문과 뉴스의 과정과정에서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97년 6월 한국에선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 방송 허용을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언론'을 독식하려는 시도, 정치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큰 공격이 아닐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우리의 거리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광장을 없애버리는 행위이다-Human Rights Watch"

일부 언론인들은 편식을 부채질 하기도 하고 조미료를 듬뿍 치기도 하고 어떤 재료는 아예 시장조차 보지 않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14일(토)

제 9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이적단체 맞아요?

###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20명 연행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대장 류석상, 청년) 관련자들에 대한 연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개활동조직에 대해 무리하게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임기를 만료한 총학생회 집행부원들까지 연행, 이적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측은 연행자중 '류석상, 김광남, 원정연, 이선정 씨등 4명을 제외한 나

머지 사람들은 과거에 총학생회 집행부 활동을 했을 뿐 '청년 회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입증자료는 없지만..."

반면 13일 오전 서울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측은 "청년'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은 이적단체를 구성·활동한 것이기에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 학생회 집행부도 가입해 활동한 자료는 없지만

청년의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적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대자보 통해 강령·규약 공개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청년'측은 강령·규약 및 그간의 활동을 공개하고 나섰다.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은 95년 10월 발족하면서, "학생운동의 침체를 뛰어넘어 지금까지의 모습을 혁신하며 보다 더 많은 대중 속에서 거듭날 것을 결의하는, 애국적 지향과 실천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건설된 조직"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 모집은 대자보 등을 통해 강령과 규약(수첩제작), 활동 내용을 알리며 공개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밝힌 강령을 살펴보면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멸시하는 낡은 사상 조류를 일소하고, 인간존중과 인간사랑의 이념에 기초한 건강하고 활기있는 공동체를 건설한다. 2.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며,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굳게 연대한다. 3. 학우대중이 주인되는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등이다. 또한 규약은 회원가입,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의구성, 회의운영 등 민주적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청년'이 그간 해온 사업은 96년 7월 하순 파주지역의 흥수 복구사업 참여, 매주 토요일 학내에서 토론마당인 '광장', 매주 토요일 제기동 미도과 백화점 앞에서 토론마당, 공개강연회 추진 등이었다고 청년측은 밝혔다.

13일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류석상 씨를 포함해 연행자는 20명으로, 권영태(법학과 졸업, 군복무중) 권대오(무역학과 4학년, 군복무중) 한재현(동양사학과 4학년) 심재수(불문과 4학년) 이준(농경제학과 4학년, 군복무중) 씨 등 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현장스케치> 명동성당 한총련 단식농성장 "물 한 통만 들여보내 주세요"

평일이 내리치는 13일 오전, 명동성당 입구계단에서 31명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쇠사슬로 은뿔을 감은 채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정부가 '학생운동 씨말리기' 작전에 돌입했고 언론 역시 집중포화를 퍼붓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또다시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 투쟁수단을 선택하였는가? 농성단 대표인 부민혁(부산대 산업공학 4년) 씨는 이렇게 답변했다. "이석 씨의 죽음은 가슴아픈 일이며, 한총련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김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및 하야를 촉구하는 투쟁의 초점이 흐려져서 안되기 때문이다."

"이석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질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그는 "학생들의 폭행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사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상이 가려져야 하며, 그 후 한총련 지도부에서 책임지는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더욱 열심히 투쟁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87년 물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도 이날 대학생들의 농성장을 찾아왔다. 걱정어린 눈빛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던 박 씨는 "국민 다수의 실망에 대해 한총련은 속히 거듭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자금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당 입구를 막아선 전경들 틈새로 한 어머니가 주저앉아 있었다. "제발 물 한 통만 들여가도록 해주세요" 민가협 소속의 이 어머니는 해 가리개도 없는 평발 속에서 단식중인 아들딸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경 중대장의 대답은 한마디뿐이었다. "상부의 지시라 생수 한 통도 반입시킬 수 없습니다."

한총련 대학생들은 최소한의 인간대우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생수 한 통을 손에 든 채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 5·18공대위, 인권센터로 발전 총체적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와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공동주최로 11일 오후 2시 광주 무등컨벤션센터에서 "5·18문제 완전해결과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12·12와 5·18재판 결과에 대한 법적 분석'에 대해,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5·18진실규명과 과거청산, 그리고 인권과 정의를 위한 5·18 정신 계승의 방안'에 대해, 그리고 나간재(전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5·18민중항쟁 정신의 실천적 구현'에 대해 발표했다.

한 교수는 이번 재판이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첫 출발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면서 종합적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위원회의 발족과 종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군정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교수는 무엇보다도 "전면적 진실규명, 최대한의 관용, 적절한 피해배상"을 위한 진실정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시면요구에 대해 "사면의 도덕적 권리를 지닌 유일한 권한자로서 광주시민이 먼저 용납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간재 교수는 "5·18 정신 계승 및 가치이념의 구현을 위해 실천의 기본방향은 5·18 정신과 가치이념의 계승뿐만 아니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합성 있는 재생산과 승화발전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가 '항쟁의 도시'가 아닌 '정의와 인권의 도시'로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를 빌어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해산하게 되며, 5·18진상규명을 위한 조직으로 5·6공과 과거청산을 위한 작업에 힘쓰는 광주인권센터로 거듭날 것을 밝혔다.

## 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AI, "21세기 인권의 초석 다지기를" 당부

매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이 12일 새로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됐다.

로빈슨 대통령은 지난 90년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돼 여성인권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국가원수로는 유일하게 지난 94년 르완다 학살현장과 헤이그의 보스니아 내전 전법재판을 참관하는 등 국제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98년 유엔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임명된 새 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기능 확립을 통해 인권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인권활동가를 위한 선언'의 채택 등을 주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로빈슨 대통령의 인권고등판무관 임명에 환영을 표하며, "21세기에는 유엔이 인권의 초석을 다지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 앰네스티 환영 성명

앰네스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인권고등판무관은 뚜렷한 비전과, 단호한 리더십, 민간단체(NGO)들과의 효과적인 유대를 통해 인권에 대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며 △유엔인권기구의 협조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정부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해줄 것 △인권의 주제별, 나라별 과제에 대한 장기 전략을 개발해 줄 것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와 같은 잔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제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인권고등판무관이란

93년에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제도는 4년 임기 동안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유엔 인권관련 활동 및 조직을 총괄·조정하는 임무를 지게 된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 인권관련 기구가 부여한 임무의 수행 △인권문제에 관하여 모든 정부와의 대화 △인권분야 자문활동 및 기술적, 재정적 지원 제공 △인권사무에 대한 전반적 감독 등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는다. 초대 인권고등판무관은 에콰도르의 호세 아얄라 라소 씨가 맡아왔으며, 라소 씨는 지난 3월 14일 유엔인권위 개막직전 직책을 사임했다.

### · · · 새책 소개

####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는 지난 6개월간 공대위에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소책자이다.

공대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안고 있고,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전자독재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외국의 사례와 국내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덧붙여 전자주민카드의 모체인 현재의 주민등록증제도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들을 분석하여 주민등록증제도의 낙후된 모습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총 47쪽 (문의: 879-0871)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17일(화)  
제 9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어물쩍 국회통과 우려

### 전자주민증 코 앞에

전자주민카드 시대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시대가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해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선거법 등 주요쟁점에 시선이 집중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속에 1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통합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학원(신한국당), 추미애(국민회의), 권수창(자민련) 의원 등 각당 내부 위 위원들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 정보독재주의 우려

통합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정보집중에 따른 국가의 통제 및 감시가능 강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은 "전자주민카드를 가장 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은 국가 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이라며 "안기부의 권력남용이 무엇보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이 동의할 새도 없이 장관의 명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도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여부

를 결정하는 권리,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삭제·수정·추가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밝히고 "전자주민카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의 최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특정 국가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감시와 통제가 손쉬워진다"며 "국가 권력에 권력분립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개인정보에 정보집중이 아닌 정보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앞서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먼저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민등록제부터 검토해야\*

김기중 변호사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전제조건인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의 문

제점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실시되어 온 주민등록증 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참석자 가운데 유일하게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찬성한 김학원 의원은 "주민등록제나 지문채취 등이 공공질서 유지에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며 "이미 뿌리내린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우려만을 가지고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화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주민카드 시범실시 지역인 제주도에 이어 전북지역에서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전북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공청회를 가져 전자주민카드제의 문제점을 진단한데 이어, 지역차원의 공동대책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 ..... 주요 공판 안내

- ▶17일(화) 정지아, 이용석, 박종석 의 1(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금품수수)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염오순, 차승업(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18일(수) 유민희(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7부 423호 속행 서미연(국보법등)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김명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한총련 사건) 오전11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9일(목) 조창묵, 이미정(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권오룡(직업안정법 위반) 오전10시 5단독 529호 선고 박수정, 한수정, 강승현, 방진욱의 1(국보법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전영화(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강덕영(국보법) 오전10시 3단독 317호 신건 김범준 의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 ▶20일(금) 신승우(국보법 찬양·교무등) 합의1부 418호 오후2시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 동티모르 민족자결권 촉구 인권협 등, 유엔 탈식민지위원회에 청원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특별정치 및 탈식민지화위원회」(탈식민지화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을 촉구하는 한국 민간단체의 청원서가 낭독될 예정이다. 동티모르연대모임(대표 김진룡 신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김승훈 신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동티모르 탈식민화촉구 성명서'는 "동티모르 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동티모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 두 나라 사이에서 진행되어온 '동티모르 평화회담'에 당사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엔이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75년까지 동티모르의 지배국이었으며, 인도네시아는 현 지배자이다.

인도네시아, 총선 이후 동티모르 인권상황 더욱 악화

한편, 탈식민지화위원회는 동티모르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선 이후, 동티모르 점령을 공고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청원서를 보내는 한국 민간단체들은 동티모르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민족자결권의 확보만이 모든 인권보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동티모르 포함, 17개국의 식민지 존재

지난 61년 유엔 총회결의(1654호)를 통해 설치된 탈식민지화위원회는 식민지 해방을 촉구하고 식민지 해방과정에서 민족자결권이 제대로 행사되는지를 감독하는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현재까지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식민지는 동티모르, 괌 등 17개국이며, 유엔은 오는 2000년을 '식민지 완전 종식을 위한 해'로 정해 놓고 있다.

## 재일동포 전후배상문제 해결해야 인권협 우토로마을 서명작업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우토로 재일동포 주거권 확보를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권협은 서명작업을 통해 △일본정부와 일산차체는 우토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 △일본정부는 강제징용당한 한국인들과 그 자녀들인 우토로 주민들의 전후보상·배상을 할 것 △한국정부는 50년동안 방치해둔 우토로 주민들을 포함한 재일동포들의 전후배상·보상과 법적 지위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권협은 이미 5월 24-28일 제2차 진상조사단을 일본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파견해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 주/간/인/권/호/름 (97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 9일(월) 건설교통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에서 40%로 조정 키포/민주노총, 임금·단체협상 기간동안 노동부 감시 및 고발운동 펼 예정/경찰청,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전국 보안·수사·형사과장 연석회의' 열어 한총련 간부와 화염병 시위자 등 2백27명 우선 검거기로

◆ 10일(화) 자동차업계·노동계, 기아와 쌍용자동차 노조가 삼성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항의시위 등 집단행동 나서/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 주민 2명 철거유역원들에게 성폭행 당해/금융노련 노조 간부 1천여 명 과천 정부종합청사서 '관치금융 각본인사 규탄대회' 가져/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소송제기기로/인천지역 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앞바다 영흥도 유엔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 출범/박종철 열사 기념비 제막식 서울대 서 열려/연세대 교수 37명 '6·10항쟁 10주년에 부치는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 통해 대선자금 공개 촉구/44개 시민·사회단체, '돈정치 추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출범식/대검 공안부 제5기 한총련 산하 중앙조직 전체를 국보법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방침

◆ 12일(목) '견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발족/대검 공안부, 한총련 산하 각 지역총련의 핵심대학들에 대해 수시로 압수수색 벌여 폭력시위 사전예방하도록 지시/이종권 씨 사건과 관련해 남총련 투쟁국 간부 공개수배/한총련 구국단식단 31명 명동성당 앞에서 '대선자금 공개와 김영삼 정권 퇴진' 등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마포구 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본관 4층 외벽 계단에서 박아무개(15) 양 벌을 받던 중 10여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뛰어내려 사망/유엔, 마리아 로빈스 아일랜드 대통령을 새 인권담당고등판무관에 임명/유엔개발계획(UNDP) '97 연례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전세계 인구 59억의 1/4은 심각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13일(금) 고려대 재학생 및 졸업생 15명 '구국선봉대 청년'에 가입활동 혐의로 연행/민주노총, 제85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중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 등에 대해 제소/경남 해인사 주변에 또 골프장 추진으로 논란/43년 일제에 의해 캄보디아에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 여성(73세)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져/국제자유노조연맹 보고서,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이 노조를 경제발전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

◆ 14일(토) 홍콩 임시입법회의, 주권반환 이후 홍콩시민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난받은 새로운 보안법 채택

◆ 15일(일) 광주 북부경찰서 발표, 이종권(24) 씨가 술에 취한 남총련 간부들에게 조사받다 폭행당한 뒤 숨졌으며, 남총련과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이를 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인권  
시평

###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교수)

이른바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사회는 순간의 영광과 대부분의 오욕으로 얼룩졌다. 이승만부터 보자. 독립운동사에서 그의 위치와 업적은 조직의 우두머리여야 하고 우두머리가 안되면 그 조직을 파괴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해방이후엔 분단의 수혜자로서 반쪽에서나마 우두머리가 되는데 혈안이 되었다.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친일분자들을 대거 정부요직에 기용했고, 미국을 싫어하면서도 친미정책의 한계를 들어낸 외교의 귀신(?)으로 미화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폭력으로 와해시킨 이승만은 민족감정도, 정치도의도도 저버렸다. 초대대통령으로서 독재의 길만 열었다. 일제때 친일하며 잘먹고 잘산 자들은 이승만 정권에서도 호의호식했다. 4월혁명으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것이 드러났지만, 장면 정권의 성향도 민주적이지 못했다. 친일세력과 극우세력의 기승은 여전하였다. 그나마 군사쿠데타라는 역사의 뒷걸음질에 속수무책이었다.

#### 과거청산이 금기사항인 이유

박정희는 어떠한가. 요즘 박정희 항수병이 만연하고 있다. 현재가 안 좋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용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회귀본능에 의해 '그때가 좋았지' 라고 정신착란에 빠져버린다. 한때 좌익에 몸을 담았으면서도 집권야육에 극우·반공을 국시로 삼아 군부독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념도, 정의도 권력앞에서는 현신 짝이다. 일본군 장교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과거청산은 금기사항일 수밖에 없다. 박정희의 집권에 제일 기뻐한 자들이 일본정계의 실력자들이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36년째 지배하다가 쫓겨간 일본놈들이 36년후에 다시 보자고 했다더니 아닌게아니라 1980년 대외서 한일관계를 분석하니 간접적략을 당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으니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정신대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은 채 돈 몇푼받고 덜컥 한 일회담 조약문서에 도장을 찍어줬으니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은 꼴이 되었다. 독립운동했던 애국자들은 달동네에서 목숨만 연명하며 이런 꼴을 보자니 일찍 못죽은게 한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때 특색한 자들도 대부분 친일·극우·독재추종분자들이었다. 이승만때 장관을 지낸 자가 박정희때도 장관자리에 오른 것을 그 자의 탁월한 행정능력이라고 보아야 할까? 이승만과 유사한 독재행태를 보이다가 유신쿠데타를 일으켜 군주정시대의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자가 박정희이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적자를 자임했다. 폭압적 독재에서도 유사했다. 광주의

**인권침해의 원흉들을 또다시  
집권하도록 방조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국민으로  
낙인찍혀 마땅하다.**

피를 먹고 등장한 전두환은 더욱 더 잔인했다. 삼청교육대의 교육대상자가 오히려 힘을 갖고 삼청교육을 시키려하니 무리를 넘어서서 인간성 말살을 자행하였다. 박정희때 장관했던 자가 또다시 기용되니 인물기근일까? 독재추종세력의 영원할까? 노태우의 집권은 죽우어 개준 꼴이 되었다. 6월 민주항쟁 열 돌을 맞아 반성할 일이다. 넥타이부대가 데모에 참가했다는 특이함이 6월항쟁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데모구경 한번했다는 부끄러움을 역전의 용사로 자찬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리 있다.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이 한 정권의 말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렇게 열렬히 항쟁의 대열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6·29 거짓선언에 감박 죽어버리다니 그리고 또다시 12·12쿠데타의 주역이 집권을 하게 하다니 참으로 우리 국

민의 성향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마찬가지다.

#### 김영삼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김영삼이 누구인가? 자랑스럽지 못한 이력의 소유자인 장택상의 비서로부터 시작한 정치이력은 김영삼의 아킬레스건이다. 처음 국회의원을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소속으로 지냈다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이러한 과거의 경력과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3당야합을 이해해야 한다. 군사쿠데타의 주역들과 야합은 김영삼의 정치역정에서 최고의 도박이었지만 능히 그럴 수 있는 자였다. 지역감정과 사상논쟁을 이용하여 집권에 성공한 김영삼은 문민정부·개혁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려했지만 만사는 사필귀정이다. 장학로 부속실장, 차남 김현철의 비리 연루는 무엇으로 해명이 가능할까? 박정희때부터 집권층을 땀들던 자들이 여전히 권력의 향유자인데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김영삼 정권이 말기에 접어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그렇게 속고도 모자라 또 속아 놓고 아직도 미련을 갖는 자들은 같은 무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 대통령 선거를 맞아

극우폭력의 비인간적 양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 재벌들의 노동력 착취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언론의 보수적 극우논리에 얼마나 저항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의 해법은 친일과 독재 등 과거청산이다. 과거가 현재를 갈아먹고 있는데 민주화가 제대로 진척될리 없다. 이번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지역감정과 사상논쟁에 휘말려 속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인권침해의 원흉들이 집권하도록 방조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국민으로 낙인찍혀 마땅하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18일(수)

제 9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국제 앰네스티(앰네스티)는 18일 발표한 '97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지난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8월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조사하고, 경찰관 교육을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진행된 인권침해 사실도 전면적으로 공명정당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사건과 8월 연세대 사태 당시의 경찰폭력,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재판 내용 등을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앰네스티의 1백62개국 지부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 날치기법, 경찰폭력 주목

96년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특기할 부분은 날치기 파동과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에 관련된 내용이다.

날치기 파동과 관련해 앰네스티는 "노동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배제하는 등 노동자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지적했으며, "안기부법의 개정은 안기부 권한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경찰폭력에 대해서도 앰네스티는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5천8백여 명의 대학생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저질렀다"며 △시위와 무관한 학생들에 대한 구금 및 구타 △가슴을 만지고 성폭행을 퍼붓는 등 여학생

들에게 자행된 성추행 △구금된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자백을 강요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번 보고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현황 △열악한 감옥시설과 수형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부당한 대우 등을 밝히고 있다.

#### 국보법 구속자 450명

앰네스티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른 양심수가 4백5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국보법 제7조(고무·찬양)에 의한 양심수가 대부분이며, 노래패 '꽃다지' 대표 이은진 씨, 21세기진보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 컴퓨터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윤석진 씨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96년 이전에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최소 1백50명이 여전히 수감중이라고 발표했다. 거기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김낙중(전 민중당 대표) 씨, 사노맹 사건의 박노해, 백태웅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부당한 재판과정을 통해 복역중인 장기수도 2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일동포 유정식 씨를 비롯한 장기수들이 장기간의 독방감금, 고문, 강요된 자백 등에 의해 부당한 조사와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고했다.

#### 전향 강요, 열악한 수형조건

보고서는 또 몇몇 양심수들이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의 장기수들은 다른

수형자들과의 접촉을 차단당하고 있으며, 영하의 날씨에도 난방시설이 없는 감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수십 명의 정치범들이 전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엔 다른 수형자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고,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들에 대한 의료제공 역시 열악한 수준인데, 임신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고애순 씨가 의사의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아이를 사산한 사실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1백62개국 지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종합하고 있으며, 매년 이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해 왔다. 올해 보고서에는 남북한 보고서를 비롯해 1백51개국의 인권상황이 보고되었다. (문의:앰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 경기여상 임시이사 파견 현 임원진 전원 승인 취소

지난 3월 10일부터 두 달 간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가 이어졌던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이사장 김학만)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인권하루소식 3월 22일자 등 참조>

서울시 교육청은 17일 학교법인 경흥학원에 경기여상 사태에 따른 사회적 물의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임원진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7명을 선임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수차 지시하고 하급감독 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학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기획: 안기부와 인권 □ -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8월 개원을 앞둔 임시국회는 지난해 말 낱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이 그대로 굳어지거나 재개정되는 길잡이에서 있다. 정부·여당과 안기부는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정했다. 안기부법과 함께 통과된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총과업 등으로 재개정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기부와 정부는 개악된 안기부법을 그대로 굳히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불행한 일이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안기부법의 재개정 움직임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이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번 집필에는 박대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간사) 김수경(편집장) 이창조(기자) 씨가 참여했다. 앞으로 9회에 걸쳐 게재하게 될 이번 기획을 통해 안기부가 결코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안기부의 올바른 정립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바란다. <편집자주>

창립 36돌

6월 10일은 기억할 일이 많은 날이다. 일제시대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이기도 하고, 87년 6월항쟁 기념일이기도 한 날이지만, 중앙정보부법이 통과된 날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를 뒤엎은 박정희 군사 집단은 쿠데타 25일만인 그해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을 제정 공포한다. 법률 제619호로 공포된 이 법은 본문 9조와 부칙 2조로 이뤄진 엄격한 법률이었다. 하지만, 이 법의 공포로 말미암아 중앙정보부는 합법적인 기관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며, 이후 80년 등장한 신군부 쿠데타 집단이 안기부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5·16 군사쿠데타 세력들은 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였고,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중앙정보부법을 공포했다.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이 세 번째로 제정 공포할 정도로 중앙정보부의 중요도는 매우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공산세력의 간첩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최고회의에 정보부를 만들었고, 이 정보부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효과적'으로 제거, 탄압했다. "군정 주체들은 그들의 '장애 제거수단'으로서의 물리력을 정보부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를테면 정보수집기구가 아닌 방아쇠를 당기는 집행기구로 출발한 것이다."

다른 정보수시기관에 대한 조정·감독권 부여

중앙정보부법은 출발 때부터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할 권한마저 가졌다. 이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기구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절대 권력을 가진 공포의 괴물로 탄생했다. 정보부장은 정보 수사에 관하여 다른 기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었고, 중앙정보부의 수사관은 범죄수사권을 갖지만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았다.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 국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었다.

중앙정보부법은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김종필의 지휘로 이뤄졌다. 증언들에 따르면, 당시 김종필은 "(61년) 6월이 오기 전에 정보부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부가 서야 혁명과업을 시작한다"며 독려했다고 한다. 김종필은 쿠데타 이후 정보계통 중령들이 서정순(행정개혁위원장 역임), 이영근(7, 9, 10대 의원), 김병화(중정국장 역임)를 불러서 작업을 지시했고, 이에 이후 신직수(7대 정보부장)가 가세해 법 조문을 완성

했다. 쿠데타 이후 김종필의 지시로 시작되어 22일만에 공포된 이 법은 미국의 CIA와 일본 내각조사실을 절충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일제시대 경찰에서 다시 정보부 직원으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중앙정보부는 김종필을 위시한 쿠데타 주축인 육사 8기생의 현역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정보경찰, 특고(特高) 출신, 일제시대 경찰로 수사 취조 고문 기술자들도 합세했다. 그렇게 8백명의 인원으로 출발한 중앙정보부는 태평로 등 몇 개 사무실에 분산되어 있다가 남산과 이문동에 그 등지를 튼다(이전까지는 정보기구는 군 정보기관, CIC, HID, 방첩대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민주당 시절에는 미국의 중용에 의해 설립된 총리실 직속의 중앙정보위원회가 있었다. 이 중앙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을 받은 이후라이 책임자였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그의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치열해지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대외 정보수집을 목표로 탄생했던 것과는 달리 중앙정보부는 정권의 안전을 위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중앙정보부는 18년간 박정희 정권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다가 80년에는 전두환 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는 것이다. 조용환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런 점에서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안기부는 처음부터 국가의 대외적 안전이 아니라 반민주적인 정권의 안전보장을 존립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안기부의 속성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면관계로 <인권영화>는 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19일(목)

제 9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18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자 차별을 규탄하고, 국내 동성애자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일본에선 최초로 동성애자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동경도 고등재판소 제4민사부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체인 'OCCUR'가 동경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심리중이며, 오는 7월경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소송은 일본 동경도가 동성애자들의 사회교육시설 이용을 거부한 것에 비롯되었다. 지난 90년, OCCUR는 동경도립 사회교육시설인 '후추(府中) 청년의 집'에서 합숙행사를 가지려했으나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1년뒤인 91년 2월 12일 OCCUR는 동경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94년 3월 30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용인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인권은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동경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경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우리도 당신의 이웃"

이날 집회에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 회원들은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동성애자라도 당신의 이웃이 될 수 있다" "편견보다 위험한 범죄는 없다"는 내용의 피켓

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였다. 동인협은 'OCCUR의 재판투쟁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억압과 편견에 기초한 반인간적 교육 중단 △동성애에 대한 싸구려 상품화, 마녀사냥식 언론보도 관행 중단 △동성애에 대한 민주적 공교육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28일 파고다 공원에서 집회

한편, 동인협은 창립 2주년이 되는 28일 파고다공원에서 '동성애 관련 교과서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끼리끼리'(한국 여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의 장민아 씨는 "교과서에서는 동성애자들을 AIDS의 주범 또는 변태라는 식으로만 묘사하고 있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교과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28일 행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동성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편견과 무관심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남총련, "치사사건 책임지겠다"

이 씨 '프락치' 고백사실 공개

이종권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17일 남총련 간부 2명이 자수한 데 이어, 18일 남총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떠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남총련은 사건개요에 대해 이 씨가 92년부터 97년 5월 26일까지 광주대, 조선포, 전남대 등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으며, △26일 이 씨의 신분을 확인한

뒤, 27일 이 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프락치활동에 대해 이 씨가 부인하자 폭행이 가해졌다. 이 씨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 뒤, 새벽 1시경 잠을 재웠으나, △새벽 3시경 배가 아프다며 진통제를 달라고 하기에 진통제 두알과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다. △물을 마시던 이 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나, 몸이 경직성을 보이며 차가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총련은 이 씨가 진술한 프락치 활동 내용을 공개하며, "정부는 모든 정보공작을 중지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평택노점상 생명 위독

철거과정에서 중화상

17일 밤 9시경 평택시 비전동에서 포장마차 노점상인들과 평택시청 노점단속반원들과의 마찰과정에서 양승진(43·노점상) 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천안 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양 씨는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폐와 식도로 화기가 번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

김형모(43·평택포장마차협의회 감사) 씨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단속반원 1백 50여명(시청측 50명 주장)이 철거작업을 벌이자, 양 씨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위협을 하던중 시청직원들 가운데 누군가 라이타불을 당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청 건설과 신동우 씨는 "나는 라이터도 없었다. 오히려 그를 멀리다가 허벅지에 불이 붙어 2주 진단을 받았다"며 "양 씨등을 공무원행방제약으로 고소할 판"이라고 말했다.

양 씨외에도 불이 붙은 그의 옷을 벗기려던 부인 강광자 씨와 조창국 씨가 화상을 입었으며, 양 씨에게서 휘발유 통을 빼앗으려던 노수자(김형모 씨 부인) 씨 역시 화상을 입고 단대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 김학철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87년 4월 21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당시 노동조합은 조합비만 거출하고는 조합원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합원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동에는 임금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기였고 1년에 두 번 호봉을 2백50원 올려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봄에 저는 꿈에 그리던 현장으로 돌아가 조합원들과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복직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복직문제를 뒤로 미뤄 둘 수 없습니다."

한 노동자의 복직투쟁 10년의 세월이 담긴 이 유인물은 지난 4월 21일 인천(주)경동산업 앞에서 출근길 노동자들에게 나눠졌다. 흰머리가 희끗한 곱슬머리에, 마른 얼굴에 튀어나온 광대뼈, 그리고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레한 김학철(40) 씨는 일주일에 3일은 아침 7시2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투쟁을 나간다. 10년을 한결같이 해온 일이다. 그런만큼 올해야말로 기필코 복직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를 만난 곳은 경동산업이 아닌 동대문구 창신동에 위치한 전태일기념사업회에 세들어사는 '전국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추모연대회의의 기획국장)로, 나머지 3일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 경동산업 노동자로 86년 입사

그가 경동산업 노동자로 일하게 된 것은 86년 2월이다. 80년 광주민주항쟁을 겪고 입담함 끝에 군대를 가게된 그는 82년 허리디스크로 병가 제대를 하게 된다(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안 좋다). 군대를 가기전 대학교를 다녔지만, 등록만 했을 뿐 제대로 다니지 않았

던 그는 복학 대신 새문안교회 청년회에서 활동을 벌인다. 2년여 동안 교회 활동을 하면서 그는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당시 동일방직사건,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등을 접하게 되었지요.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자책감에 빠졌습시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나서게 된 겁니다."

당시 경동산업의 근로조건은 어떤 사업장보다도 힘들었다. "현장을 갈려면 먼저 경동산업으로 가라"고 할 만큼, 경동산업은 날마다 30명씩 모집했다. 하루에 30명이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동에서 1년 2개월을 다녔다.

**자본가는 돈을 사랑하지만  
운동가는 조직과 민족을  
사랑한다.**

###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지금은 노동자가 3백30명으로 감소되었지만 당시에는 4천명이나 되었다. 5백대의 프레스기계가 돌아가는 경동에서는 하루에도 몇 사람씩 병원에 실려 갔다. "경동에서 일하는 동안 저도 50바늘을 꿰뚫지요. 8-9개월 동안 매일같이 피가 났어요. 하루는 아무데도 안다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87년 4월 21일 임금투쟁을 준비하던 중 발각되어 해고를 당하고, 임금인상투쟁이 벌어지지만 결국 14명이 해고당한 채 실패로 끝났다.

긴 세월만큼 가슴에 생생한 사건들이 많다.

87년 노동자 총파업투쟁 당시, 8월 17일부터 14일간 진행된 경동산업의 파업투쟁, 89년 9월 징계철회와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분신사망한 노동자 김종하·강현중 씨의 모습, 94년 56일간의 텐트농성, 하루도 거르지 않고 7백일간 벌인 출근투쟁... 그리고 드디어 96년 노조 선거에서 복직

노동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는

출근투쟁을 벌이다 구사대에 얻어맞기도 하고, 치안본부에 끌려가기도 했다. 때로는 회사측으로부터 유혹도 있었는데 87년에는 "1억을 줄테니...", 94년에는 "특약점을 차려줄테니 그만 두라"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노동현장으로 가려는 의지는 굳어져 갔다.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현장에서 일할 때입니다. 눈빛만 봐도 동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노동자의 건강함이, 그 애뜻함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해고된 다음에도 그 힘은 커다란 동력이 되었습니다. 회사측에 지기 싫은 마음도 여기까지 오게한 힘입니다."

그 과정 속에 87년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가 창립되었고, 그는 경동산업 담당자로 지금까지 줄곧 일해왔다(부인은 87년 그곳에서 함께 일한 해고노동자다. 지금은 환경관련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미안한 마음이 더욱 깊다).

### 내가 사는 이유

91년 발족한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의 기획국장으로서 일하게 된 것은 96년 가을부터다. 그때부터 열사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 열사력(달력) 발행, 열사회보 발간 등 열사들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해왔다.

"일단 목표를 정하면 하고만다"는, 그래서 때때로 주변사람들로부터 '골통(?) 소리도 듣는 김학철 씨. 드라마 <내가 사는 이유>를 떠올리며 그에게 '사는 이유'를 묻자, "해야할 일이 많다. 해야할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운동의 출발점은 '애정'이어야 한다. 자본가는 돈을 사랑하지만 운동가는 조직과 민족을 사랑한다. 애정없이 시류에 편승해 운동을 한다면 오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신이 해야할 일을 찾아나서야 한다"며 조용하게 말을 맺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20일(금)

제 9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억압에 맞서는 평화운동을...

### 여성단체, 19-20일 국제여성심포지엄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 남단에서, 평화의 21세기를 일깨워려는 여성들의 의지가 모였다.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지은희)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대표 이우정)는 「21세기 평화와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국제여성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 세계각지에서 전쟁과 식민생활, 인종분쟁 속에서 유린당한 여성의 인권을 짚어보면서, 21세기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여성의 역할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 참가

21세기를 앞둔 우리에게 평화란 무엇인가?

주제강연에 나선 이효재(심포지엄 준비위원장) 씨는 "무력에 의한 싸움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나아가, '억압적이며 폭력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혁'이라는 적극적 평화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껏 핵무기 반대운동 또는 군축운동 등에 치중했던 소극적 평화운동으로부터, 생명·자유·정의·인권 등을 존중하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파괴와 오염을 피하고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만 총체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이 더 이상 전쟁의 피해자나 가부장제의 노예로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과격적인 권력에 맞서 자연과 인간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발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쟁과 식민지가 가져온 비극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알려진 각국의 인권 상황은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젤마(여성평화운동가) 씨는 "전쟁중에 세르비아 군인들은 보스니아의 여성들을 집단거주시킨 상태에서 강간을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민지인 동티모르의 상황

은 더욱 충격적이다. 알메이다(동티모르 구호협회 소속) 씨는 "강간, 무차별 구금 등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현지 아내'라는 인도네시아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각 마을과 학교를 돌면서 '가족계획 시술'을 벌여, 동티모르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의 안스바흐(변호사) 씨는 "통일 이후 동독여성의 인권은 후퇴하였다"며 "통일에 앞서 분단국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진행중인 이번 국제여성심포지엄은 20일 '한국의 평화와 화해 및 국제여성평화연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문의: 273-9535)

## "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Tatjana Ansbach (인권변호사, 독일) 씨 발표 요지

■ 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것이 없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 보장되었고, 대부분의 여성은 직업을 가졌다. 80년대 말 여성의 취업률은 91.2%였다. 3세이하 유아의 80%가 유아원에서 보육되었고, 3-6세 어린이의 95%가 유치원에 다녔다. 이에 대한 보육·교육비는 최소한에 불과했다.

여성은 매달 하루씩 유급월차를 받았고, 여성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강좌가 모든 분야에서 열렸다. 출산휴가는 1년이었고, 그 기간에 평상 임금의 70%가 정부로부터 지급되었다. 원래 일자리를 복귀하는 것 또한 보장되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1년에 6주까지 유급휴가를 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권이 완벽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가사일은 여성이 거의 전담했기 때문이다. 이는 동독의 지배적인 사회·경제적 위계질서의 상층이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현실과 연관이 있다.

■ 통일 이후 서독의 경제(정치·법 포함)제도가 그대로 동독에 복제되었다. 서독의 제도는 효율성은 높았지만, 한편으로 일과 가정의 평형을 더욱 어렵게 했다. 우리는 과연 경제적 효율성이 다른 모든 가치를 충족시킬 정도로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서독 법이 동독에 적용됨으로써 우리는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규범과 법까지도 계승받은 것이다.

통일 이후 많은 여성들은 여성의 존엄성이 자신의 경제적 자립에 의해 결정되고, 취업이 자신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동독 시절 무엇이 가장 좋았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번도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없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 저능적 오보, 통일 가로막는 통일프로그램 NCC 언론위, 북한관련 보도 실태 모니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모 보고서는 방송3사의 오후 9시 뉴스와  
 니터팀은 18일 '방송 3사 북한관련 보도 통일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보도프로  
 및 통일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이라 그램은 선정·과장·왜곡보도와 의도적  
 는 보고서를 통해, "문민정부는 여전히 오보 가능성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이용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 지난 5월 22일 SBS 9시 뉴스 '아사 속  
 하고 있으며, 방송에도 이런 기조가 그 출, 구호 식량 어디로란 제목의 보도는  
 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해안으로 귀순한 안순국, 김원형씨

### 인권영광 ⑧ - "송가황조"(宋家皇朝)

감독:장완정/ 주연:장만옥, 양자경, 오군매

### 역사는 그녀들에게 무엇이었나.

한 집안의 가족사를 종횡으로 거슬러 오르다 보면 사상과 권력이 휘두른 역사의  
 원력에 떠밀려 찢기고 흩어져 버린 가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형태  
 로든 원력의 주체 쪽에 서느라 사본 오열되는 가문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시  
 기에 비슷한 노정을 거쳐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해도 두 경우를 같은 범  
 주로 묶을 수 없다. 칼자루를 휘두른 자와 그 끝을 피해 움직이는 자들의 역정  
 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송가황조"는 칼자루를 쥔 자들의 기록이다.

한 나라의 역사를 주도한 최고 권력의 반역자였던 여인 들, 그리고 양대에 걸쳐  
 그 나라 경제를 지배하는 금권의 권좌를 놓지 않았던 한 여인. 이 세 사람이  
 한 가정에서 난 친 자매라는 것은 마치 야망과 복수가 뒤얽히는 시드니셀던 류  
 의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나치게 작위적인 설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세 자매의 인생은 거대한 한 나라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하는 실화이다.

혁명가인 손문을 도와 신중국을 일으키고자 했던 북경의 부호 송사리는 자신  
 의 세 딸을 새로운 중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신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일찍부터  
 미국에 유학시킨다. 송가의 세 딸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최고의 서양교육을 받  
 은 신여성들로 성장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삶은 관이하게 달랐다. 첫째 애령은  
 중국 최고의 부호와 결혼하여 국가의 금권을 거머쥐었고, 둘째 경령은 아버지  
 의 친구이자 동지인 손문을 선택해 혁명가의 길을 걷고, 셋째인 미령은 차세대  
 주자로 떠오른 청년 장교 장개석의 권력에 동승한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가치  
 관과 세계관에 의해 남편을 선택한 것이지만, 그 선택은 중국 역사의 양대 지  
 류를 이끄는 양극의 선봉에 서는 것이었으며, 각기 다른 미래와 종말을 선택하  
 는 것이기도 했다. 사상적 토대와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반목과 질시를 거듭하  
 던 이들은 끝내 세 조각난 국토에 흩어진 채 생을 마감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가족사에 머물지 않았다. 이들 송가 자매의 행적에 의해 대중국의 근대사 그리  
 고 세계 역사의 흐름이 직조되었던 것이다.

근대 동양사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방대한 중국 근대사의 흐름을 세 자매의  
 인생 역정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은 벅찬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감독은  
 세세한 정치적 흐름을 쫓기보다는 세 여성의 각기 다른 성격과 그것이 빚어낸  
 역사와 가족사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메라는 세 사람 모두에게 엇비  
 슷한 비중으로 렌즈를 열지만 감독의 시선은 끝까지 본토와 인민을 지킨 경령  
 에게 훨씬 따뜻하게 다가선 것으로 느껴진다.

세계 자본의 집결지인 홍콩이 본토 반환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  
 만 어느 땅에 자신의 뿌리를 둘 것인가를,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사가 무엇을  
 힘으로 굴러갈 것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다. 새삼 느리고 끈질긴 그들  
 의 저력이 무섭게 다가온다. -김경실(민주언론운동협의회 영화반)

가족의 기자회견을 다루었는데, 귀순동  
 기나 경로 등에 대한 보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오로지 7월 전쟁설, 굶어  
 죽는 사람목격, 구호식량 배급사실 전  
 무 등만이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  
 고했다.

### "오보 상관없다, 보도부터"

특히 방송 3사는 북한에 관한 안좋은  
 소문을 포착하면 진위를 가리지 않고,  
 보도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1일 뉴스시  
 간에 방송 3사는 거의 한목소리로 "북한  
 에 지원한 구호식량 일부가 군부에 의  
 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  
 다. KBS 9시 뉴스는 "대북지원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을 처음으로 확인  
 했다"면서 북한을 시종일관 비난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보도가 오보로 밝혀  
 졌음에도 정정보도는 전혀 없었다.

또한 뉴스이외에도 북한관련 프로그램  
 은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니터팀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한  
 계는 국가보안법과 인기법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고 짚었다. 김일성의 생  
 일치레에 엄청난 외화를 낭비했다는 내  
 용, 영농준비를 외면하고 군사훈련에만  
 치중한다는 내용 등을 2개 이상의 방송  
 사가 거의 똑같이, 같은 주에 다른 것  
 은 인기부에 의해 모든 북한 관련 자료  
 들이 1차적으로 선별,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다.

### 기무사 민간인 사찰

#### 전국연합 "책임자 처벌" 촉구

국군기무사령부가 한총련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벌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  
 데,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기무사의 명백  
 한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다. 특히 경찰  
 의 원천봉쇄와 학생들의 강행으로 폭력  
 충돌이 예상되는 속에 현역군인을 대거  
 투입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로부터 군인이 집단폭행을 당하  
 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학원사찰로 폭력사태를  
 부추긴 '해당책임자의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21일(토)

제 9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경찰, 이철용씨 간병인 출석요구 KNCC, 이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도회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다 전경의 집단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이철용(33·일용  
 직 노동자) 씨 사건과 관련해, 이 씨를  
 간병해온 박기호 씨가 경찰의 출석요구  
 를 받았다.

성동경찰서는 20일 박 씨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박 씨가 당시 현  
 장에 있었는지, 사건을 목격했는지 여  
 부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줬다"고 말했  
 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현장에 없던 나  
 를 불러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출두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  
 다. 박 씨는 "경찰이 처음부터 전경의  
 진술만 받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지금부터라도 폭행에 가담한 전경이 몇  
 명인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 성동서측은 "현재까지의  
 수사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아직  
 까지 경찰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목요  
 기도회를 갖고, "이철용 씨 인권유린 사  
 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  
 생들의 폭력적 시위도 종식되어야 하지  
 만 경찰의 무장된 공권력을 동원한 폭

력 또한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한 억울한 시민의 인권유린 사건  
 이 자칫 영동하게 묻혀버림으로써 또  
 다른 인권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기도회에 이어 벌어진 '경찰폭력 보고  
 대회'에는 이철용 씨 사건의 목격자 김  
 현수 씨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진술  
 서를 통해 "전경 5-6명이 5분만에 걸쳐  
 방패와 곤봉, 군화발로 이 씨를 폭행했  
 다"고 증언했다. 또한 박기호 씨는 "경  
 찰이 이 씨에게 어느 사회단체 소속인  
 지, 시위대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를 계  
 속 추궁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철용 씨는 국군통합병원 수감  
 자병동에 입원 조치되어 있다. 이번 사  
 건을 맡게된 김인회 변호사는 "수사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고소 여부를 결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노동청년연대 9명 긴급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

한국노동청년연대(한청련) 회원 9명이  
 20일 서울시경 보안과 소속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오진석(31·부의장) 씨 등 연행자들은  
 오전 6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각각 자  
 택에서 긴급체포장에 의해 연행되었으  
 며, 현재 서울시경 육인동 분실에서 조  
 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행된 한청련 회원들에겐 국가  
 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3항(이  
 적단체 구성·가입) 위반 혐의가 적용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청련은 노동자  
 학교 등 대중강좌 사업을 벌여왔으며,  
 강령이나 규약 등은 없는 단체이다. 다  
 만 이 단체는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권  
 리 확대와 진보정치운동의 발전, 올바  
 른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고 한청련 관계자는 밝혔다.

### '구국선봉대-청년' 조직사건, 서울경찰청 발표에 대한 반박문

20일 서울경찰청은 '구국선봉대-청년'이라는 조직사건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측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언론에 의면당  
 했다. 이날 '청년'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 했던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1. 구속자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곤 '청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2. 경찰은 4·18 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이 자료집은 4·19혁명을 촉발시켰던 고대 선배들의 4·18정신을 기리기 위해 총학생회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것이다.
3. 과학실험 활동을 한 것이 이적행위로 규정됐다(국어교육 3년 조윤정).
4. 토요일마다 진행했던 '지역광장'도 구속사유로 들고 있다. '지역광장'은 청령리 경찰서에 주마다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5. 청년에서 발행한 유인물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이적표현물 소지·탐독혐의를 적용했다. 매일같이 발행하는 수천장의 유인물을 읽고 가지고 다닌 사람들 다 구속할 것인가?
6. 김성희(95년 부총학생회장, 군북무중) 씨가 소지하고 있던 김일성뺨지는 청년과 무관한 개인 소지품에 불과하다.
7. '주체사상조직 13개 규합'이란 내용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다. 시경의 구체적 증거제시를 바란다.
8. 경찰이 발표한 '청년'의 강령(혁명적 전위조직 운운하는)은 변조된 것이다. 이미 '청년'의 강령과 규약은 공개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 6월 14일자 참조)

### “나는 라이터 켜지 않았다” 노점상 양승진 씨 뇌사상태...경찰, 동향파악이 우선

지난 17일 밤 평택시청(시장 김선기) 측의 포장마차 강제철거 과정에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치료중인 양승진(43·평택노점상연합회 부회장) 씨는 20일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모(43·평택노점상연합회 감사) 씨에 따르면 18일 아침 7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악화돼 목에 산소 호흡기를 꽂았으며, 이미 병원측은 '가망이 없다'고 알려왔다.

또한 당시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은 양 씨의 부인 강광자 씨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인데, 슬하에는 딸(중 1)과 아들(7)이 있으며, 아들의 분신소식을 전해들은 철순 노모는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발생 4일이 지나도록 평택경찰서 정보과는 분신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는 나서지 않은 채 병원에 상주하며 동향파악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 주변서 시청직원들 담배 피웠다

평택새물결청년회·평택노점상연합회·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전국연합 평택지부 등 평택지역 민주단체들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6월 평택시에서는 먹거리 장터를 조성해 노점 포장마차를 이주시켰다. 그러나 터미널에서 성환 방면으로 가는 길에 있는 먹거리 장터는 영업장소로는 부적절해 장사가 되지 않았다. 일부 노점상들은 생계해결을 위해 시청을 찾아가 대책마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노점상들을 협박할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의 단속을 피해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 강제철거 중단, 노점상 생존대책마련

이 연속선상에서 17일 시청직원들은 포장마차를 강제철거했고, 이날 밤 8시 40분경 노점상연합회 회원들이 버려진 포장마차를 다시 갖고와 비전우체국 옆 공터에서 집기류를 내리려 하자, 1백여 명의 시청직원이 강제철거를 하기 시작

했다. 김형모 씨가 위협용으로 휴대용 발전기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몸에 뿌리려고 시도하며 경고했다. 이때 옆에 있던 양승진 씨가 휘발유를 몸에 뿌리며 노점상·서민들의 생존 대책마련과 강제철거 중단을 요구했다. 갑자기 '핑'하는 소리와 함께 양 씨의 몸에 불길이 일었고, 양 씨의 부인과 동료노점상들은 불을 끄느라 화상을 입었다. 이들 민주단체측은 "사건발생 당시 주변에서 담배를 피고 라이터를 손에 든 시청직원들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청직원들은 불길을 보며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분신소식을 듣고 18일 새벽 1시 병원을 방문한 평택지역 민주단체 대표들은 양승진 씨로부터 "나는 라이터를 켜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주변목격자들도 양 씨가 라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평택지역 민주단체들은 즉각 대책모임을 갖고 "양승진 씨 분신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노점상 탄압을 지시한 김선기 평택시장 공개사과 및 평택시측에 노점상 생존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 항의전화를 겁니다!

평택시청 시장실:0333) 52-3000/평택시청 건설교통국: 54-5224, 사회과: 54-3530, 건설과: 54-7276/평택경찰서 시장실: 54-5600, 정보과: 51-5605

### 새책 소개

#### 『여성, 그리고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위한 교육지침서

이 자료집은 아시아여성위원회(Committee for Asia Women)에서 아시아 지역 여성노동자들과 조직운동가들을 위해 발간한 교육용 교재 『As women as workers』를 번역한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아시아지역의 노동문제가 한국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터와 가정'이라는 이중적 고통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시아 지역 여성들의 연대의식을 높여 경제의 전지구화 현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교재를 번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교재의 특성은 삼화중심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알기 쉽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성노동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교육용 교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 교재가 일하는 여성들에게 널리 읽혀지기를 바라며 현장의 많은 여성노동자들과 조직운동가들의 삶과 운동에 보탬이 될 것이다. 65쪽 (문의:869-1347)

#### 『깨지지 않는 자주의 빛으로 살아』

- 이철규 열사 사인진상규명 자료집

89년 공안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잊혀져간 한 젊은이의 죽음이 8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재조명되고 있다. 그의 동료들이 쏟아 부은 8년간의 노력은 '기록 없는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신념으로 불붙여온 세월이었다.

"해방이후 지금부터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진상규명은 커녕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없이 지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함에 앞서 냉정한 조사와 그 실상을 알리는 최소한의 자료라도 있었으면 하는 절박함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약력, 추모글, 르뽀, 창작만화 등을 소개한 '이철규 열사의 삶', 89년 정세, 김문전 행적에서 부검에 이르는 과정, 국정조사위원회 활동을 알리는 '사건개요', 70년대 이후 대표적인 정치적 의문사의 쟁점과 과제를 다룬 '한국 인권상황'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 부록에서는 89년 진상규명 투쟁 상황일지와 추모사업회 활동 등을 담았다.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062-232-5809), 915쪽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한총련 사태 언론보도 비판

### 공안보도 극치...배경은 외면

한총련 비주류로서 이른바 PD(민중민주) 계열로 분류되는 고려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지현찬)가 최근 언론의 '한총련' 관련 보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대 총학생회는 23일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와 방송3사의 '한총련' 관련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한총련 죽이기와 학생운동 말살에 혈안이 된 보수언론이 왜곡·편파·선정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자 조선일보 사설(「한총련 전체가 이적」)은 "지금까지 한총련을 그대로 놓아둔 이유는...정부가 너무 우유부단한 탓이었을 수도 있다." "한총련 자체가 밖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니 민족화해니...하는 그럴듯한 '위장구조'를 내세우는 바람에 일반국민이 그들의 진짜 저의를 알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다." "친북단체로 전락한 한총련을 발본색원하는데 함께 나서야 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대 총학생회는 "많은 국민들이 학생운동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학생운동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학생운동이 지금까지 펼쳐온 투쟁을 모두 한순간에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9일자 「상해치사라니?」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사설과 관련해서, 고대 총학생회는 "학생운동을 백인테러집단에 비유하고 살인죄 적용 운운하는 것에서 선동과 선전성이 극에 달했음을 느낀다"며 "한총련 관련 기사에서 예외없이 군사용어나 자국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총련 출범식 전반에 관한 기사는 없고 '왜'라는 물음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양대학교 「한대신문」, 조선대학교 「조대신문」, 서충원신문 「승리」 등도 "언론은 단 한 줄도 한총련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하나, 마녀사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대 총학생회가 소개한 안영배(기자협회보 편집부장) 씨의 지적도 맥을 같이 한다. 안 씨는 "한총련 사태보도는 한국언론사에 '공안보도'의 전형을 보여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보도는 언론개혁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한다.

고대 총학생회는 "보수언론의 시도가 마침내 성공하는 듯하다"며 "보수언론의 궁극적 의도가 대선을 바라보고 독자적

1997년 6월 24일(화)  
제 9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인 정치세력화에 나서려고 하는 이때 전체 진보운동 진영의 행보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 부산대등 9명 구속

국보법 위반혐의

10일 새벽 3시 45분경 부산대 총학생회실에 사복경찰 및 백골단 1백여 명 들어와 백대현(부산대 총학생회장, 93학번)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같은날 새벽 5시경에도 정명환(법대 학생회장·94) 씨 등 8명이 자택에서 연행되어 이들중 6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입건됐다.

### 범민련 사무처장도 구속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33) 씨가 지난 20일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민 씨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기부 수사관들은 21일 범민련 사무실을 수색하고 컴퓨터, 팩시밀리 및 각종 문서 등을 압수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범민련 관계자의 입회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기념실 판매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에서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기념실을 판매하고 있다. 이 기념실은 노동열사 68명, 학생열사 72명, 재야열사 56명을 각각 전지 한장에 담았다. 수익금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에 쓰여진다. 문의: 742-3180

### ..... 주요 공판 안내

#### ▶6월24일(화)

정희선(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311호 신건 권영길(제3차 개입금지, 민주노총 위원장)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박수정(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2시 합의2부 319호 속행 이남영(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421호 선고 권노갑(공문서위조등) 오후2시 1단독 519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 <인터뷰> 동티모르 여성독립운동가 알메이다 “동티모르 여성, 한국인 위안부와 흡사”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21세기 여성평화 심포지엄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동티모르 여성독립운동가 이네스 알메이다(35) 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네스 씨가 말한 동티모르 여성들의 삶은 위안부 등 일제하에서 겪었던 우리 여성들과 매우 흡사했다.

- 동티모르에 일제시대와 같은 위안부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인가?

80년대까지는 군인을 위한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많은 동티모르 여성이 강제로 이곳에서 윤락행위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후 벨로주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지금은 폐쇄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몇몇 지역에는 윤락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로 인니 군인이 이용한다.

인도네시아 군인들의 강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동티모르 곳곳에는 군인초소가 있는데, 군인들은 논두렁 등에서 내키는대로 여성을 강간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 동티모르인들은 강간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은 이중고통을 당한다.

얼마전 유엔 특사가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유엔들이 나서서 여성들의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인니) 정부가 동티모르 여성들에게 불임주사를 시술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다. 인니 정부는 아무런 교육과 정보없이 여성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강제로 시술하고 있다. 그래서 동티모르 여성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병원에는 인니 의사가 있고 그는 불임주사를 시술하기 때문이다. 인니 정부는 기혼 여성들의외에도 어린 소녀들에게도 이 주사를 맞도록 하고 있다. 약 80%의 동티모르 여성들이 강제로 가족계획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난 2월 유엔 동티모르 특사 잠스히드 K.A. 말커 씨의 방문과 5월에 열린 인도네시아 총선거 때 동티모르에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안다. 이런 것들이 동티모르 상황에 많은 변화를 주었을 것 같은데

알려진 것처럼 유엔 특사가 방문했을 때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물론 이것은 평화적인 비폭력시위였다. 하지만 인니 군인들은 48명이나 연행했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 선거 이후부터 인니 군인들의 감시가 더 심해졌다. 현재는 저녁 6시 이후에 돌아 다니는 사람은 모두 연행하는 통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 한국 방문소감과 민간단체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많은 인권단체를 만나지 못해 아쉽다.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동티모르상황에 대한 홍보다. 사람들이 동티모르 상황을 알 수 있는 강연등이 열렸으면 좋겠다.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핵심인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운동도 필요하다. 현재 그는 중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

### 주/간/인/권/호/름

(97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 16일(월)  
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추진기회/정신대연구회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 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 요구

• 17일(화)  
평택 포장마차 노점상들과 시청 단속반원들과 충돌과정서 양승진 씨등 중화상 입고 천안 단대병원 입원했으나 생명위독/신한국당, 심장·신장 기능장애자,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중추신경 마비환자등도 사회적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인 범주 확대기회/통계청 발표, 93-95년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천명당 한해 사망률 0.35명으로 선진국의 최고 4배/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서 "보호관찰은 형법이 아니기에 이 조항 시행이전의 범죄행위에 적용하더라도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 18일(수)  
한국은행 본점·춘천지점 등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은 독립 완전쟁취를 위한 결기대회' 열고, 정부안에 협조한 이경식 총재 퇴진요구 서명운동 벌여/시 '97연례보고서, 한국정부에 양심수 석방, 국보법·노동법 개정등 촉구

• 19일(목)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한 남원순 씨등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요구하는 국적확인 청구소송 제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경찰폭력 관련 목요기도회 갖고 한총련 시위과정서 구경하다 중상입은 이철용 씨 사건에 대한 해결촉구/크메르 루주 지하 라디오방송 보도, 폴 포트가 반군 게릴라에 의해 체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분쟁상황에서의 난민(97년 1천4백50만명)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보호'에 관한 안보리 의장서명 공식채택

• 20일(금)  
서울시경, 한국노동청년연대 회원 9명 연행/서울경찰청과 국군기무사, 이적단체 구성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조직원 25명 적발했다고 발표/서울시교육청, 검찰 수사과정에서 총지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조아무개 초등학교 여교사 직위해제/전국대학학생노조 성균관대분회, 방화중 감사료 지급 요구하며 파업/국군기무사령부, 18일 <한겨레>신문과 월간 <말>지 7월호에 게재된 '기무사, 학원사찰 여전하다'는 기사와 관련해 박우정 편집국장등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국제노동기구, 제네바에서 열린 제2백69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의 합법화 한국정부에 권고/일본 언론 보도, 일본 환경청 다이옥신류를 10월부터 법적 규제키로

###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인권 시평

권력의 횡포에 맞서 정의가 언젠가는 이기고야 말리라는 '권선징악' 사상이 때로 '펜은 칼 보다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펜이 강하나 칼이 강하다는 논쟁은 현대사회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칼(최루가스 혹은 탱크)도 펜(워드프로세서)도 지배자들이 독점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펜'은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교육함으로써 광고주인 기업의 호의에 보답한다.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어디서나 '칼'과 유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권력자에게 보다 규모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적 반대집단을 박해할 무기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을 보다 널리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까지도 가져다 준 것이다. '헌법에 이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항변은 대체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늘 비애를 느끼며 참으로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무장한 강도의 무리를 대적하고 한 사나이가 칼 한 자루로 싸운다면 그는 거의 비폭력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프락치 용의자를 심하게 구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일, 그리고 (만약에 경찰 발표를 믿는다면) 그것을 은폐하려고 한 일은 확실히 학생운동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90년대 중반 젊은이들에게는 90년대 초 젊은이들이 가졌던 정의감이나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다 혹은 양자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몰아 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프락치 용의자 치사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언론은 한총련을 전대협과는 다른 망나니로 그려내는 데 망설임이 없었던

나서야만 했던,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시대와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시대와의 분수령일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법칙을 소수 지배계급이 독점했던 시대와 그 법칙에 (지배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의 폭을 서서히 확대하면서) 적어도 따르는 시능을 하는 시대와의 사이에 있는 분수령이며 '펜이 칼'의 폭압에 굴종하면서 동맹을 이루었던 시대에서 '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동등한 자격으로 '칼'과 동맹을 이루는 시대로 넘어가는 분수령이다.

나는 이 시대를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 분수령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꿈을 잃고 일상 속으로 매몰해 가거나 아니면 마치 '민주적 질차나 '시민 캠페인'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스스로를 내몰았다.

####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영웅실화'를 자랑하는 전대협 세대와 과렴치한 범죄집단으로 전락해버린 한총련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대협과 한총련의 차이  
역사의 분수령... 나는 이것을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적들이"라거나 "의장님 따라 배우기" 혹은 "민중"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폭력'도 휘두르지 말라는 따위 왜소한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상황'은 변했는지 모르나 계급지배와 억압 구조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까닭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한총련의 '폭력'은 그것을 갈아뭇개려는 공권력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비한다면 '폭력' 측에도 끼지 않는다.

비폭력 불복종운동  
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솔직히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물량이나 기술적 차원에서 대결에서 오는 절대적 열세를 피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그 길을 비폭력 불복종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불복종운동은 정치적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익한 저항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모한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참을 수 없는 압제에 굴복하고 혹은 자기기만을 감행하는 것만큼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도덕적으로는 비폭력 불복종운동만큼 우리를 우위에 서게 해 주는 길도 없다.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분수령'은 아마도 커다란 세(勢)를 모아 직접행동에

펜이나 칼 보다 강한 것은 도덕성이다. 이 암담한 시대,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 수가 있는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25일(수)  
제 9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장마시작...철거민 신음 쏟아져

### 문정동, 산천동 철거민 9가구

재개발에 밀려나가거나 땅주인에게 내쫓긴 무주거자들에게 이번 장마는 한여름 피약벌보다 더한 고통이 될 듯싶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일명 '신가촌' 주민 3가구는 벌써 2주째 지붕 없는 잠자리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마을을 완전히 철거해버린 뒤부터 공원에서 노숙을 시작한 것이다. '신가촌'에서만 8년째 살아왔다는 고순애(65), 김춘복(67), 정상치(51) 씨의 가족들, 이들에겐 옮겨갈 집이 없다. 원래 서울시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달리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데

다, 서울시 측에서 제시했다는 1백만 원의 이주비용으로는 방 한 칸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신불구의 남편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고씨는 "어디 가서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숨지었다. 마을을 헐고 정지작업을 마친 '신가촌' 자리엔 곧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신가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용산구 산천동 철거민 6가구의 처지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10일 6가구가 숙식을 같이하던 집 한 채마저 완전히 철거당한 뒤, 주민들은 공사장 옆에서 천막생활에 들어갔다. 피약벌이 내리찍는 천막은 짐통과 다를 바 없고, 비라도 올라치면 천막이 무너질까 걱정이다. 무더위와 장마 모두 주민들에겐 지독한 고통일 뿐이다.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서도 비가 내리는 날엔 사고가 연려돼 순찰을 나온다고 한다.

최근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정식) 측은 주민들에게 송파구 오금동의 임대아파트로 입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산천동 철거대책위 위원장 박영자(39) 씨는 "아이들의 학교도 있고 생활의 터전인 이곳에 계속 살기 원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의 가수용시설 요구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법대로 할 바는 다 했다. 비합법적 투쟁으로 욕심만 채우려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합의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지연으로 조합원 4백여 명의 경제적 피해가 10억원에 달한다"며 "철거대책위 주민들이야말로 인권침해자들"이라고 비난했다(인권하루소식 5월 2일자 참조).

## 유족 등 타살 주장

### 탈영 전투경찰 변사체 발견

군부대내 상관의 구타를 견디지 못해 2년씩 탈영을 한 바있는 이승호(22·이경, 전남전문대 1학년) 씨가 지난 20일 아침 6시40분 독립문역 부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1일 이 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은 사인을 '추락사'라고 밝혔으나, 유가족측은 이 씨가 타살되었다며 장례를 거부하고 있다.

이 씨의 고모 박종숙(45) 씨는 "23층에서 떨어진 것처럼 시신이 너무 깨끗하다. 이마에 금이 가고 왼쪽 팔꿈치 뼈가 나왔을 뿐이다. 또 발목에서 목에 이르기까지 매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또 박종후(42·외삼촌) 씨는 "20일 새벽 2시 23분 사우디대사관 부근에서 근무중인 조카 이 씨를 만났다는 한 전경을 만났는데,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며 의문을 제시했다.

19일 저녁, 이 씨와 전화통화를 나눈 친구 조용국(22) 씨도 "이번 주말에 면회 가겠다고 무척 좋아했다"며 "도저히 자살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5월 10일경과 20일경 탈영사건 뒤 이 씨가 2박3일 휴가를 나왔을 당시 같이 술을 마셨는데 "고참에게 많이 맞는다. 한 번은 다림질을 하다가 깜빡 다리를 세워두지 않는 바람에 장관을 태워 다리미로 머리를 맞기도 했다.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씨는 머리가 부어 있었고, 팔, 다리 등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가족들은 탈영 때마다 1시간 이내 집으로 연락을 해오던 신문로파출소(소장 윤명식) 측이 근무교대시간인 새벽 3시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전 9시 40분까지 집에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시했다.

## 평택노점상 양승진씨 사망 비상대책위 '살인방화'로 규정

지난 18일 평택시청(시장 김선기)측의 노점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던 양승진(43·평택노점상연합회 부회장) 씨가 22일 저녁 8시15분경 끝내 사망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21개 단체는 양승진 열사 비대위를 결성하고,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따라서 평택시청, 내무부, 경기도지사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6일 오후 2시 평택역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하루소식 6월21일자 참조). 비대위 상황실: 0333-668-4482

##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 안기부의 역사

###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점이 돼야 합니다"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가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 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기부 직원의 정치관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18조)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금지(제11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제14조) 국가보안법(국보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등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제한적 규정을 두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 93년 처음으로 권한 축소

61년 6월10일 중앙정보부법이 처음 공포된 뒤, 62년 4월 기획통제관과 차장보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된데 이어 63년 12월 군정이 끝나고 민정이양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폭 바뀌었다. 이때 조직 소재지 정원에 예산에 대한 비공개가, 또 타부처 예산에 정보부 예산을 끼워 넣기가 법으로 확정되었다. 유신이후인 73년 3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해 정보부가 수사권을 갖게 하는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79년 10·26으로 유신이 끝나고 80년 12월 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에 따라 법 이름도 바뀌었다. 그 뒤 87년 12월 4일, 94년 1월 5일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날치기풍파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국보법 제7조, 10조에 대한 수사권이 다시 안기부에게 주어졌다.

#### 수사권 폐지 대신 국보위 설치

안기부의 변화는 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네 번의 변화를 가져왔다.

첫 번째는 창설이후 박정희 정권과 동거동락하며 18년간 지속되다가 79년 10·26 총성과 함께 막을 내린다.

두 번째는 중정에서 안기부로의 변화이다. 80년 4월 14일 최규하 대통령은 공석중인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임명했다. 전 보안사령관은 중앙정보부 부장서리를 겸하면서 기구 및 인원개편 작업은 급속히 추진했다. 5월 6일 중정제도개선위원회는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놓는다. 1안은 해외정보 분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는 방안. 2안은 국내정보 중 수집기능만 유지하고 수사기능은 폐지하는 방안. 3안은 10·26 이전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전 부장서리는 "규모는 2안으로 하되 정신취지는 1안으로 하는 절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박정권 18년동안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주리를 들어온 6국(안전국, 이른바 肉局), 그리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남산지하실이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꼭 1주일만에 상황은 다시 반전되었다. 학원데모가 대규모 가두시위로 확산된 5월 13일, 전두환 부장서리로부터 편제개편 전면중단 지시가 떨어졌다. 이로써 중정이 신군부 쿠데타의 일역을 담당하게 되고, 죽었던 6국은 다시 살아났다. 당초 폐지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던 수사국은 '5·17'조치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 진영에 대한 수사때문에 되살아났다. 그로부터 나흘뒤 5월 17일, 중정에 비상이 걸리고 안전국요원들의 활약이 시작됐다. 5월 27일 미명에 계엄군이 광주를 진압한지 10시간 만에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설치령'을 가결했다. 그리고 광주가 무력진압된 직후인 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나타났다.

#### 안기부 개혁 여전히 과제

세 번째 변화는 김영삼 정권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안기부 개혁조치다. 한겨레신문은 안기부가 정당 및 중앙부처

와 시·도, 구청·경찰서 등 일선기관까지 출입을 재개해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95년 1월 18일자). 또 95년 2월 김덕 통일부총리(전 안기부장)는 94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안기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검토 공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된다. 이 사건들은 안기부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안기부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신설돼 그 활동을 감독하는 상황에도 여전히 막후에서 안기부가 정치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네 번째 변화는 95년으로 34년의 남산시대를 마감하고 내곡동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19명의 부장이 거쳐갔는데, 4년만에 완공된 내곡동으로의 이전에 있어 안기부는 '남산-이문동의 두 집 살림'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 업무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압과 공작의 남산'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안기부'가 될 것을 약속한 것이다.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정보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거듭남을 거듭 밝혔지만 문제는 산적해 있다. 95년 2월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종합무역상사등 민간기업들은 안기부가 출처인 해외정보 대부분에 대해 '낮은 등급' 신뢰도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인즉 안기부에서 현재 해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는 제5국(해외정보국)으로 전체 10국 중 1개국에 불과하며 나머지 9개국은 대부분 국내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력배치도 국내부문에 치중해 주요 외교대상국을 포함한 50여개 국가에 파견돼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해외과전 요원은 2백명 안팎으로 국내의 1개 도지부 단위에 근무하는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얼마전 있었던 김현철씨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구속, 권영해 안기부장을 포함한 이들 3자 비밀회동은 바로 정치공작의 산실인 안기부의 현주소를 드러내주는 사건이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26일(목)  
제 9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 확산

### 감시·해고·테러 ... 민주노총 총력대응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충남 신탄진 소재)의 노동자 탄압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강제잔업과 비인간적인 감시·통제, 부당해고 및 폭력테러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어 왔으며, 이와 관련 25일 현재 해고자 4명이 회사정문 앞에서 열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등은 한국타이어 대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오는 28일 한국타이어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타이어의 실상에 대한 홍보작업과 항의방문, 진상조사단 구성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7월 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조 파괴, 폭력탄압사태 고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 해고자 4명 열흘째 단식농성

현재까지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21명이며, 이 가운데 노조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된 95년 이후의 해고자만 18명에 달한다. 해고자들은 모두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노민주) 회원이며, 특히 95년에는 전구환 씨가 테러를 당해 18주의 진단을 받는 등, 회원들에 대한 폭력이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노민주측은 '96년 해

고자를 도와주던 한 여성노동자가 회사측 고용인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수배자의 아내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민주 활동과 관련해 최근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김 아무개 씨는 "불만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고, 동료끼리도 믿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회사다. 지난해 10월 감사과의 한 노동자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강제잔업을 거부하면, 근무평점을 낮춰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킴으로써 결국 회사에서 내쫓기게 된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 강간, 성추행도 서슴지 않아

지난 16일부터 해고자들의 단식농성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현장 노동자들 사이엔 별다른 동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식농성 시작 이후 회사측에서 각 과별 단체회식과 야유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농성자와 현장노동자 사이를 분리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민주 회원 김 씨는 "회사 정문에 무비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조합원들이 농성장 근처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는 종업원 수가 3천5백여 명에 이르는 대전지역 최대의 사업장으로서, 신탄진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노민주측은 '95, 96년에 걸친 폭력테러사건 및 강간·성추행 사건이 겹·경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강도높은 노동탄압이 무마된 것엔 회사측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번엔 전북지역 비상 국보법 무더기 연행

전북지역의 대학생 30여 명이 무더기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자주혁신대오라는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문규현 신부)에 따르면, 25일 새벽 전북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이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 등으로 연행되었으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전북대 13명, 우석대 6명, 전주대 6명, 원광대 8명 등이다.

명단이 파악된 전북대 출신 연행자들은 유호(농과대학 부학생회장, 94학번) 씨등 전·현직 학생회 간부들이며, 이 중 5명은 군복무중이고, 2명은 졸업후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주혁신대오라는 명칭과 관련해 전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전북총련)측은 "자주혁신대오라는 조직은 실체도 없는 것으로, 경찰의 조작사건"이라고 밝혔다. 전북총련은 한총련 내 온건 NL(민족해방)그룹인 '사람사랑'계열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전북지역에서의 무더기 연행은 9일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 10일 부산지역 대학생 9명, 12일 고려대 '구국선봉대-청년', 20일 한국노동청년연대 등에 이은 6월 들어 5번째 공안사건이다.

## ..... 주요 공판 안내

#### ▶ 6월 26일(목)

조창묵(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문서변조등) 오전10시 9단독 317호 속행  
변성민의 6(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지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선고

##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우리사회에서 부랑인들은 왜 발생하는가, 또 대책은 없는가

지난 6월 중순 한국도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무주거자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그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도시연구소등은 3월 한 달간 복지시설, 청량리역등 지하철 주변에서 벌인 조사 작업 중 대표사례 31개와 95년 7월 조사된 5사례를 포함해 36사례를 연구·분석했다. 우선 한국도시연구소측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랑인이란 말 대신 '무주거자'(Homelessness)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무주거자 90년 이후 증가 추세

96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무주거자는 총 41개 복지시설에 1만3천1백35명이 수용보호되고 있는데, 실제 무주거자는 이보다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숫자도 90년대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무주거자가 되었을까.

조사대상자 36사례 중 특별한 노동의 경험없이 무주거자가 된 사례는 없었으며,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했다. 또 고졸미만의 학력보유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만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게되면서 제대로 보호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주거자의 발생원인은 △경제부문의 변화 △노동능력의 상실 △가정의 해체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경제부문의 변화를 보면 고용악화, 이농후 고용악화, 자영 및 사업실패, 소득불안정과 재산손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 및 질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강제수용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원인이었다. 가정의 해체는 가족성원의 가출과 사망, 아내의 죽음, 아내의 가출 및 이혼, 본인의 가출 등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한국도시연구소측은 "무주거자들이 현재 노동하지 않거나 노동할 의욕이 약하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일하기 싫어하는' '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무주거자가 되었던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고용조건이나 빈곤이 개선되지 않고, 여기에 상실감을 주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삶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 수용일변도 보다는 재활중심으로

이번 연구조사결과 이세영, 김수현(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씨등은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이라고 결론지어졌다. 또 무주거자가 되는 특정한 집단이나 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무주거자를 양산하도록 방치하는 가장 큰 원인을 "질병, 사고, 재해 등에 대한 사회보장책의 미비"에서 찾았다. 가족관계의 문제도 전통윤리의 약화라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가난과 질병이 가족해체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안전망의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즉 무주거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미 발생한 무주거자들을 위해 수용일변도의 정책에서 재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무주거자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차원의 접근의 필요성이다. 시민운동이나 복지운동 관련단체들이 무주거자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사회전체의 관심 환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행사와동정

#### ■ 민교협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 때: 26일 오후2시~ 27일 오후1시  
· 곳: 서울대학교  
· 내용: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심포 「격변기 한국사회와 민교협」(26일 오후2시)/기념식 및 민교협 10년사 출판기념식(26일 오후6시)/제10기 제4차 중앙위원회(27일 오전10시)/제11기 대의원대회(27일 오전11시)

####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헌신예배

· 때: 26일(목) 오후6시30분~8시  
·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최: 기사협(763-9563)

#### ■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 및 제2회 인권피해의 장  
· 때: 27일(금) 오후7시~9시  
· 곳: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 주최: 과거청산국민위(762-4194)

#### ■ 인천지역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 때: 28일(토) 오후2시  
· 곳: 동인천역 광장  
· 문의: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431-8137)

#### ■ 심포지엄 「정보사회의 인권문제」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즈음하여-  
· 때: 30일(월) 오후7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주최: 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 ■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따뜻한 마음을

「부산노동자교육협회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수감된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면회를 오지 못한 채 외롭고 고통스런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전재천 씨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분을 찾는다. 편지나 면회, 영치금과 영치품이 필요하다.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충범 씨를 비롯한 5명은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재천 씨는 현재 주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주소: 부산시 사상구 북부산 우체국 사서함 58호 6501번 전재천

#### ■ 함평기 씨 27일 새벽 출소

심익악기 해고노동자 함평기 씨가 27일 새벽 2년6개월만에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서울지역은 26일 저녁6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출발한다(전해투 744-743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27일(금)  
제 9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 동성애자협회, 성교육 교과서 개정 촉구

2년전 한국사회에서는 최초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선언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국내 동성애자들이 오는 28일 탑골공원에 모여 집회를 갖는다.

이날 집회를 주최하는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동성애자 차별 실태"를 밝히고, 교과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교과서들은 "동성애 등을 성적 문제행동으로 본다"(서울시교육청 발행, <성과 행복> 83쪽), "동성간의 성관계와 같은 불건전한 성문화는 건전한 성문화를 왜곡시키며 AIDS와 같은 무서운 병의 전염경로가 되기도 한다"(같은 책, 85쪽),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AIDS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교육부 발행, <교연> 268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인협은 "세계 심리학회와 정신의학계가 동성애를 더이상 정신이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AIDS가 동성애자들 때문에 전염된다는 정보도 세계 AIDS 연구가 및 보건기구들에 의해 시정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가들이 잘못된 보건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교과서는 동성애적 경향을 가진 청소년들을 성적 변태나 성도착증 환자, AIDS의 주범으로 왜곡함으로써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인협은 현행 성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과서에 "현대사회에 들어서 성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요구되며, 동

성애의 경우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자를 더 이상 정신이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첨가할 것 △성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문적 상담원을 양성·배치할 것 △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AIDS보균자 및 환자의 인권을 보장할 것 등을 제시했다.

95년 6월 26일 결성된 동인협에는 전국의 23개 모임이 소속되어 있다. 이정우 씨는 "국내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 "교과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성애 경향을 갖는 숫자가 8-9%에 이른다"고 말했다.

###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 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여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들이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은 원고들의 경력·전과내용·출소 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며 "보안감호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변사 이승호 씨 장례 치뤄

지난 20일 독립문 역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승호(22·이경, 신문로과출소 근무) 씨 장례식이 26일 오전 성남 화장터에서 치루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이 부검을 통해 '사인은 추락사'라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끝까지 이씨가 타살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남편이 중풍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씨의 어머니 박중숙(45) 씨는 파출부 생활을 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리는 상황에서 의도아들까지 숨겨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하루소식 6월25일자 참조>

### 제2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

- 1부: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
- 2부: 5공하 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문제와 해결과제/ 아랍회 사건 등 피해 증언
- 때: 6월 27일(금) 오후 7시
- 곳: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 주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762-4194)

##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 안기부의 피해자

### 안기부를 뺨도는 피해자들의 한

"권두영 씨는 재판 내내 지나치게 겁을 내면서 어찌 할줄을 몰라했다.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고 나중에는 왜 그렇게 나약하게 행동 하나며 권씨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권 씨 사건은 별 사건도 아니었고 실제로도 그리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1심 구형을 앞두고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었다. 지금 와 생각하면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남는다"

92년 당시 권두영 씨의 변론을 담당했던 임종인 변호사는 5년전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그를 이렇게 회고했다.

권두영씨(당시 64세, 전 민중당 고문), 그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로 92년 8월말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씨와 함께 안기부에 의해 간첩 및 간첩 방조혐의로 구속되었다.

"권 씨는 안기부 발표와 달리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단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로써 북한 상대로 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두 차례 방문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사업 방문에 대해 안기부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김낙중 씨 간첩 사건에 함께 묶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권 씨는 김낙중 씨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안기부는 사건을 크게 부풀리기 위해 이를 묶어 발표하였고 이 과정에서 권 씨가 희생당한 것이다." (임종인 변호사 증언)

93년 1월 15일, 대선의 요란한 잔치는 끝나 김영삼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약 1달여 후, 그 풍요로운 잔치를 위해 희생당해야 했던 권두영 씨는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구치소 감방에서 겨울 내외로 화장실 창살에 목을 매 숨졌다.

"단순한 사업 목적으로 북한을 다녀온 죄 밖에 없는데 나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된 것이 기가 막히다. 간첩죄가 확정돼 자손들에게 대대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 겁난다."

권씨가 가족들에게 자살하기 전날 남긴 마지막 말이였다.

### 억울한 간첩죄에 죽음으로 항변한 권씨

안기부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끌려간 이들의 삶은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진다. 심지어 연행되는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혐의로 연행되는지조차도 모른다.

피의자 연행시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란다 원칙을 안기부 수사관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현 정부들어 안기부추 관계자들은 "과거와 달리 오늘날 안기부가 예전의 인권유린이나 공안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과거 중정, 또는 안기부에서는 인권유린과 공안 조작사건을 자행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인권유린과 공안 조작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재심이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그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아 볼 수 없다.

중정부장 출신 김형욱 씨의 회고록에서 밝혀진 '동백리사건'이나 '인혁당사건' 등은 오늘날 그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간접 확인되고 있다.

또한 73년 발생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74년 유신 반대 활동을 부풀린 민청학련사건등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내지는 공안조작 사건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으며 진실조차 밝혀진 바도 없다.

### 국가 기밀을 위해 피해자가 죄인으로..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안기부의 주장과 달리 인권유린이나 공안사건 조작

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96년 12월 5일 서울 신당동에서 타인의 영장을 제시하는 안기부원에 의해 강제 연행당한 김형찬 씨(26·경희대 수원교정)는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받으며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공포와 두려움끝에 분신자살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안기부는 분신한 김형찬씨에 대해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혐의사실은 이적표현물 소지다. 그러나 김 씨는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이러한 안기부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증언도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필요없다.

오직 안기부의 의지에 따라 피해자가 죄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96년 12월 24일, 김 씨의 가족은 김 씨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안기부원 4인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가해 안기부원 4인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담당 변호인과 내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안기부장을 상대로 가해 수사관의 이름을 비롯한 일체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안기부장은 "국가 기밀상 요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한마디 말로 이를 묵살해 버렸다.

'국가기밀을 위해' 라는 명목하에 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야할 최종 목적이며 가치인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야만스러운 공포 정치, 독재권력의 속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곡동 현인릉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웅장하게 세워진 국가안전기획부. 61년 중정으로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 폭압 기구를 뺨도는 슬한 피해자들의 한맺힌 원한과 그 가족들의 통한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6월 28일(토)  
제 9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한달 동안의 불법감금, 8일 이상의 잠 안재우기, 수시로 밥 굶기, 갖은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문하는 자도 고문받는 자도 짐승이 되었습니다.”

81년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순(5공정치범 명예회복협의회 공동대표) 씨는 이같이 증언했다.

박 씨는 27일 성공회대성당에서 열린 '제2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과거청산국민위 주최)을 통해 80년대 초기 '아람회' '한울회' '오송회' 사건의 진실을 공개했다. 이 세 사건은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며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던 교사, 군인, 경찰, 공무원, 종교인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5공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지목받고 있다.

박 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해 나갔다. “고문에 못이겨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했던 이광웅(오송) 씨는 결국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으며, 박해전(아람) 씨는 유서를 작성했고, 박정석(오송) 씨도 환청과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이재권(아람) 씨는 신장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규호(한울) 씨는 심신이 피폐해져 장기요양 상태에 있다. 박정석, 강상기, 전성원(이상 오송), 황보윤식(아람), 홍성환(한울) 씨 등은 모두 교단에서 쫓겨났다.”

또한 박 씨는 “아람회”의 김남수 대위를 반역죄로 고발했던 안중택 씨는 현재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출세의 길을 달리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인제, 이회창 씨는 각각 ‘아람회’와 ‘한울회’ 사건의 1심 판사로서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었다”며,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당시의 수사관과 법관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 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피해증언록인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들은 책 머리글을 통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올바른 과거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남(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 목사는 ‘5·6공하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의 실제와 진상규명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유공자 보상·배상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국방부는 26일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특전사 1여단장) 씨를 제외한 5·18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

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서훈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이미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한 서훈은 자동적으로 박탈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만이 박탈대상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공헌’ 명목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등)는 27일 「12·12와 5·18학살 정국과 관련해 ‘국가안보’에 대한 공로로 상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반관과 학살에 깊이 개입했다는 물증”이라며, “5·18 관련 서훈을 받은 나머지 75명에 대해서도 서훈을 치탈하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군인연금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창복)도 “국방부의 행위는 과거청산과 역사회복이라는 전국민적 염원을 짓밟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백승현 변호사는 “서훈의 치탈은 정부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심포지엄 「정보사회의 인권문제」

####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즈음하여-

- 때: 6월 30일(월) 오후7시
- 곳: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주최: 천주교 인권위(777-0643)
- 후원: 가톨릭신문사, 평화방송·평화신문
- 발제: 「정보사회의 인권문제」(박문수 연구원) 「주민카드의 올바른 이해」(김준기 내부부 주민과 과장)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김기중 변호사)

## <인권하루소식> 97년 6월분 총목차(896-914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896	6/3	1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경찰, 시위구경하던 시민 방해로 찍어, 두 개골 부서져 입원... 병실까지 찾아가 행패/주요공판안내
		2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②> 국가위원회 설치/주간인권호름(5월 26일-6월 1일)
		3	<인권사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에 대하여(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897	6/4	1	통신에 물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통신단체들의 반응> “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전국연합, 유지용 전경 죽음 애도 성명
		2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광주 정평위, 동티모르 지원사업 활발/원천 철거민 투쟁 마무리, 가수용단지 설치 결정/주요공판안내
898	6/5	1	언론, 또다시 광분- 전경사망 '의도적 오보'...경찰폭력에 침묵
		2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영흥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 생존권 위협
		3	한총련 발표 “프라치 조사과정서 사망했다”/<자료> 한총련 기자회견문
899	6/7	1	연세대 사태 여대생 성추행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김 대통령 퇴진, 보안법 철폐”/전국연합 애도성명, 한총련 자성...투명수사 당부
		2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최종회>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정연순 변호사)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900	6/10	1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자료-천리안에서 삭제당한 전국연합 게시물(주요내용 발췌)
		2	“세계 여성장애인 한자리에” 「빛장」 등 12명 국제포럼 참가/주간인권호름(6월 2일-6월 8일까지)/주요공판안내
		3	<인권사평> 대선주자토론회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했는 장이 되어야” (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901	6/11	1	재개발 지역, 집단폭행에 부녀자 성폭행까지/민변, ‘통신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촉구/박종철 열사 추모비 제막, 물고문 형상화
		2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인권영화 ① <산부인과>- ‘산부인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902	6/12	1	한총련 출범식 빌미,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경찰폭행 증상입은 이철용 씨, 국군통합병원으로 강제이송
		2	부산 국민캠프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자료> 전국연합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한총련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
903	6/13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고려대생 15명 긴급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한총련 ‘대선자금 공개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2	<세계의 인권 14> 자유를 위한 맞섬, 언론인의 대가
904	6/14	1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20명 연행/<현장스케치> 명동성당 한총련 단식농성장 “물 한 통만 들여보내주세요”
		2	5·18 공대위,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열려/매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새책소개-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

### <인권하루소식> 97년 6월분 총목차(896-914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905	6/17	1	전자주민증 코 앞에, 어물쩍 국회통과 우려/주요공판안내
		2	인권협등 유엔 탈식민지위원회에 '동티모르 민족자결권 촉구'/재일동포 전후배상문제 해결해야, 인권협 우도로마를 서명작업/주간인권흐름(6월9일부터 15일까지)
		3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광주여대 교수)
906	6/18	1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악법도, 양심수도 여전/경기여성 임시이사 파견, 현 임원진 전원 승인취소
		2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907	6/19	1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구별은 OK, 차별은 NO/ 남총련 "치사사건 책임지겠다", 이 씨 '프락치' 고백사실 공개/평택노점상 생명위독, 철거과정에서 중화상
		2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김학철(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908	6/20	1	여성단체, 19-20일 국제여성 심포지엄/심포지엄 참석자중 독일발표 요지 "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2	NCC 언론위 북한관련 보도 실태 모니터, 지능적 오보, 통일 가로막는 통일프로그램/전국연합, 기무사 민간인 사찰 관련 책임자 처벌 촉구/인권영화 ⑧- 송가황조 "역사는 그녀들에게 무엇이었나"
909	6/21	1	경찰, 이철용 씨 간병인 출석요구...NCC, 이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한국노동청년연대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구국선봉대-청년' 조직사건, 서울경찰청 발표에 대한 고려대총학생회 반박문
		2	노점상 양승진 씨 뇌사상태...경찰, 동향파악이 우선/새책 소개 『여성, 그리고 노동자』 『꺼지지 않는 자주의 빛으로 살아』
910	6/24	1	한총련 사태 언론보도 비판, 공안보도 극치/부산대등 9명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범민련 사무처장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민족민주열사·희생자 기념실 판매/주요공판안내
		2	<인터뷰> 동티모르 여성 독립운동가 이네스 알메이다 씨 "동티모르 여성, 일본군 위안부와 흡사"/주간인권흐름(6월16일부터 20일까지)
		3	<인권시평> 한총련 사태를 보며-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911	6/25	1	장마시작...철거민 신음 쏟아져, 문정동·산천동 철거민 9가구/탈영 전투경찰 변사체 발견, 유족등 타살주장/평택노점상 양승진 씨 사망, 비상대책위 '살인방화'로 규정
		2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912	6/26	1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확산, 민주노총 총력대응/전북지역 대학생 30명 국보법 무더기 연행/주요공판안내
		2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사회보장책 마련돼야"/행사와 동정
913	6/27	1	동성애자모임, 성교육 교과서 개정촉구/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변사 이승호 씨 장례 치러
		2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 안기부를 뺏도는 피해자들의 한
914	6/28	1	제2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 5공 조작사건 피해자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촉구/국방부, 관련법규 무시하고 전두환 씨 등의 5·18 서훈 박탈 않기로
		2·3	6월 총목차(896-914호)

# 인권하루소식

## 합본 8호 색인

### (제797호 - 제914호)